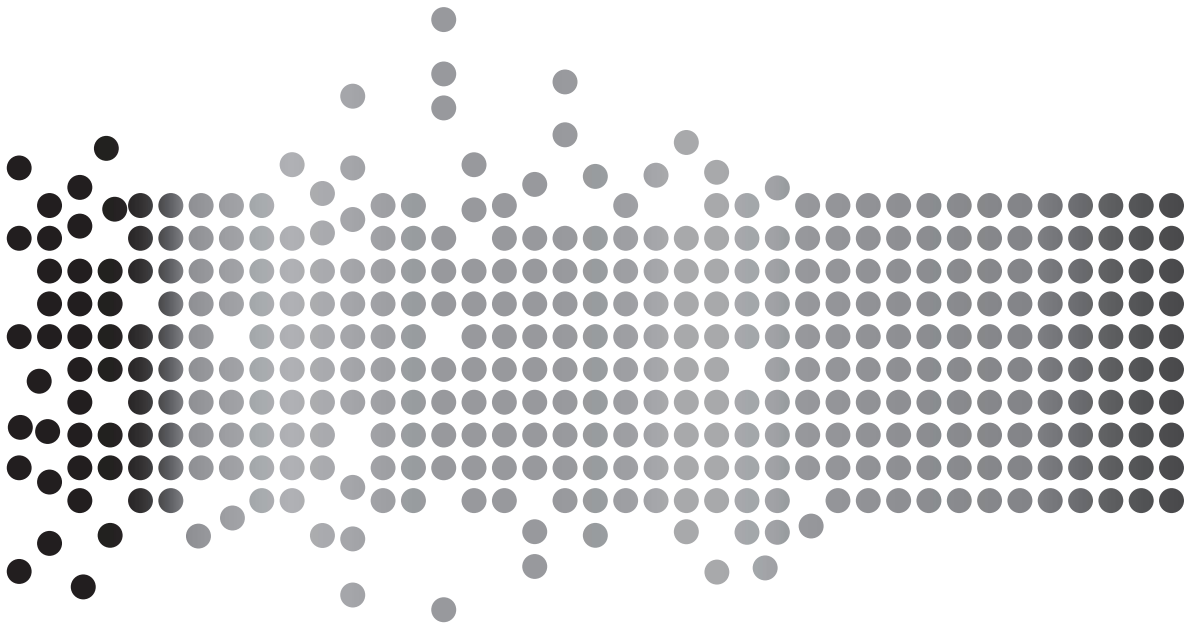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Attribution Analysis of Governmental Expenditure of Social Security and
Other Purposes Toward Soundness of Public Finances of OECD Countries

원종욱 · 임완섭 · 김태은



연구보고서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발 행 일 2012년
저 자 원 중 욱 외
발 행 인 최 병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범신사
가 격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ISBN 978-89-8187-948-8 93330



머리말

한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과정 속에서 취약한 환경 가운데 있는 구성원에 대한 배려 및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귀시키는 정책들은 매우 미진하였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요 및 지원이 대폭 증가되었고 이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 전반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로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복지의 증대는 국가의 재정건성을 악화시키고 이것은 잠재성장력을 약화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시키게 될 것이다. 지속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원 부담, 즉 재정부담 능력범위 안에서의 지출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건복지재정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조세 및 국민 부담 규모와 경제주체별 부담능력이 어떠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형태 및 규모가 경제성장 및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복지지출의 축소 및 증가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 복지 지출은 사회적 상황과 수요에 맞추어 적정 수준으로 증가해야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늘어날 복지재정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부담의 구조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선진복지국가의 국민부담 구조가 복지국가유형

과 시간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OECD 구성 국가들 전반에 대한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그리고 경제주체별 부담능력의 상화 관계 및 인과관계의 특성을 파악한다면 향후 국가의 재정건전성 강화 및 적정 부담능력에 대한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본 연구원의 원종욱 연구위원 책임 하에 본 연구원의 임완섭 전문연구원, 김태은 연구원의 참여로 완성되었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좋은 조언을 해주신 한양대학교 전영준 교수,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박사, 삼성경제연구원 김정근 박사 그리고 조언과 함께 검독을 해주신 본 연구원의 강신욱 박사와 김진수 박사께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목적	16
제3절 연구의 구성	18
제2장 OECD국가의 복지지출과 기타 재정지출간 재정건전성	
기여도분석	21
제1절 기여도분석(Attribution Analysis)	21
제2절 OECD국가의 재정지출과 조세수입간의 격차분석 (균형재정지수분석)	28
제3절 소결	44
제3장 OECD국가의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49
제1절 OECD 국가 유형별 특성	49
제2절 추이와 현황	52
제3절 재정변수요인과 고용구조요인별 Cluster 분석	67
제4절 소결	83
제4장 재정건전성과 재정부담능력	87
제1절 패널분석을 이용한 거시지표의 재정건전성에의 파급효과분석 ..	87
제2절 적정국가부채수준 분석	92
제3절 조세수입의 세목별구성비중과 재정건전성	96
제4절 소결	106

제5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3

부 록 117

표 목차

〈표 1-1〉 OECD국가의 조세제도의 유효세율(Effective rate)	14
〈표 1-2〉 그리스의 재정적자 축소 방안(2011년 예산기준)	15
〈표 2-1〉 가상의 포트폴리오와 가상의 벤치마크포트폴리오 구성내역 ..	26
〈표 2-2〉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수입 및 지출 비중(2007년) ..	35
〈표 2-3〉 재정적자규모와 공공사회지출	36
〈표 2-4〉 상관관계분석 결과	37
〈표 2-5〉 OECD 국가들의 총지출대비 복지지출 비중 및 기타지출 비중과 조세수입 괴리정도(2007년)	38
〈표 2-6〉 OECD 국가 지표 실적의 기여도 분해와 중앙정부 부채규모(2007년)	41
〈표 2-7〉 재정건전성기여도별 국가분류(2007년도 기준)	45
〈표 2-8〉 재정건전성기여도와 국가부채(2007년도 기준)	45
〈표 3-1〉 OECD국가 유형별 분류	50
〈표 3-2〉 국가별 산업별 종사자 비중(2007년)	69
〈표 3-3〉 군집분석 결과(4군집, 2007년): 군집기준	72
〈표 3-4〉 군집분석 결과(4군집, 2007년)-국가기준	73
〈표 3-5〉 군집분석 결과(2000, 2007)-1	74
〈표 3-6〉 군집분석 결과(2000, 2007)-2	75
〈표 3-7〉 군집분석 결과(2000, 2007)-3	76
〈표 4-1〉 패널 데이터 분석 모형 I(고정효과 모형)	89
〈표 4-2〉 패널 데이터 분석 모형 II(고정효과 모형)	90
〈표 4-3〉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및 적정부채비율	95

〈표 4-4〉 GDP대비 정부부채와 세목비중 그리고 공공사회지출과의 상관관계	104
〈표 4-5〉 GDP대비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 그리고 세목비중과의 상관관계	104
〈표 4-6〉 GDP대비 정부부채와 세부 세목과의 상관관계	105
〈표 4-7〉 GDP대비 공공사회지출과 세부 세목과의 상관관계	105
〈표 4-8〉 조세구성 평균의 표준편차와 부채수준	106

그림 목차

[그림 2- 1] 자산배분효과와 종목선정효과	25
[그림 3- 1] 영미형 국가의 정부부채의 추이	53
[그림 3- 2]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영국	53
[그림 3- 3]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미국	54
[그림 3- 4]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캐나다	54
[그림 3- 5]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스위스	55
[그림 3- 6]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호주	55
[그림 3- 7]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뉴질랜드	56
[그림 3- 8]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아일랜드	56
[그림 3- 9] 대륙형 국가의 정부부채의 추이	57
[그림 3-10]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독일	58
[그림 3-11]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프랑스	58
[그림 3-12]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오스트리아	59
[그림 3-13]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벨기에	59
[그림 3-14]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네덜란드	60
[그림 3-15] 북유럽형 국가의 정부부채 추이	61
[그림 3-16]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덴마크	61
[그림 3-17]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스웨덴	62
[그림 3-18]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노르웨이	62
[그림 3-19]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핀란드	63
[그림 3-20] 남유럽형 국가의 정부부채의 추이	63
[그림 3-21]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그리스	64
[그림 3-22]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이탈리아	64

[그림 3-23]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포르투갈	·65
[그림 3-24]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스페인	·65
[그림 3-25]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일본	·66
[그림 3-26]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한국	·67
[그림 3-27]	군집분석 결과 A: 2000	·77
[그림 3-28]	군집분석 결과 A: 2007	·77
[그림 3-29]	군집분석 결과 B: 2000	·78
[그림 3-30]	군집분석 결과 B: 2007	·78
[그림 3-31]	군집분석 결과 C: 2000	·79
[그림 3-32]	군집분석 결과 C: 2007	·79
[그림 3-33]	군집분석 결과 D: 2000	·80
[그림 3-34]	군집분석 결과 D: 2007	·80
[그림 3-35]	군집분석 결과 E: 2000	·81
[그림 3-36]	군집분석 결과 E: 2007	·81
[그림 3-37]	군집분석 결과 F: 2000	·82
[그림 3-38]	군집분석 결과 F: 2007	·82
[그림 3-39]	산포도-2007년 분석B 기준	·83
[그림 4- 1]	국가채무와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93
[그림 4- 2]	OECD국가들의 총조세수입(GDP대비)의 구성 비교 1: 1980년	·97
[그림 4- 3]	OECD국가들의 총조세수입(GDP대비)의 구성 비교 2: 1990년	·98
[그림 4- 4]	OECD국가들의 총조세수입(GDP대비)의 구성 비교 3: 2000년	·99

[그림 4- 5] OECD국가들의 총조세수입(GDP대비)의 구성 비교 4: 2007년	100
[그림 4- 6] OECD국가들의 소득세비중 증가에 따른 정부부채 비중: 1980년	101
[그림 4- 7] OECD국가들의 소득세비중 증가에 따른 정부부채 비중: 1990년	102
[그림 4- 8] OECD국가들의 소득세비중 증가에 따른 정부부채 비중: 2000년	102
[그림 4- 9] OECD국가들의 소득세비중 증가에 따른 정부부채 비중: 2007년	103

부그림 목차

[부그림- 1] OECD국가들의 정부부채·총조세수입·공공사회지출 비교 1: 1980년	117
[부그림- 2] OECD국가들의 정부부채·총조세수입·공공사회지출 비교 2: 1990년	118
[부그림- 3] OECD국가들의 정부부채·총조세수입·공공사회지출 비교 3: 2000년	119
[부그림- 4] OECD국가들의 정부부채·총조세수입·공공사회지출 비교 4: 2007년	120
[부그림- 5] 공공사회지출, 국민부담률, 정부부채, 적정부채수준 비교: 1980	121

[부그림- 6] 공공사회지출, 국민부담률, 정부부채, 적정부채수준 비교: 1990	122
[부그림- 7] 공공사회지출, 국민부담률, 정부부채, 적정부채수준 비교: 2000	123
[부그림- 8] 공공사회지출, 국민부담률, 정부부채, 적정부채수준 비교: 2007	124
[부그림- 9] 북유럽형·영미형 적정부채수준과 국가별 정부부채수준 비교: 1980	125
[부그림-10] 북유럽형·영미형 적정부채수준과 국가별 정부부채수준 비교: 1990	126
[부그림-11] 북유럽형·영미형 적정부채수준과 국가별 정부부채수준 비교: 2000	127
[부그림-12] 북유럽형·영미형 적정부채수준과 국가별 정부부채수준 비교: 2007	128
[부그림-13] 한국, 스웨덴, 프랑스, 영국의 국가부채 및 조세특성별 구성 비교: 2000	129
[부그림-14] 한국, 스웨덴, 프랑스, 영국의 국가부채 및 조세특성별 구성 비교: 2007	129
[부그림-15] 프랑스의 국가부채 및 조세 추이	130
[부그림-16] 스웨덴의 국가부채 및 조세 추이	130
[부그림-17] 영국의 국가부채 및 조세 추이	131
[부그림-18] 그리스 국가부채 및 조세 추이	131
[부그림-19] 한국의 국가부채 및 조세 추이	132

An abstract graphic consisting of a central, irregular, light gray shape with several smaller, darker gray spots and smudges around it, resembling a cloud or a splash of ink.

Abstract

Attribution Analysis of Governmental Expenditure of Social Security and Other Purposes Toward Soundness of Public Finances of OECD Countries

Since after economical crash of southern europe, many schola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OECD have produced many research papers on background and remedies of ill-fated economies of southern europe. Recommendations made by experts and OECD include welfare reform of countries of southern europe especially Greece. Even though welfare reform is one aspect of improving soundness of public finance of these countries, medias in Korea have made efforts to illuminate troubles of welfare states.

Since Korea is in crossroad in development stages of social security system, lessons from southern europe should be analyzed thoroughly not to miss real agenda in welfare and economic crisis. This study analyzes social expenditure of OECD countries by grouping countries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absolute levels, composition, and growth patterns of social expenditures. The attribution analysis methodology of monetary finance is applied to public finance to evaluate share of two sectors in deteriorating soundness of public finance.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복지지출은 인구 및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지출의 수요가 높은 고령층의 인구비중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지만 장래 복지지출을 부담할 미래의 경제주체들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실제 늘어나는 복지지출의 양보다 부담해야 하는 주체들의 감소로 인한 경제주체별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들은 각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 환경에 따라 다양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회안전망으로써 복지제도와 복지확충을 화두로 삼아왔으나, 현재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경제제도 등을 고려한 복지재정의 확대와 이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재정 부담을 검토할 시점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의 복지지출 및 재정부담 구조를 살펴보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지지출과 국가채무 그리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계를 분석한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들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파악해 재정건전성과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OECD국가의 복지지출 및 재정건전성 그리고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을 파악하기 먼저, 정부지출을 복지지출과 기타지출로 구분하고 이 지출항목들과 조세수입간에 기여도분석(Contribution Analysis)을 적용한 격차분석을 OECD 32개에 대해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GDP대비 재정수입과 지출간 괴리가 10% 이상인 국가는 그리스(-15.8%), 이스라엘(-10.0%), 포르투갈(-11.9%), 터키(-10.0%), 헝가리(-10.4%) 등으로 나타났고 프랑스(-8.9%), 영국(-7.9%), 독일(-7.5%), 그리고 미국(-9.0%) 등의 국가도 재정불균형이 심한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은 -2.1%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복지지출과 기타지출 두 부문간 재정건전성기여도가 1%이상 차이나는 국가군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재정건전성기여도별 국가분류(2007년도 기준)

부정적기여도 (1%이상 격차기준)	당해 연도 재정불균형정도 (총지출과 조세수입괴리)		
	10%이상	5~10%미만	5%미만
복지지출 > 기타지출	프랑스,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복지지출 < 기타지출	캐나다,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폴란드, 미국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복지지출 = 기타지출	포르투갈, 영국,	호주, 체코,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덴마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또한 재정건전성에 대해 복지부분의 부정적인 기여도가 크면서 실제 국가부채가 GDP대비 50%가 넘는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한 사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재정건전성기여도와 국가부채(2007년도 기준)

GDP대비 국가부채	당해 연도 재정불균형정도 (총지출과 조세수입과리)		
	10%이상	5~10%미만	5%미만
50%이상	프랑스, 일본,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포르투갈		이탈리아
50%미만	독일, 캐나다, 폴란드, 한국, 멕시코,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호주, 체코,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두 번째로, 이러한 기여도분석을 통한 국가별유형분류를 Cluster 분석으로 확인하고 동시에 고용구조변수를 추가한 상태에서 국가별 유형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재정불균형요인과 고용구조요인이 결합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그리스,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재정불균형이 10%이상이면서 재정불균형에 대한 기여도 면에서는 복지지출 보다는 기타재정지출부분이 더 큰 특징을 갖고 있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민간고용의 비중, 서비스종사자비중, 공업종사자비중 등 고용구조변수를 더 추가함에도 한국, 그리스, 멕시코, 포르투갈은 동일한 국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남유럽 국가 중에서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국가군임에는 틀림이 없다. 멕시코 또한 사회보장 제도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서 기타재정지출

비중이 더 큰 국가에 속하였다.

OECD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재정 및 거시경제변수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패널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후 경제성장률을 최대로 하는 적정부채수준을 추정해 보았다. 추정결과 OECD 16개국의 평균적인 적정부채수준은 GDP대비 54.4%인 것으로, 영미형 국가들의 경우 44.6%, 북유럽 국가의 경우 6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국가별 부채수준을 GDP대비 40%미만, 40~70%, 70% 이상으로 구분하고 OECD 국가들을 조세수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상품세·사회보장기여금의 편차수준으로 분류하여 그 함의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표-3〉 조세구성 평균의 표준편차와 부채수준

편차수준	2000 부채수준			2008 부채수준		
	~40%	40~70%	70%~	~40%	40~70%	70%~
낮음 (1분위)	Germany	Austria Spain Portugal France	Italy Greece Belgium	Germany Finland Spain	Austria Netherlands Portugal Hungary	Italy
중간 (2분위)	Poland Czech Norway	Netherlands Hungary Finland Sweden	Japan	Korea Sweden Czech	Poland France	Belgium Greece Japan
높음 (3분위)	Korea Switzerland US NewZealand Australia	UK Canada Denmark		Switzerland Norway Canada Denmark NewZealand Australia	UK US	

국가부채와 조세수입의 비중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목간 편차와 국가부채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으로 편차수준이 높은 3분위 국가들은 소득세수입비중이 월등히 높은 국가군이

다. 반면에 독일, 핀란드, 그리고 스페인은 3개 세목간 수입비중의 격차가 크지 않은 국가군이다. 이들 국가 모두 2008년 기준 GDP대비 국가부채가 40%이하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결론 및 시사점

기여도 분석결과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복지지출 부분이 기타재정지출보다 상대적 비중이 높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기여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 중에서 이탈리아와 일본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국가부채수준(GDP대비)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스의 경우 복지지출의 비중보다는 기타재정지출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지출의 부정적인 기여도가 기타재정지출의 부정적인 기여도 보다 2%이상 차이나는 국가는 독일(3.28%)뿐이다.

재정불균형이 심한 국가 중에서 복지지출부분의 불균형의 기여도가 큰 국가는 유럽의 대표적인 대륙형국가인 프랑스, 독일과 일본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는 복지지출 보다는 기타지출의 재정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포르투갈은 두 부분 모두 동일하게 재정불균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유럽국가 중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재정불균형정도에서 양호한 수준인 5%미만으로 분류되었고 두 부분간 격차도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 복지부분의 부정적인 기여도가 크면서 실제 국가부채가 GDP대비 50%가 넘는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한 사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군집분석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군집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지출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기타부분의

재정지출과 복지지출간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며,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므로 점진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을 줄여갈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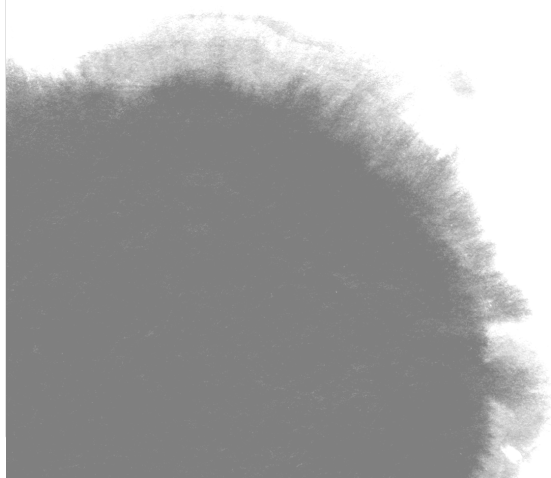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그리고 조세구성 평균의 표준편차와 부채수준으로 국가들을 분류해본 결과 소득세비중이 높은 국가 중에서 국가부채가 높은 국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소득세비중이 높은 것이 반드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볼 때 지금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정부의 지출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으며, 복지지출의 증대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지만 그 증가의 규모를 국가 재정건전성 특히 성장률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 토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재정건전성, 재정부담능력

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복지예산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재정의 확대 및 재정관련 사항은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수명은 1971년 약 62세에서 2008년 약 81세로 약 19세 높아졌고 합계출산율은 82년 2.39명에서 2009년 1.15명으로 빠른 시간동안 급속한 감소세를 보였다. 즉, 복지수요가 높은 고령층 인구 구성비율은 높아지고 장래의 복지지출에 대한 재정을 부담할 미래의 경제주체들은 감소하고 있다. 실제 늘어나는 복지지출의 양적 증가와 함께 재정을 원 부담해야 하는 주체들의 감소로 인해 경제주체별 부담은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구구조적인 변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불안정성의 증대로 인해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았던 근로빈곤층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증가 역시 재정부담능력을 떨어뜨려 복지 제도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경제성장률과 재정 상태는 향후 예상되는 복지재정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각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 환경에

그리고 해당국가의 복지레짐 특성에 따라 복지제도의 효율화(영국, 호주, 뉴질랜드), 재정부담의 다양화(스웨덴), 복지제도의 축소(미국, 스페인, 그리스) 등 다양한 정책방안이 추진되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현재까지는 사회안전망으로써 복지제도의 구축과 압축적인 복지확충을 화두로 삼아왔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즉, 인구구조와 산업 구조, 경제제도 등을 고려한 복지재정의 확대와 이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재정 부담을 검토할 시점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의 복지지출 및 재정부담 구조를 살펴보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인구규모 수준 및 구성의 변화와 사회보장제도 구조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선진국의 복지재정부담의 유형화를 살펴보면 인구학적 요인과 경제구조적 요인 그리고 복지레짐별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선진국에 대하여 복지재정 및 복지재정 부담 현황 및 최근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복지다원주의에 입각하여 복지재정규모를 지속하기 위한 복지주체별 재정부담의 수준을 명시화하고 우리나라의 재정부담구조를 선진국의 구조와 비교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와 자격급여제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OECD Economic Surveys(2011)는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조세순응도가 낮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법인세의 3개 부문에 대해 조세징수효율성¹⁾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의 부가가치세의 징수효율성은 0.51로 OECD평균인 0.71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는

1) 징수효율성(Efficiency of tax collection)= effective rate(유효세율)/statutory rate(법정세율)

0.50, 포르투갈 0.60, 스페인 0.57 등으로 남유럽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징수효율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은 0.78이고 일본은 0.85 그리고 캐나다는 0.96로 매우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사회보장세의 징수효율성은 0.56으로 OECD 평균인 0.63보다 낮다. 이 수준은 같은 남유럽 국가인 스페인 0.60과 포르투갈의 0.6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징수효율성은 0.10으로 OECD 평균인 0.15에 비해 낮다. 스페인의 0.09보다는 높지만 이탈리아의 0.14와 포르투갈의 0.1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징수효율성이 낮은 것은 법정세율은 높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이 수준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부가가치세율은 19%로 OECD평균인 17.35%보다 높다. 그리고 사회보장세율은 28.06%로 이 또한 OECD평균인 22.05%보다 높다. 그리고 법인세율도 25.0%로 OECD평균인 24.09%보다 높다. OECD가 이와 같은 통계를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와 남유럽 국가의 지하경제규모가 크고 조세순응도가 크게 낮다는 것이다. 국가재정이 위협받는 것은 지출이 큰 것도 원인이 되지만 조세수입이 충분하지 않는 것도 크게 기여한다.

그리스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대비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21.3%로 OECD 평균인 19.2%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OECD 국가중에서 지출수준이 낮은 한국, 일본, 터키, 미국 등을 제외하면 유럽의 OECD국가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사회복지지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크게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재정지출을 복지부문과 복지를 제외한 기타지출로 구분하는 경우 어떤 영역이 재정위기에 더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표 1-1〉 OECD국가의 조세제도의 유효세율(Effective rate)

국가	VAT	SSC	Corporate/
호주	0.74	0.63	0.10
벨기에	0.64	0.47	0.10
캐나다	0.96	0.70	0.17
핀란드	0.74	0.76	0.13
프랑스	0.63	0.51	0.08
독일	0.66	0.68	0.10
그리스	0.51	0.56	0.10
이탈리아	0.50	0.69	0.14
일본	0.85	0.75	0.13
한국	0.78	0.56	0.17
네덜란드	0.84	0.80	0.12
포르투갈	0.60	0.64	0.15
스페인	0.57	0.60	0.09
스웨덴	0.79	0.50	0.11
스위스	0.87	0.46	0.39
영국	0.57	0.58	0.13
그리스 제외 19개국 평균	0.71	0.63	0.15

주: 1) 체코,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4개국 통계는 생략되었고 평균에 포함됨

남유럽의 재정위기를 지출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재정수입측면에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출측면에서도 복지지출과 기타지출간의 비중에 따라 국가부채에 대한 기여도가 어떻게 분석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재정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 표는 그리스정부의 재정적자축소방안을 항목별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은 공무원연금과 공공병원에 대한 지출삭감만이 포함되어 있어 복지지출과 기타 재정지출간 재정지출삭감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지는 평가하기 어렵다. 2011년 총 재정적자축소규모는 GDP대비기준으로 5.2%인데 이중에서 공공병원

에 대한 지출삭감분 -0.9%를 제외하면 나머지 항목들은 공공부문개혁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리스정부의 재정적자의 상당부분이 공공부문을 포함한 기타재정지출이 과다해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지출을 사회복지부분과 나머지 기타재정으로 구분하여 정부재정적자에 기여한 상대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2〉 그리스의 재정적자 축소 방안(2011년 예산기준)

구분	내용	유로화(10억)	GDP대비(%)
지출 축소방안	소계	-6.5	-2.9
	2010년 이월감축효과	-1.2	-0.5
	임금과 연금축소	-0.2	-0.1
	운영비감축	-0.3	-0.1
	지방정부재정개혁	-0.5	-0.2
	투자감축	-0.5	-0.2
	공기업개혁	-0.8	-0.4
	병원지출	-2.1	-0.9
	이전지출삭감	-0.5	-0.2
	군비감축	-0.5	-0.2
세입 확충방안	소계	7.9	3.4
	2010년 이월 세입확충효과	1.5	0.7
	기업에 대한 특별부담금 (special levy)	0.7	0.3
	재산세 및 직접세	1.2	0.5
	VAT 및 소비세	1.1	0.5
	탈세방지	1.9	0.8
	기타(환경세, 면허세 등)	1.6	0.7
2011년 감축효과 (총계)		14.3	6.4

자료: OECD Economic Survey-Greece(2011)

제2절 연구의 목적

지금까지 적정 복지지출 수준과 적정 조세부담수준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을 OECD 국가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복지지출과 조세수준 그리고 국가의 채무수준과 주요 거시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할 국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지금까지 복지레짐에 대한 연구는 에스핑엔더슨(1990) 이후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의 경우 복지국가 유형을 3개에서 많게는 6개정도 까지 분류해서 국가별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의 연구방법을 간략히 살펴보면, 유근춘 외(2011)의 연구는 통상적인 복지국가 구분기준에 따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북구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벨기에,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를 대륙형 보수주의 국가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를 영미형 자유주의 국가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을 남유럽형 국가로 나누고 일본과 한국을 하나로 묶은 총 19개국의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사회보장지출, 조세구성, 직접세 대 간접세, 누진세와 역진세, 법인세와 비법인세 등의 분성항목으로 나누어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안종범 외(2011)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복지재정의 규모를 추정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을 경우 복지지출이 야기할 수 있는 장기재정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조세 및 국민부담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김명숙, 1994; 박형수 외, 2004 등). Hinrichs(1966)는 조세구조의 장기변동에 관한

연구에서 개발도상국은 GNP의 15%가 적정 조세부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병호·남상호(2001)의 연구는 1970~1997년의 OECD국가들에 대해 국민부담률을 1인당 GDP,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으로 추정하였다. 나성린·이영(2003)은 1984~2000년의 30개 OECD국가들에 대해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을 1인당 GDP, 국가청렴도, 부양률, 인구수, 분권화지수, 법인세율, 소득세율, 공교육비, 정부의 복지비 지출로 추정하였다. 박형수(2004)는 1982~2002년의 26개 OECD국가들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결정방정식을 추정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ITC지수를 계산하였고, 정의룡 외(2012)의 연구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복지와 재정건전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성원(2009)의 연구는 경제성장률 모형을 활용하여 OECD 회원국의 적정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하였다. 경제모형을 활용하여 경제성장률이 극대화되는 OECD 회원들의 적정국가채무비율을 추계결과를 살펴보면, OECD 선진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56.2%로 추정되었다. OECD 회원국 중 소규모개방경제 10개국의 적정부채 비율은 35.2%로 추계되어 선진국보다 약 21%p 낮게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적용된 경제성장을 최대화 시키는 국가채무비를 도출 방법을 활용하여 적정 정부채무 비율을 계산하였고, 이 지표와 조세수입 및 공공사회지출 등의 주요 지표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이들 변수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추론하였다. 이러한 분석 이전에 기여도 분석을 통해 OECD 국가의 복지와 재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구조의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에서는 재무분석에서 사용되는 수익률기여도분석방법을 적용하여 OECD국가의 재정건전성기여도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그리스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지출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위 <표 1-2>와 같이 그리스 정부가 사회복지지출이 아닌 기타 재정지출에 대한 지출감축방안을 마련한 것은 기타 재정지출로 인해 정부부채가 누적되어 온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만큼 두 영역간 정부부채증가에 기여한 정도를 비교·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를 포함한 남유럽국가와 나머지 유럽국가들 간에 사회복지지출과 기타재정지출간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규모가 달리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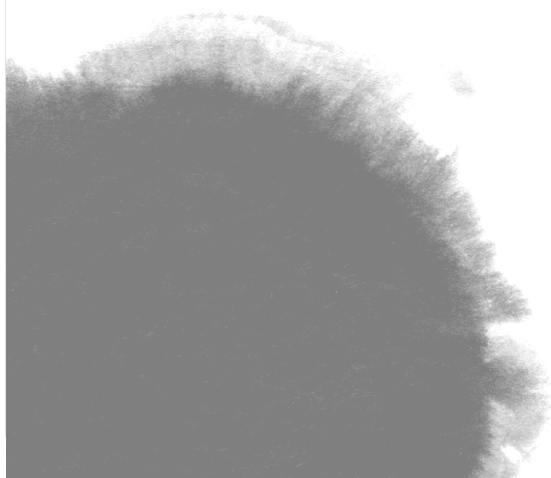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제3장에서는 OECD 국가를 복지체제유형별로 구분하고 국민부담률과 재정건전성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2장에서 분석한 재정건전성기여도분석결과를 기초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국민부담률에 의한 복지체제유형별분류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제4장은 OECD 국가의 적정부채수준을 패널분석으로 도출한 후 주요 세목(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구성비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정 세목의 비중이 크고 작음에 따라 적정부채수준과의 괴리가 어떻게 발생하는 지를 살펴본 것이다.

제5장은 2, 3, 4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2장

OECD국가의 복지지출과 기타 재정지출간 재정건전성 기여도 분석



제2장 OECD국가의 복지지출과 기타 재정지출간 재정건전성 기여도분석

그리스를 포함한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사회복지지출과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과도한 사회복지지출이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공적연금지출이 GDP대비 12%에 달하고 공공보건의지출은 GDP대비 6%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남유럽 관련 OECD의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에 따르면 재정적자감축노력에 복지지출을 제외한 공공부문을 포함한 기타 재정지출부분이 상당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지출 중 복지지출과 기타지출을 구분하여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여도는 부정적인 기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적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재무분석에서 자산배분과 종목선정에 따른 수익률분해에 사용하는 기여도분석(Attribution Analysis)방법을 차용하여 시도해 보았다.

제1 절 기여도분석(Attribution Analysis)

기여도분석은 재무분석에서 사용하는 수익률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방법이다. 기여도분석은 정확하게는 Arithmetic Attribution을 의미하여 최

초 고안자의 이름을 따라 Brinson model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재무분석에서의 기여도분석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벤치마크 수익률과 비교하여 초과수익률을 자산배분(Asset Allocation)에 의한 효과와 특정 상품선택(Security or Stock Selection)효과 그리고 이 상호작용(Interaction)효과 등으로 분리하고 있다.

포트폴리오수익률 r 은 각 자산군별 수익률 r_i 에 자산군별 투자비중 w_i 을 곱한 값이다.

$$\text{포트폴리오 수익률: } r = \sum_{i=1}^n w_i \times r_i \quad 1)$$

벤치마크수익률은 포트폴리오수익률과 비교대상이 되는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며 전체수익률 b 는 개별자산수익률 b_i 에 개별자산에 대한 투자비중 W_i 를 곱해서 구해진다.

$$\text{벤치마크수익률: } b = \sum_{i=1}^n W_i \times b_i \quad 2)$$

Brinson model에 따르면 산술적추가수익률(arithmetic excess return)인 $(r - b)$ 는 투자자가 자산배분(asset allocation)과 종목선택(security selection)을 통해 추가수익을 실현한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다. 투자자는 각 종목별로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와는 다른 자산비중을 배분하는 동시에 벤치마크포트폴리오와는 다른 종목선정을 통해 추가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투자자의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판단에 의해 특정 자산군에 투자비중을 높이거나 낮추고 특정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1. 자산배분효과 측정을 위한 가상의 자산배분명목포트폴리오수익률 (semi-notional fund return)

가상의 펀드수익률은 자산배분효과를 관찰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벤치마크수익률공식에서 실제 벤치마크자산배분비중(W_i)대신 실제 포트폴리오의 자산배분비중(w_i)를 적용하였을 경우의 수익률이다.

$$\text{자산배분 명목포트폴리오수익률: } b_s = \sum_{i=1}^n w_i \times b_i \quad 3)$$

따라서 자산배분효과는 명목펀드수익률에서 벤치마크수익률을 뺀 값으로 아래 식 4)와 같이 표현된다.

$$b_s - b = \sum_{i=1}^n w_i \times b_i - \sum_{i=1}^n W_i \times b_i = \sum_{i=1}^n (w_i - W_i) \times b_i \quad 4)$$

2. 종목선정효과(Security selection)

종목선정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률기여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산배분명목펀드와 유사하게 종목선정명목펀드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해야 한다. 실제로 투자된 수익률에 벤치마크 자산배분비중을 곱해주면 종목선정명목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계산된다.

$$r_s = \sum_{i=1}^n W_i \times r_i \quad 5)$$

종목선정에 의한 수익률기여도는 종목선정명목포트폴리오수익률에서 실제포트폴리오수익률을 빼주면 구해진다.

$$r_s - r_b = \sum_{i=1}^n W_i \times r_i - \sum_{i=1}^n W_i \times b_i = \sum_{i=1}^n W_i \times (r_i - b_i) \quad 6)$$

3.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자산배분효과와 종목선정효과는 실제 투자펀드의 수익률과 벤치마크수익률과의 차이를 모두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3의 효과인 상호작용효과 또는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Brinson model은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효과는 종목선정효과와 자산배분효과를 더한 것이 된다.

아래 식 7)에서 첫 번째 괄호안은 종목선정효과이며 두 번째 괄호는 자산배분효과 그리고 마지막 항은 상호작용효과가 된다. 상호작용효과가 더해져야만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벤치마크수익률간의 차이가 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r_s - b) + (b_s - b) + (r - r_s - b_s + b) = r - b \quad 7)$$

상호작용효과를 다시 정리하면 아래 식 8)과 같다.

$$\begin{aligned} r - r_s - b_s + b &= \sum_{i=1}^n w_i \times r_i - \sum_{i=1}^n W_i \times r_i - \sum_{i=1}^n w_i \times b_i + \sum_{i=1}^n W_i \times b_i \\ &= \sum_{i=1}^n (w_i - W_i) \times (r_i - b_i) \end{aligned} \quad 8)$$

이와 같은 기여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2-1] 자산배분효과와 종목선택효과

		종목선택	
		Actual	Passive
자산 배분	Actual	IV사분면 포트폴리오 수익률 $r = \sum_{i=1}^n w_i \times r_i$	II사분면 자산배분명목 수익률 $b_s = \sum_{i=1}^n w_i \times b_i$
	Passive	III사분면 종목선택명목수익률 $r_s = \sum_{i=1}^n W_i \times r_i$	I 사분면 벤치마크수익률 $b = \sum_{i=1}^n W_i \times b_i$

자료: 『Practical Portfolio Performance Measurement and Attribution』, Carl R. Bacon, John Wiley & Sons, Ltd 2004

따라서 자산배분에 의한 기여도는 (II 사분면 - I 사분면)이 되고 종
목선택의 기여도는 (III 사분면 - I 사분면)이 된다. 그리고 상호작용효과
는 (IV사분면 - III사분면 - II 사분면 + I 사분면)이 된다.

4. 기여도 분석의 예시

Brinson model에 의한 수익률 기여도분석을 가상의 포트폴리오에 적
용하여 계산을 해 보았다.

가상의 포트폴리오는 영국주식, 일본주식, 미국주식 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자산별 포트폴리오 투자비중, 벤치마크배분비중, 포트폴리오 수
익률, 그리고 벤치마크 수익률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 가상의 포트폴리오와 가상의 벤치마크포트폴리오 구성내역

	포트폴리오 비중(%)	벤치마크 비중(%)	포트폴리오 수익률(%)	벤치마크 수익률 (%)
영국주식	40	40	20	10
일본주식	30	20	-5	-4
미국주식	30	40	6	8
합계	100	100	8.3	6.4

자료: 『Practical Portfolio Performance Measurement and Attribution』, Carl R. Bacon, John Wiley & Sons, Ltd 2004

위 자료를 이용하여 포트폴리오 수익률, 자산배분명목포트폴리오수익률, 종목선정명목포트폴리오수익률 등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① 포트폴리오 수익률(r)

$$r = 40\% \times 20\% + 30\% \times -5\% + 30\% \times 6\% = 8.3\%$$

② 벤치마크 수익률(b)

$$b = 40\% \times 10\% + 20\% \times -4\% + 40\% \times 8\% = 6.4\%$$

③ 자산배분명목포트폴리오수익률(b_s)

$$b_s = 40\% \times 10\% + 30\% \times -4\% + 30\% \times 8\% = 5.2\%$$

④ 종목선정명목포트폴리오수익률(r_s)

$$r_s = 40\% \times 20\% + 20\% \times -5\% + 40\% \times 6\% = 9.4\%$$

이와 같은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자산배분기여도, 종목선정기여도, 상호작용기여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⑤ 자산배분기여도($b_s - b$)

$$b_s - b = 5.2\% - 6.4\% = -1.2\%$$

⑥ 종목선정기여도($r_s - b$)

$$r_s - b = 9.4\% - 6.4\% = 3.0\%$$

⑦ 상호작용효과($r - r_s - b_s + b$)

$$r - r_s - b_s + b = 8.3\% - 9.4\% - 5.2\% + 6.4\% = 0.1\%$$

포트폴리오수익률 8.3%는 벤치마크수익률 6.4%에 비해 1.9% 더 높은 초과수익률을 달성한 것이다. 초과달성수익률 1.9%는 자산배분기여분 -1/2%, 종목선정기여분 3.0%, 그리고 상호작용기여분 0.1%를 더한 값이다. 즉, 초과수익률은 종목선정에서 3.0%로 가장 크게 기여하였으나 자산배분비중을 잘못하여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고 종목선정과 자산배분의 상호작용에 의한 기여분은 0.1%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2절 OECD국가의 재정지출과 조세수입간의 격차분석 (균형재정지수분석)

국가의 재정문제는 지출과 수입의 두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지출이 과다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수입이 충분치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가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높은 지출을 많은 조세수입으로 충당하는 국가와 적은 지출을 적은 조세수입으로 균형을 이루는 국가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형태는 적정수준 또는 과도한 수준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의 조세수입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국가부채가 GDP대비 몇 %인가는 최종적인 결과이지만 그 원인은 조세수입이 부족한 것이 더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지출이 과다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분석에서 사용하는 기여도분석(Contribution Analysis)을 재정지출과 조세수입간의 격차분석에 적용해 보았다. 기여도분석의 구성을 재정지출과 조세수입간의 격차분석에 적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부분별 재정지출배분비중에 대한 의사결정

국가재정에서 소요되는 지출을 복지지출과 나머지 지출로 구분하고 이들 지출에 대한 비중은 정책적 의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가정한다. 국가재정에서 소요된 복지지출비중을 편의상 w_1 으로 표기하고 나머지 지출을 기타지출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지출비중을 w_2 로 표기하였다. 재무분석에서 각 자산군에 대한 투자비중은 투자자의 의지가 반영된 의사결정인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출에 대한 비중 또한 정책당국의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가정해 보았다.

$$\frac{\text{복지지출비}}{\text{총지출비}} = w_1 \quad \frac{\text{기타지출}}{\text{총지출비}} = w_2 \quad 10)$$

2. 조세수입과의 격차에 대한 의사결정

재무분석에서 포트폴리오수익률을 r 로 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흑자재정인 경우 조세수입과 지출간의 격차가 클수록 그리고 적자재정인 경우 격차가 적을수록 균형재정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r 을 균형재정지수로 정의하였다.

재무분석의 기여도분석과 동일하게 균형재정지수산정에서도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조세수입과 재정지출에 반영된 결과가 균형재정지수로 계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국가마다 조세환경과 조세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환경에 의해 세율 등을 포함한 세입을 결정하는 변수가 결정된다. 재정지출 역시 국가의 정치 및 경제환경에 의해 좌우되므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입과 세출의 격차를 복지부문과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각의 격차는 균형재정지수를 결정하는 변수로 계산하였다.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를 세입과 세출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세출은 다시 복지부문지출과 나머지 지출부문으로 세분해서 분석하였다.

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뺀 수치를 조세수입GDP비중으로 다시 나눈 것을 복지지출부문균형재정의 실적으로 보고 r_1 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조세수입GDP비중에서 나머지 재정지출항목들을 기타지출로 표기하고 기타지출의 GDP비중을 뺀 수치를 조세수입GDP비중으로 나눈 것을 기타지출부문균형재정의 실적인 r_2 로 표기하였다.

$$\frac{\text{조세수입 } GDP\text{비중} - \text{복지지출 } GDP\text{비중}}{\text{조세수입 } GDP\text{비중}} = r_1 \quad 11)$$

$$\frac{\text{조세수입 } GDP\text{비중} - \text{기타지출 } GDP\text{비중}}{\text{조세수입 } GDP\text{비중}} = r_2 \quad 12)$$

재무분석에서 r 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나 조세수입과 지출간의 격차 또는 균형재정분석에서는 균형재정의 실적을 가늠하기 위한 지수로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3. 총지출의 조세수입과의 격차(균형재정지수)

재무분석사례에서 포트폴리오의 총수익률은 각 자산별 비중에 자산별 수익률을 곱해서 구해진다. 이와 동일한 논리로 재정지출의 비중에 부문별 균형재정지수인 r_1 과 r_2 를 각각 곱하면 전체 재정지출의 균형재정지수(r)가 계산된다.

$$r = w_1 r_1 + w_2 r_2 \quad 13)$$

4. OECD평균을 이용한 벤치마크 재정균형지수계산

재무분석에서 포트폴리오의 초과실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크와의 비교가 필요한 것 과 같은 논리로 본 연구에서는 OECD평균을 벤치마크로 사용하였다.

① OECD평균 부문별 재정지출비중

OECD 평균 부문별 재정지출 비중을 W_1 과 W_2 로 각각 표기하였다.

$$\frac{OECD평균복지지출비}{OECD평균총재정지출비} = W_1 \quad \frac{OECD평균기타지출}{OECD평균총재정지출비} = W_2 \quad 14)$$

② OECD평균 균형재정지수

$$\frac{OECD평균조세수입GDP비중 - OECD평균복지지출GDP비중}{OECD평균조세수입GDP비중} = b_1 \quad 15)$$

$$\frac{OECD평균조세수입GDP비중 - OECD평균기타지출GDP비중}{OECD평균조세수입GDP비중} = b_2 \quad 16)$$

③ OECD평균총균형재정지수

OECD평균을 벤치마크로 설정하였으므로 벤치마크 총재정균형지수 b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 = W_1 b_1 + W_2 b_2 \quad 17)$$

④ 재정지출비중에 따른 균형재정효과

총재정균형지수는 복지지출에 대한 비중과 기타지출에 대한 비중이 각각 곱해져 구해진다. 따라서 재정지출비중에 의한 효과만을 분리하여 측정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비중은 특정 국가의 재정지출비중(복지지출

vs 기타지출)을 사용하고 재정지수는 OECD평균 균형재정지수를 사용하여 명목재정균형지수가 계산된다.

$$b_s = \sum_{i=1}^n w_i \times b_i \quad (18)$$

재무분석의 경우와 동일하게 재정지출비중에 의한 균형재정효과는 명목재정균형지수에서 OECD 평균총균형재정지수를 빼면 구해진다.

$$b_s - b = \sum_{i=1}^n w_i \times b_i - \sum_{i=1}^n W_i \times b_i = \sum_{i=1}^n (w_i - W_i) \times b_i \quad (19)$$

재정지출비중에 의한 효과는 상대적인 규모 즉, 두 비중간의 편차에 따라 전체 총균형재정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 효과는 전체 재정이 균형재정인지, 적자재정인지, 또는 흑자재정인지에 따라 그 효과는 달리 계산된다. 균형재정인 경우 재정지출비중의 편차가 크면 균형재정지수의 절대값이 작아진다. 흑자재정인 경우에는 재정지출비중의 편차가 크면 절대값이 오히려 커진다.

⑤ 조세수입수준에 의한 균형재정효과

조세수입명목재정균형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r_s = \sum_{i=1}^n W_i \times r_i \quad (20)$$

조세수입편차에 의한 균형재정기여도는 실제재정균형재정지수에서 명목균형재정지수를 빼주면 구해진다.

$$r_s - b = \sum_{i=1}^n W_i \times r_i - \sum_{i=1}^n W_i \times b_i = \sum_{i=1}^n W_i \times (r_i - b_i) \quad (21)$$

⑥ 재정지출비중 및 조세수입수준의 상호작용효과

재무분석과 동일하게 총재정균형지수는 재정지출의 비중의 상대적 규모(가중치)에서 발생하는 부분과 조세수입수준에 의한 부분이 같이 작용하여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begin{aligned} r - r_s - b_s + b &= \sum_{i=1}^n w_i \times r_i - \sum_{i=1}^n W_i \times r_i - \sum_{i=1}^n w_i \times b_i + \sum_{i=1}^n W_i \times b_i \\ &= \sum_{i=1}^n (w_i - W_i) \times (r_i - b_i) \quad (22) \end{aligned}$$

5. OECD국가의 세입과 세출

조세수입의 GDP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48.9%이며 스웨덴은 47.4%로 그 다음으로 높은 국가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가 43%대로 그 다음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이슬란드가 41%대로 세 번째로 높은 국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조세수입의 GDP대비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로 17.7%에 불과하다. 터키, 한국, 일본, 스위스, 미국,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등이 20%대로 비중이 낮은 국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공공사회지출의 GDP대비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28.4%이며 25%이상인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다. 20%이상인 국가는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등이다. 복지지출을 제외한 기타지출의 GDP대비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로 3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5%가 넘는 국가는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등이다.

공공사회지출과 기타지출을 합친 총정부재정지출의 GDP대비비중과 조세수입의 GDP대비비중과의 격차인 재정적자규모의 GDP대비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그리스로 -15.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스 외에 10%이상인 국가는 헝가리, 이스라엘, 포르투갈, 터키 등이 포함된다. 6%이상인 국가로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아이슬란드,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이 포함된다. 당해연도 재정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국가는 노르웨이로 흑자재정인 3.3%를 보이고 있으며 룩셈부르크도 -0.6%로 거의 균형재정을 보이고 있다. 조세수입의 GDP비중과 공공사회지출의 상대적 규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세수입의 GDP비중 상위 10개국의 공공사회지출의 상대적 규모는 거의 양(+)으로 공공사회지출이 기타지출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수입 및 지출 비중(2007년)

국가(2007)	조세수입 /GDP (A)	공공사회지출 /GDP (b1)	기타지출 /GDP (b2)	정부총지출/GDP (B=b1+b2)	A-B (적자규모)
호주	29.4	16.0	17.3	33.3	-3.9
오스트리아	41.8	26.4	22.2	48.6	-6.8
벨기에	43.6	26.3	21.9	48.3	-4.6
캐나다	33.0	16.9	22.5	39.4	-6.4
체코	37.3	18.8	22.2	41.0	-3.8
덴마크	48.9	26.1	24.7	50.8	-1.9
에스토니아	31.4	13.0	21.0	34.0	-2.6
핀란드	43.0	24.8	22.6	47.4	-4.5
프랑스	43.7	28.4	24.2	52.6	-8.9
독일	36.0	25.2	18.4	43.5	-7.5
그리스	31.8	21.3	26.3	47.6	-15.8
헝가리	40.3	22.9	27.8	50.7	-10.4
아이슬란드	40.6	14.6	27.7	42.3	-1.6
아일랜드	31.0	16.3	20.3	36.6	-5.7
이스라엘	36.3	15.5	30.7	46.3	-10.0
이탈리아	43.4	24.9	22.8	47.6	-4.2
일본	28.3	18.7	17.2	35.9	-7.6
한국	26.5	7.6	21.1	28.7	-2.1
룩셈부르크	35.6	20.6	15.6	36.3	-0.6
멕시코	17.7	7.2	13.3	20.5	-2.7
네덜란드	38.7	20.1	25.2	45.3	-6.5
뉴질랜드	34.9	18.4	20.4	38.8	-3.9
노르웨이	43.6	20.8	19.5	40.3	3.3
폴란드	34.8	19.8	22.4	42.2	-7.4
포르투갈	32.5	22.5	21.8	44.4	-11.9
슬로바키아	29.4	15.7	18.5	34.2	-4.8
슬로바니아	37.7	20.3	22.2	42.5	-4.8
스페인	37.2	21.6	17.6	39.2	-2.0
스웨덴	47.4	27.3	23.6	51.0	-3.6
스위스	28.9	18.5	13.8	32.3	-3.4
터키	24.1	10.5	24.1	34.5	-10.5
영국	36.0	20.5	23.3	43.9	-7.9
미국	27.9	16.2	20.7	36.8	-9.0

공공사회지출의 규모와 정부배정적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2007년 당 해연도 재정적자가 GDP대비 10%를 넘는 국가 중에서 공공사회지출이

나머지 기타정부지출보다 큰 국가는 포르투갈이 유일하다. 그러나 그 규모는 0.7%로 두 부문간 규모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2007년 당해 연도 정부재정적자의 GDP대비비중이 5%를 넘는 15개 국가중에서 공공사회지출의 GDP대비 비중이 기타 정부지출의 GDP대비비중 보다 큰 국가는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3개 국가에 불과하다.

〈표 2-3〉 재정적자규모와 공공사회지출

국가	조세수입 /GDP (A)	공공사회지출 /GDP (B)	기타지출 /GDP (C)	정부재정적자 D=A-B-C	공공사회지출의 상대적 규모(B-C)
아일랜드	31	16.3	20.3	-5.7	-4
캐나다	33	16.9	22.5	-6.4	-5.6
네덜란드	38.7	20.1	25.2	-6.5	-5.1
오스트리아	41.8	26.4	22.2	-6.8	4.2
폴란드	34.8	19.8	22.4	-7.4	-2.6
독일	36	25.2	18.4	-7.5	6.8
일본	28.3	18.7	17.2	-7.6	1.5
영국	36	20.5	23.3	-7.9	-2.8
프랑스	43.7	28.4	24.2	-8.9	4.2
미국	27.9	16.2	20.7	-9	-4.5
이스라엘	36.3	15.5	30.7	-10	-15.2
헝가리	40.3	22.9	27.8	-10.4	-4.9
터키	24.1	10.5	24.1	-10.5	-13.6
포르투갈	32.5	22.5	21.8	-11.9	0.7
그리스	31.8	21.3	26.3	-15.8	-5

6. 균형재정지수와 거시변수와의 상관관계분석

균형재정지수와 관련된 $w1r1$ 와 $w2r2$ 즉, 복지지출의 조세수입과의 격차와 기타지출의 조세수입과의 격차 등이 거시변수와의 연관성이 어떤지를 단순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복지지출

의 조세수입과의 격차를 나타내는 $w1r1$ 과 GDP대비 정부부채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고용대비 자영업자의 비중 역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는 파악할 수 없지만, 직관적으로 볼 때 정부부채의 비중이 클 때 그리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을 때 균형재정 지수인 r 에 대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인구대비 민간고용수준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고용대비 서비스종사자의 수도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고용대비 공업종사자의 비중은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기타지출의 조세수입과의 격차를 나타내는 $w2r2$ 의 경우도 $w1r1$ 의 상관관계수 부호와 방향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w1r1$ 과 $w2r2$ 의 상관관계 계수 값은 무려 0.7에 달하여 두 변수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4〉 상관관계분석 결과

변수	$w1r1$	$w2r2$	$debt_gdp$	r_sel1	r_cem	r_ser1	r_ind1
$w1r1$	1.000	0.669**	-0.222**	-0.308**	0.267**	0.280**	-0.194**
$w2r2$	0.669**	1.000	-0.183**	-0.253**	0.288**	0.185**	-0.094*
$debt_gdp$	-0.222**	-0.183**	1.000	0.089*	-0.305**	0.096**	-0.048
r_sel1	-0.308**	-0.253**	0.089*	1.000	-0.548**	-0.710**	0.000
r_cem	0.267**	0.288**	-0.305**	-0.548**	1.000	0.434**	-0.083*
r_ser1	0.280**	0.185**	0.096**	-0.710**	0.434**	1.000	-0.584**
r_ind1	-0.194**	-0.094*	-0.048	0.000	-0.083**	-0.584**	1.000

주: sig. * < 0.1, ** < 0.05, *** < 0.01

위의 변수들은 향후 논의될 군집분석에서 개체(국가)들을 유형화 시킬 변인들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위 변수들 외의 주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부록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표 2-5〉 OECD 국가들의 총지출대비 복지지출 비중 및 기타지출 비중과 조세수입
과리정도 (2007년)

국가(2007)	구분	총지출대비(wi)	OECD평균 (wi): Wi	조세수입과리 정도 (ri)	OECD평균 (ri): bi
호주	1.복지	48.0%	47.4%	45.6%	44.9%
	2.기타	52.0%	52.6%	41.2%	40.0%
	합계	100.0%	100.0%	86.8%	84.9%
오스트리아	1.복지	54.5%	47.4%	36.8%	44.9%
	2.기타	45.5%	52.6%	46.9%	40.0%
	합계	100.0%	100.0%	83.7%	84.9%
벨기에	1.복지	54.4%	47.4%	39.7%	44.9%
	2.기타	45.6%	52.6%	49.8%	40.0%
	합계	100.0%	100.0%	89.4%	84.9%
캐나다	1.복지	42.7%	47.4%	48.9%	44.9%
	2.기타	57.3%	52.6%	31.8%	40.0%
	합계	100.0%	100.0%	80.6%	84.9%
Czech Rep.	1.복지	44.2%	47.4%	49.6%	44.9%
	2.기타	55.8%	52.6%	40.3%	40.0%
	합계	100.0%	100.0%	89.8%	84.9%
Denmark	1.복지	51.3%	47.4%	46.6%	44.9%
	2.기타	48.7%	52.6%	49.5%	40.0%
	합계	100.0%	100.0%	96.1%	84.9%
Estonia	1.복지	37.8%	47.4%	58.6%	44.9%
	2.기타	62.2%	52.6%	33.3%	40.0%
	합계	100.0%	100.0%	91.9%	84.9%
Finland	1.복지	52.6%	47.4%	42.2%	44.9%
	2.기타	47.4%	52.6%	47.4%	40.0%
	합계	100.0%	100.0%	89.6%	84.9%
France	1.복지	54.3%	47.4%	35.0%	44.9%
	2.기타	45.7%	52.6%	44.6%	40.0%
	합계	100.0%	100.0%	79.5%	84.9%
Germany	1.복지	57.8%	47.4%	30.2%	44.9%
	2.기타	42.2%	52.6%	49.1%	40.0%
	합계	100.0%	100.0%	79.3%	84.9%

국가(2007)	구분	총지출대비(wi)	OECD평균 (wi): Wi	조세수입과리 정도 (ri)	OECD평균 (ri): bi
Greece	1.복지	45.7%	47.4%	33.0%	44.9%
	2.기타	54.3%	52.6%	17.4%	40.0%
	합계	100.0%	100.0%	50.5%	84.9%
Hungary	1.복지	45.9%	47.4%	43.1%	44.9%
	2.기타	54.1%	52.6%	31.2%	40.0%
	합계	100.0%	100.0%	74.3%	84.9%
Iceland	1.복지	34.5%	47.4%	64.1%	44.9%
	2.기타	65.5%	52.6%	31.9%	40.0%
	합계	100.0%	100.0%	96.0%	84.9%
Ireland	1.복지	44.3%	47.4%	47.3%	44.9%
	2.기타	55.7%	52.6%	34.4%	40.0%
	합계	100.0%	100.0%	81.7%	84.9%
Israel	1.복지	34.5%	47.4%	57.2%	44.9%
	2.기타	65.5%	52.6%	15.2%	40.0%
	합계	100.0%	100.0%	72.4%	84.9%
Italy	1.복지	51.9%	47.4%	42.7%	44.9%
	2.기타	48.1%	52.6%	47.5%	40.0%
	합계	100.0%	100.0%	90.2%	84.9%
Japan	1.복지	51.7%	47.4%	34.0%	44.9%
	2.기타	48.3%	52.6%	39.3%	40.0%
	합계	100.0%	100.0%	73.3%	84.9%
Korea	1.복지	26.4%	47.4%	71.5%	44.9%
	2.기타	73.6%	52.6%	20.5%	40.0%
	합계	100.0%	100.0%	92.0%	84.9%
Luxembourg	1.복지	57.1%	47.4%	42.1%	44.9%
	2.기타	42.9%	52.6%	56.2%	40.0%
	합계	100.0%	100.0%	98.2%	84.9%
Mexico	1.복지	37.3%	47.4%	59.4%	44.9%
	2.기타	62.7%	52.6%	25.3%	40.0%
	합계	100.0%	100.0%	84.7%	84.9%
Netherlands	1.복지	44.4%	47.4%	48.1%	44.9%
	2.기타	55.6%	52.6%	34.9%	40.0%
	합계	100.0%	100.0%	83.1%	84.9%

국가(2007)	구분	총지출대비(wi)	OECD평균 (wi): Wi	조세수입과리 정도 (ri)	OECD평균 (ri): bi
New Zealand	1.복지	46.7%	47.4%	47.4%	44.9%
	2.기타	53.3%	52.6%	41.5%	40.0%
	합계	100.0%	100.0%	88.8%	84.9%
Norway	1.복지	50.6%	47.4%	52.3%	44.9%
	2.기타	49.4%	52.6%	55.2%	40.0%
	합계	100.0%	100.0%	107.5%	84.9%
Poland	1.복지	46.9%	47.4%	43.1%	44.9%
	2.기타	53.1%	52.6%	35.6%	40.0%
	합계	100.0%	100.0%	78.7%	84.9%
Portugal	1.복지	51.4%	47.4%	30.6%	44.9%
	2.기타	48.6%	52.6%	32.7%	40.0%
	합계	100.0%	100.0%	63.4%	84.9%
Slovak Rep.	1.복지	45.7%	47.4%	46.7%	44.9%
	2.기타	54.3%	52.6%	37.0%	40.0%
	합계	100.0%	100.0%	83.7%	84.9%
Slovenia	1.복지	47.8%	47.4%	46.2%	44.9%
	2.기타	52.2%	52.6%	41.1%	40.0%
	합계	100.0%	100.0%	87.3%	84.9%
Spain	1.복지	55.1%	47.4%	42.0%	44.9%
	2.기타	44.9%	52.6%	52.6%	40.0%
	합계	100.0%	100.0%	94.7%	84.9%
Sweden	1.복지	53.6%	47.4%	42.3%	44.9%
	2.기타	46.4%	52.6%	50.1%	40.0%
	합계	100.0%	100.0%	92.4%	84.9%
Switzerland	1.복지	57.3%	47.4%	35.9%	44.9%
	2.기타	42.7%	52.6%	52.2%	40.0%
	합계	100.0%	100.0%	88.1%	84.9%
UK	1.복지	45.8%	47.4%	42.9%	44.9%
	2.기타	54.2%	52.6%	35.2%	40.0%
	합계	100.0%	100.0%	78.2%	84.9%
US	1.복지	44.3%	47.4%	41.9%	44.9%
	2.기타	55.7%	52.6%	25.9%	40.0%
	합계	100.0%	100.0%	67.7%	84.9%

〈표 2-6〉 OECD 국가 지표 실적의 기여도 분해와 중앙정부 부채규모 (2007년)

국가 (2007)	구분	총지출과 조세수입 과리(A) $w1r1+w2r2$	벤치마크 지표실적 (B)Wibi	$C=A-B$ $=$ $D+E+F$	예산배분 초과실적 (D) $(w1-W1)*bi$	종목선정 초과실적(E) $W1*(ri-bi)$	상호교차 초과실적(F) $(w1-W1)*(ri-bi)$	GDP대비 중앙정부 부채비율
Australia	1. 복지	21.86%	21.3%	0.60%	0.26%	0.33%	0.00%	5.2%
	2. 기타	21.44%	21.1%	0.38%	-0.23%	0.62%	-0.01%	
	합계	43.30%	42.3%	0.98%	0.03%	0.96%	0.00%	
Austria	1. 복지	20.03%	21.3%	-1.23%	3.20%	-3.85%	-0.58%	57.8%
	2. 기타	21.34%	21.1%	0.28%	-2.85%	3.62%	-0.49%	
	합계	41.37%	42.3%	-0.95%	0.35%	-0.23%	-1.07%	
Belgium	1. 복지	21.56%	21.3%	0.30%	3.13%	-2.47%	-0.36%	85.3%
	2. 기타	22.71%	21.1%	1.64%	-2.79%	5.12%	-0.68%	
	합계	44.27%	42.3%	1.94%	0.34%	2.65%	-1.04%	
Canada	1. 복지	20.87%	21.3%	-0.39%	-2.10%	1.90%	-0.19%	25.2%
	2. 기타	18.20%	21.1%	-2.86%	1.87%	-4.35%	-0.39%	
	합계	39.07%	42.3%	-3.25%	-0.23%	-2.45%	-0.57%	
Czech Rep.	1. 복지	21.91%	21.3%	0.65%	-1.42%	2.22%	-0.15%	25.2%
	2. 기타	22.47%	21.1%	1.41%	1.27%	0.13%	0.01%	
	합계	44.38%	42.3%	2.06%	-0.15%	2.35%	-0.14%	
Denmark	1. 복지	23.90%	21.3%	2.64%	1.74%	0.83%	0.07%	27.8%
	2. 기타	24.12%	21.1%	3.06%	-1.55%	4.97%	-0.37%	
	합계	48.02%	42.3%	5.70%	0.19%	5.81%	-0.30%	
Estonia	1. 복지	22.16%	21.3%	0.90%	-4.30%	6.52%	-1.32%	1.3%
	2. 기타	20.68%	21.1%	-0.38%	3.83%	-3.56%	-0.65%	
	합계	42.85%	42.3%	0.53%	-0.46%	2.96%	-1.97%	
Finland	1. 복지	22.18%	21.3%	0.92%	2.33%	-1.26%	-0.14%	31.2%
	2. 기타	22.49%	21.1%	1.43%	-2.07%	3.89%	-0.38%	
	합계	44.67%	42.3%	2.35%	0.25%	2.62%	-0.52%	
France	1. 복지	18.99%	21.3%	-2.27%	3.10%	-4.69%	-0.68%	52.1%
	2. 기타	20.37%	21.1%	-0.69%	-2.76%	2.38%	-0.31%	
	합계	39.35%	42.3%	-2.97%	0.33%	-2.31%	-1.00%	
Germany	1. 복지	17.45%	21.3%	-3.81%	4.66%	-6.95%	-1.52%	39.6%
	2. 기타	20.73%	21.1%	-0.33%	-4.16%	4.77%	-0.94%	
	합계	38.18%	42.3%	-4.15%	0.50%	-2.18%	-2.46%	

국가 (2007)	구분	총지출과 조세수입 과리(A) w1r1+w2r2	벤치마크 지표실적 (B)Wibi	C=A-B = D+E+F	예산배분 초과실적 (D) (wi-Wi)*bi	증목선정 초과실적(E) Wi*(ri-bi)	상호교차 초과실적(F) (wi-Wi) *(ri-bi)	GDP대비 중앙정부 부채비율
Greece	1. 복지	15.07%	21.3%	-6.19%	-0.77%	-5.62%	0.20%	105.7%
	2. 기타	9.48%	21.1%	-11.58%	0.69%	-11.88%	-0.39%	
	합계	24.55%	42.3%	-17.77%	-0.08%	-17.50%	-0.18%	
Hungary	1. 복지	19.79%	21.3%	-1.47%	-0.67%	-0.82%	0.03%	61.6%
	2. 기타	16.86%	21.1%	-4.20%	0.60%	-4.67%	-0.13%	
	합계	36.65%	42.3%	-5.67%	-0.07%	-5.49%	-0.11%	
Iceland	1. 복지	22.12%	21.3%	0.86%	-5.77%	9.11%	-2.47%	23.2%
	2. 기타	20.88%	21.1%	-0.18%	5.15%	-4.28%	-1.05%	
	합계	43.01%	42.3%	0.69%	-0.62%	4.83%	-3.52%	
Ireland	1. 복지	20.98%	21.3%	-0.29%	-1.37%	1.15%	-0.07%	19.8%
	2. 기타	19.16%	21.1%	-1.90%	1.22%	-2.95%	-0.17%	
	합계	40.14%	42.3%	-2.19%	-0.15%	-1.79%	-0.24%	
Israel	1. 복지	19.75%	21.3%	-1.51%	-5.76%	5.84%	-1.58%	75.9%
	2. 기타	9.96%	21.1%	-11.11%	5.14%	-13.06%	-3.19%	
	합계	29.71%	42.3%	-12.61%	-0.62%	-7.22%	-4.77%	
Italy	1. 복지	22.19%	21.3%	0.93%	2.04%	-1.02%	-0.10%	95.6%
	2. 기타	22.84%	21.1%	1.78%	-1.82%	3.94%	-0.34%	
	합계	45.03%	42.3%	2.71%	0.22%	2.92%	-0.44%	
Japan	1. 복지	17.56%	21.3%	-3.70%	1.93%	-5.16%	-0.47%	164.5%
	2. 기타	18.99%	21.1%	-2.07%	-1.72%	-0.38%	0.03%	
	합계	36.55%	42.3%	-5.77%	0.21%	-5.54%	-0.44%	
Korea	1. 복지	18.87%	21.3%	-2.39%	-9.41%	12.60%	-5.58%	29.7%
	2. 기타	15.08%	21.1%	-5.98%	8.40%	-10.28%	-4.10%	
	합계	33.95%	42.3%	-8.37%	-1.02%	2.32%	-9.68%	
Luxembourg	1. 복지	24.01%	21.3%	2.75%	4.36%	-1.33%	-0.27%	1.4%
	2. 기타	24.10%	21.1%	3.04%	-3.89%	8.50%	-1.57%	
	합계	48.12%	42.3%	5.80%	0.47%	7.17%	-1.84%	
Mexico	1. 복지	22.14%	21.3%	0.88%	-4.53%	6.88%	-1.47%	20.9%
	2. 기타	15.87%	21.1%	-5.19%	4.04%	-7.75%	-1.49%	
	합계	38.01%	42.3%	-4.31%	-0.49%	-0.87%	-2.95%	
Netherlands	1. 복지	21.35%	21.3%	0.09%	-1.36%	1.55%	-0.10%	37.6%
	2. 기타	19.44%	21.1%	-1.62%	1.21%	-2.68%	-0.15%	
	합계	40.80%	42.3%	-1.52%	-0.15%	-1.12%	-0.25%	

국가 (2007)	구분	총지출과 조세수입 과리(A) w1r1+w2r2	벤치마크 지표실적 (B)Wibi	C=A-B = D+E+F	예산배분 초과실적 (D) (wi-Wi)*bi	증목선정 초과실적(E) Wi*(ri-bi)	상호교차 초과실적(F) (wi-Wi) *(ri-bi)	GDP대비 중앙정부 부채비율
New Zealand	1. 복지	22.11%	21.3%	0.85%	-0.31%	1.18%	-0.02%	20.3%
	2. 기타	22.11%	21.1%	1.05%	0.27%	0.77%	0.01%	
	합계	44.23%	42.3%	1.91%	-0.03%	1.95%	-0.01%	
Norway	1. 복지	26.44%	21.3%	5.18%	1.43%	3.51%	0.24%	11.7%
	2. 기타	27.28%	21.1%	6.21%	-1.27%	7.97%	-0.48%	
	합계	53.71%	42.3%	11.39%	0.15%	11.48%	-0.25%	
Poland	1. 복지	20.21%	21.3%	-1.05%	-0.22%	-0.84%	0.01%	42.6%
	2. 기타	18.89%	21.1%	-2.17%	0.19%	-2.34%	-0.02%	
	합계	39.11%	42.3%	-3.22%	-0.02%	-3.18%	-0.01%	
Portugal	1. 복지	15.76%	21.3%	-5.50%	1.82%	-6.75%	-0.58%	66.6%
	2. 기타	15.89%	21.1%	-5.17%	-1.63%	-3.84%	0.30%	
	합계	31.65%	42.3%	-10.67%	0.20%	-10.59%	-0.28%	
Slovak Rep.	1. 복지	21.33%	21.3%	0.07%	-0.76%	0.86%	-0.03%	28.1%
	2. 기타	20.12%	21.1%	-0.94%	0.67%	-1.57%	-0.05%	
	합계	41.45%	42.3%	-0.87%	-0.08%	-0.71%	-0.08%	
Slovenia	1. 복지	22.09%	21.3%	0.83%	0.17%	0.65%	0.01%	23.2%
	2. 기타	21.46%	21.1%	0.40%	-0.15%	0.55%	0.00%	
	합계	43.55%	42.3%	1.23%	0.02%	1.21%	0.00%	
Spain	1. 복지	23.16%	21.3%	1.90%	3.45%	-1.34%	-0.22%	30.0%
	2. 기타	23.65%	21.1%	2.59%	-3.08%	6.64%	-0.97%	
	합계	46.81%	42.3%	4.49%	0.37%	5.30%	-1.19%	
Sweden	1. 복지	22.68%	21.3%	1.42%	2.78%	-1.20%	-0.16%	36.4%
	2. 기타	23.24%	21.1%	2.18%	-2.48%	5.28%	-0.62%	
	합계	45.93%	42.3%	3.61%	0.30%	4.08%	-0.78%	
Switzerland	1. 복지	20.55%	21.3%	-0.71%	4.45%	-4.27%	-0.89%	23.2%
	2. 기타	22.29%	21.1%	1.23%	-3.97%	6.41%	-1.21%	
	합계	42.85%	42.3%	0.52%	0.48%	2.14%	-2.10%	
UK	1. 복지	19.67%	21.3%	-1.59%	-0.71%	-0.91%	0.03%	42.7%
	2. 기타	19.09%	21.1%	-1.97%	0.63%	-2.53%	-0.08%	
	합계	38.76%	42.3%	-3.56%	-0.08%	-3.44%	-0.05%	
US	1. 복지	18.54%	21.3%	-2.72%	-1.39%	-1.42%	0.09%	35.7%
	2. 기타	14.41%	21.1%	-6.65%	1.24%	-7.45%	-0.44%	
	합계	32.96%	42.3%	-9.36%	-0.15%	-8.87%	-0.34%	

제3절 소결

복지지출과 기타재정지출간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여도분석을 한 결과 그리스의 경우 재정수입과 지출간 괴리가 가장 큰 국가로 분석되었다. GDP대비로 재정수입과 지출간 괴리가 10%이상인 국가는 그리스(-15.8%), 이스라엘(-10.0%), 포르투갈(-11.9%), 터키(-10.0%), 헝가리(-10.4%) 등이다. 프랑스(-8.9%), 영국(-7.9%), 독일(-7.5%), 그리고 미국(-9.0%) 등의 국가도 재정불균형이 심한 국가군에 속한다. 반면에 한국은 -2.1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복지지출과 기타지출간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기여도는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복지지출 부분이 기타재정지출보다 상대적 비중이 높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기여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 중에서 이탈리아와 일본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국가부채수준(GDP대비)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스의 경우 복지지출의 비중보다는 기타재정지출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지출의 부정적인 기여도가 기타재정지출의 부정적인 기여도 보다 2%이상 차이나는 국가는 독일(3.28%)뿐이다.

두 부분간 재정건전성기여도가 1%이상 차이나는 국가군을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재정불균형이 심한 국가 중에서 복지지출부분의 불균형의 기여도가 큰 국가는 유럽의 대표적인 대륙형국가인 프랑스, 독일과 일본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는 복지지출 보다는 기타지출의 재정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포르투갈을 두 부분 모두 동일하게 재정불균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유럽 국가중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재정불균형정도에서 양호한 수준인 5%미만으로 분류되었고 두 부분간 격차도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 복지부분의 부정적인 기여도가 크면서 실제 국

가부채가 GDP대비 50%가 넘는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한 사례로 나타났다.

〈표 2-7〉 재정건전성기여도별 국가분류(2007년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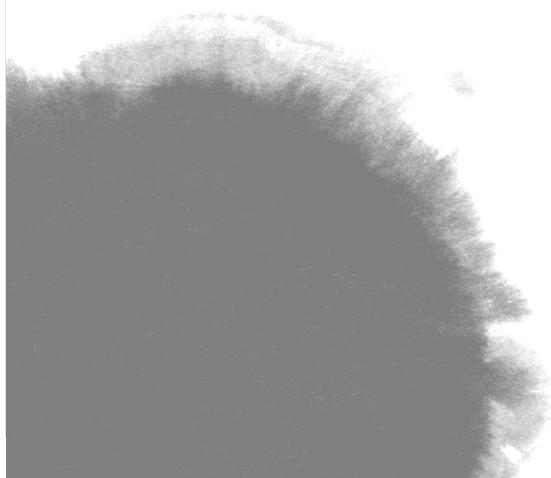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부정적기여도 (1%이상 격차기준)	당해 연도 재정불균형정도 (총지출과 조세수입과리)		
	10%이상	5~10%미만	5%미만
복지지출 > 기타지출	프랑스,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복지지출 < 기타지출	캐나다,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폴란드, 미국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복지지출 = 기타지출	포르투갈, 영국,	호주, 체코,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덴마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표 2-8〉 재정건전성기여도와 국가부채(2007년도 기준)

GDP대비 국가부채	당해 연도 재정불균형정도 (총지출과 조세수입과리)		
	10%이상	5~10%미만	5%미만
50% 이상	프랑스, 일본,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포르투갈		이탈리아
50%미만	독일, 캐나다, 폴란드, 한국, 멕시코,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호주, 체코,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3장

OECD국가의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제3장 OECD국가의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제1 절 OECD 국가 유형별 특성

1. 개요

OECD국가들의 재정건전성은 각 국가별 복지지출 수준과 복지지출을 제외한 기타정부지출수준 그리고 조세수입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건전성은 국가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이 시간경과에 따른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최근의 현황과 구성은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재정건전성관련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추이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OECD국가를 복지레짐에 따른 분류하는 연구는 에스핑엔더슨(1990)의 연구를 시점으로 관련 연구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현재의 국가별 특성과 다양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중 22개 국가를 5개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을 참조하여 분류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민주의를 특성으로 하는 북유럽형 국가(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보수주의를 특성으로 하는 대륙형 국가(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자유주의적 경향을 특성으로 하는 영미형 국가(영국, 미국,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

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최근 과도한 재정지출과 재정적자로 위기에 봉착한 남유럽형 국가(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그리고 앞의 국가 유형들과는 지정학적, 역사 및 제도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분류가 용이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을 동아시아형 국가로 분류하였다.

〈표 3-1〉 OECD국가 유형별 분류

영미형	대륙형	북구형	남유럽형	동아시아형	동유럽형*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Switzerland UK US Ireland	Austria Belgium France Germany Netherlands	Denmark Finland Norway Sweden	Greece Italy Portugal Spain	Korea Japan	Czech Hungary Poland

주: * 해당국가 주요변수에 결측 값이 많이 나타나 본 분석에서 제외시킴.

본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OECD 22개국의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국가부채비율 등이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다. 부채의 경우 전년도 부채가 다음 연도 부채까지 축적되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정연도와 재정과 그해에만 사용된 지출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적절치 않지만(정의룡 외 2012), 횡단면자료가 시계열로 축적된 패널자료의 경우 부채가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작용으로 형성된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수지보다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OECD 주요 국가들의 중앙정부부채²⁾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패널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재정건전성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2) 중앙정부 부채이므로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사회보장기금 관련 사항은 제외되었다.

OECD국가의 재정건전성 및 복지지출 그리고 조세부담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OECD.Stat의 Tax Statistics,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그리고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제공 데이터들을 활용하였다.

2. 복지체계 유형별 특성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중 22개 국가를 북유럽형 국가, 대륙형 국가, 영미형 국가, 남유럽형 국가, 동아시아형 국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류는 에스핑엔더슨(1990) 연구 이래, 관련된 많은 논의들을 참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복지 레짐별 유형들을 살펴보면, 먼저 영미 자유주의 복지국가들은 잔여적 성격의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공급보다는 수요 중심의 특성을 가진 대체로 복지서비스가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로 구성된다. 해당국가들에는 주로 영국, 미국,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이 포함되고 있다.

다음으로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생산과 복지의 상호보완성이 강조되어 왔다.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사회보험이다. 또한 고용 중심의 복지체계를 특성으로 한다. 노동자는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생산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보험 재정에 기여함으로써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하는 사회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김미숙 외).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 복지체계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가 포함된다. Kuhnle(2000)은 사민주의 복지체제의 특징으로서 복지와 노동의 결합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국가가 완전 고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안상훈, 2001; Ahn&Olsson Hort, 1999). 사민주의 복지체제는 복지만을 강조해 왔다 기보다는 복지와 노동을 철저히 결합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남유럽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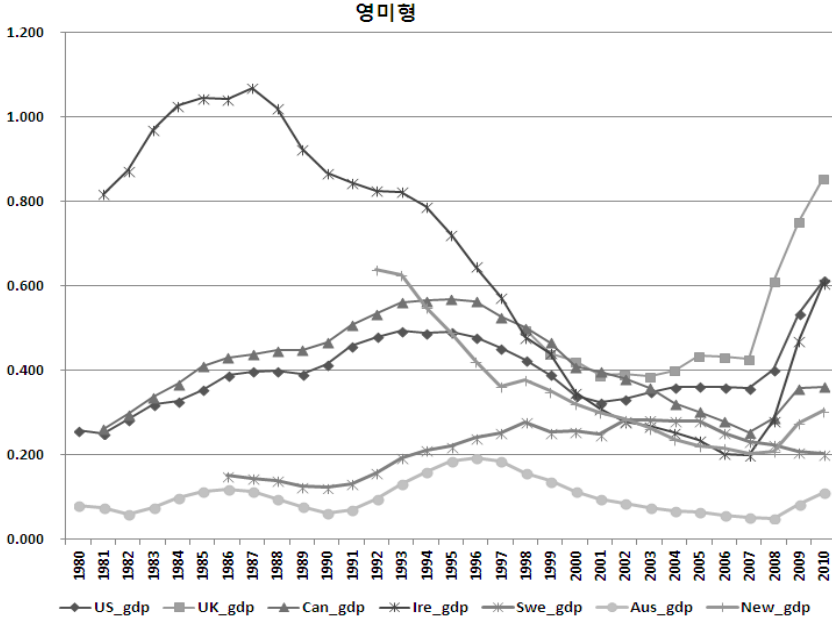
국가군의 경우 이들 국가들에 대한 분류는 매우 가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재정위기에서 매우 취약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비슷한 경제 및 사회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 해당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제2절 추이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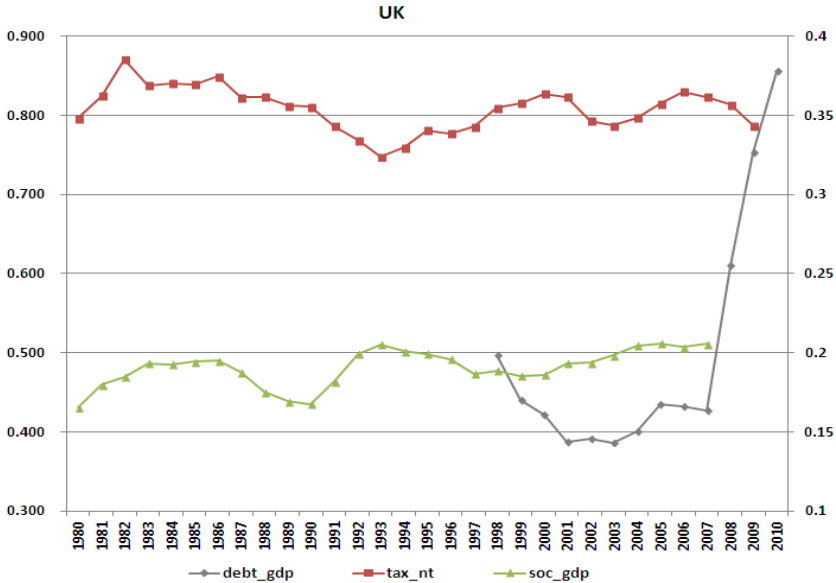
OECD국가의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의 추이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OECD.Stat의 Tax Statistics,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그리고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제공 데이터들을 활용하였다.

먼저, 영미형 국가들의 중앙정부부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 중반에 부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중반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지출은 큰 변동은 없지만 정부부채의 경우 2007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영국의 재정상황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이전부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준다. 영국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복지지출보다는 다른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발 금융위기와 결합되어 재정건전성의 악화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큰 폭은 아니지만 국민부담률은 줄어 들고 복지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추이는 미국 경기침체로 인한 취약 계층 지원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은 이러한 미국발 금융위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들도 급격한 복지지출 및 국민부담률의 변화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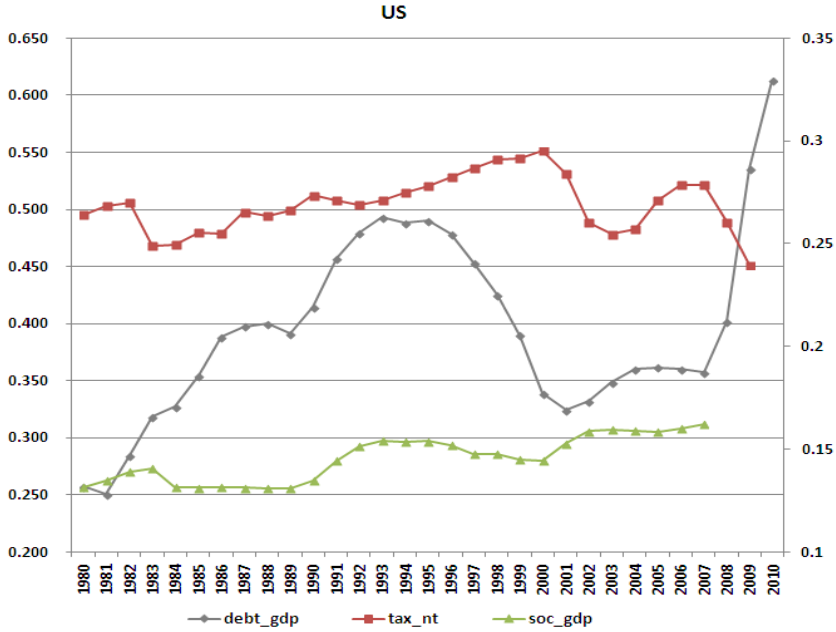
[그림 3-1] 영미형 국가의 정부부채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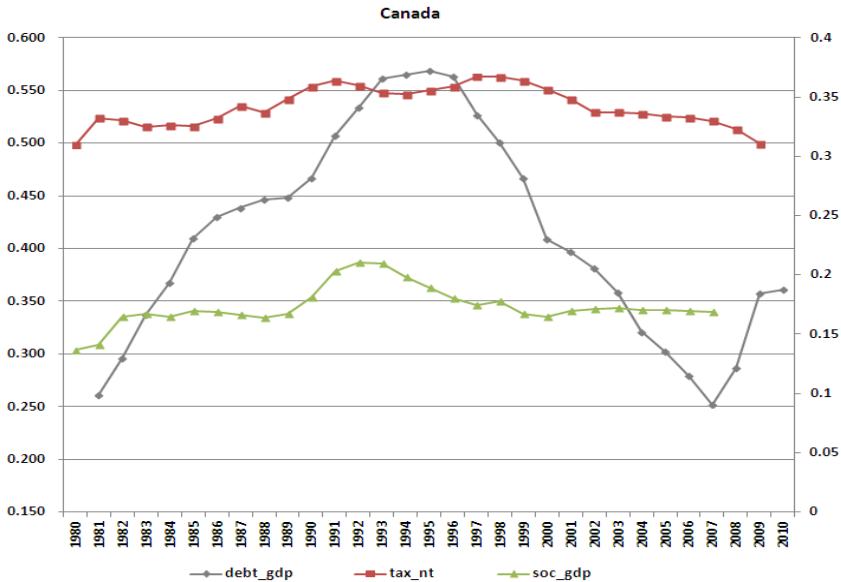
[그림 3-2]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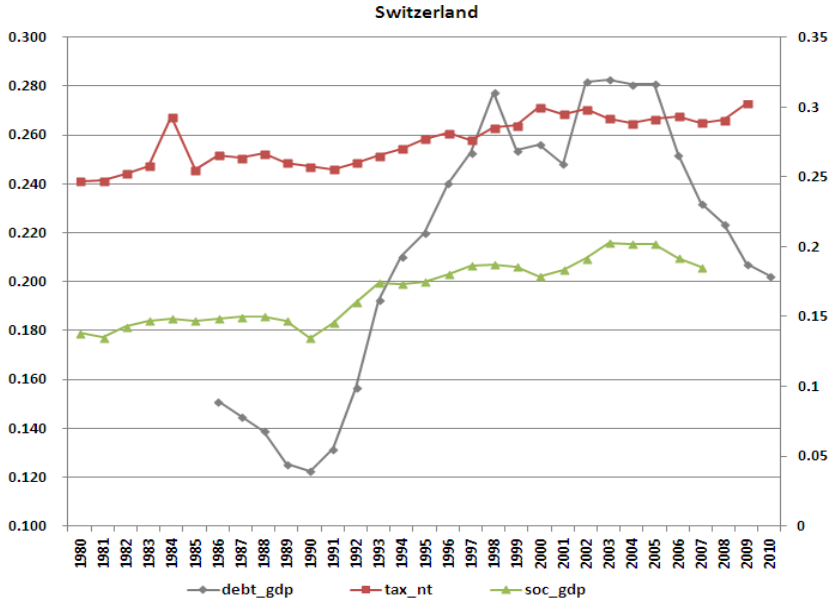
[그림 3-3]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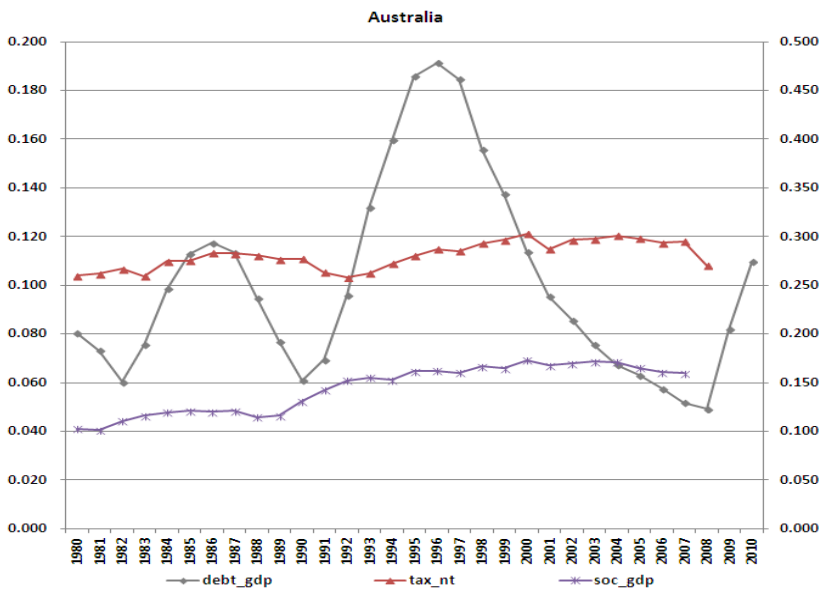
[그림 3-4]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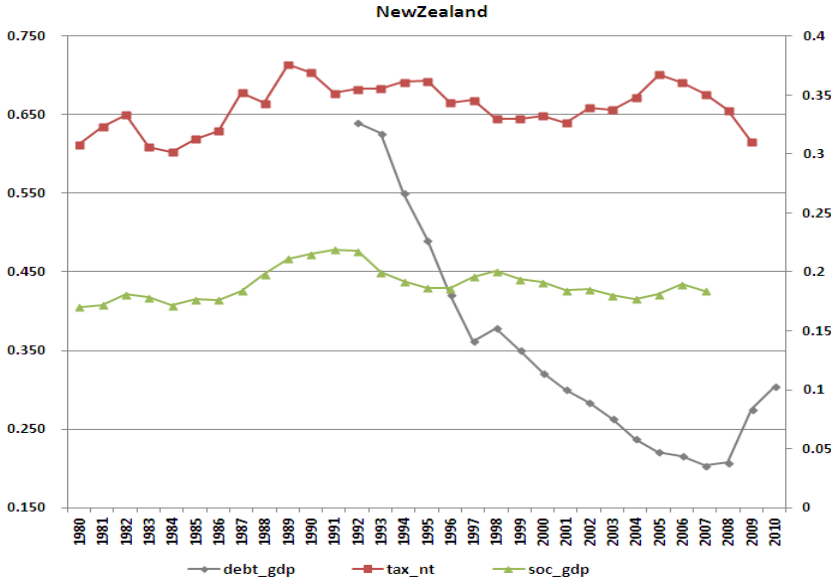
[그림 3-5]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 스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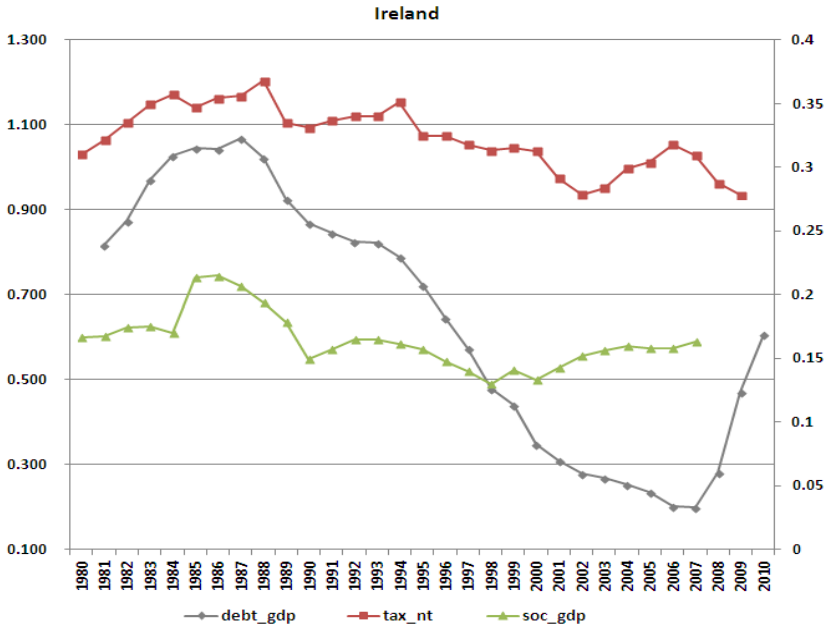
[그림 3-6]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 호주



[그림 3-7]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 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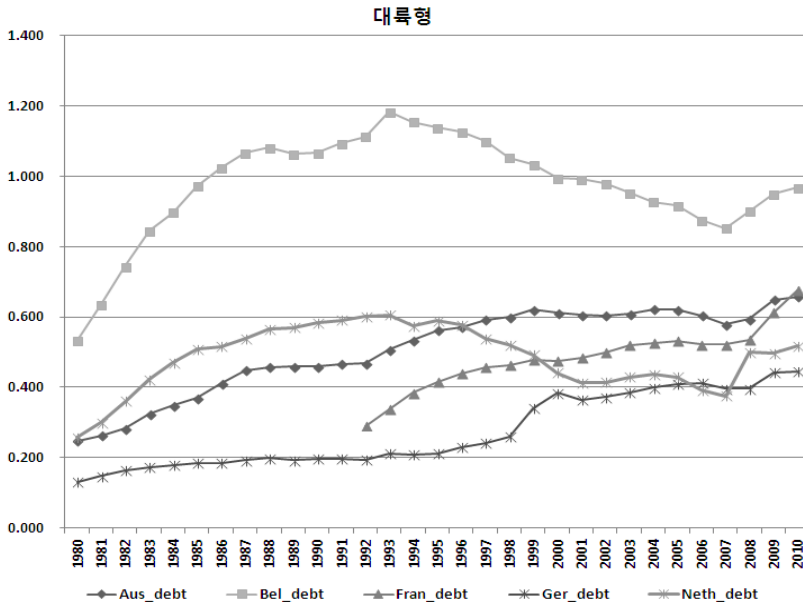


[그림 3-8]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 아일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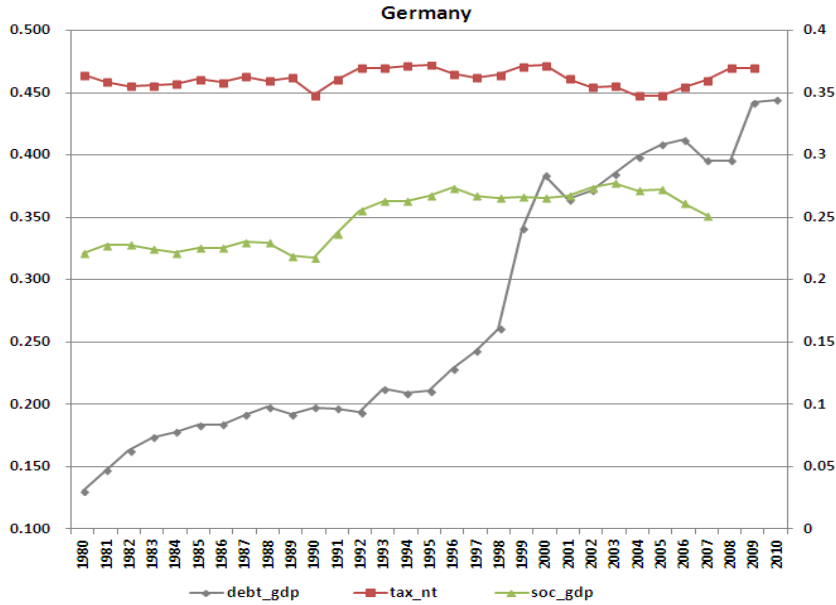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이후 경제위기가 세계로 퍼져가는 과정에서 1990년대 중반 복지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였던 북구, 독일, 캐나다 등에서는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복지재정 및 기타 정부지출이 급증하고 있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은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요인이 결합되어 재정위기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영, 2011). 대륙형 국가들의 정부부채 추이를 살펴보면 벨기에와 독일의 경우 1990년대 초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다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큰 폭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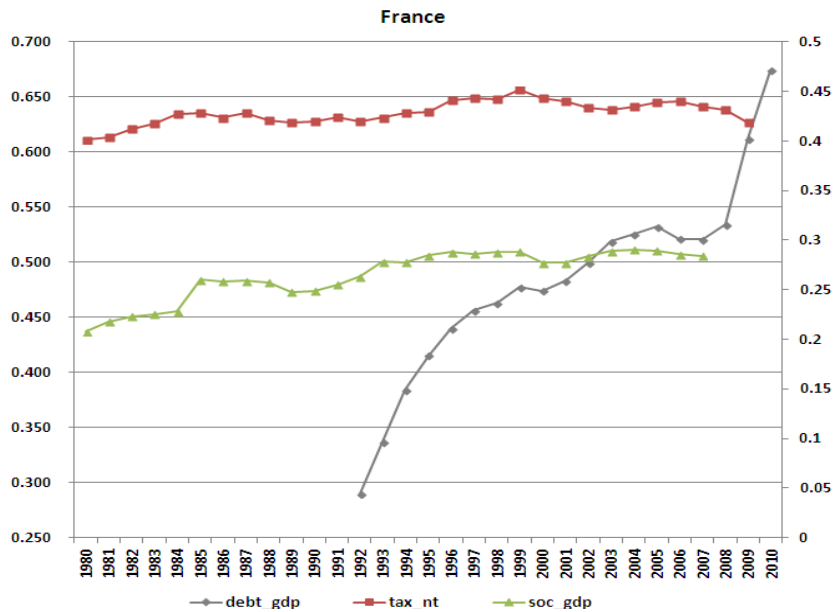
[그림 3-9] 대륙형 국가의 정부부채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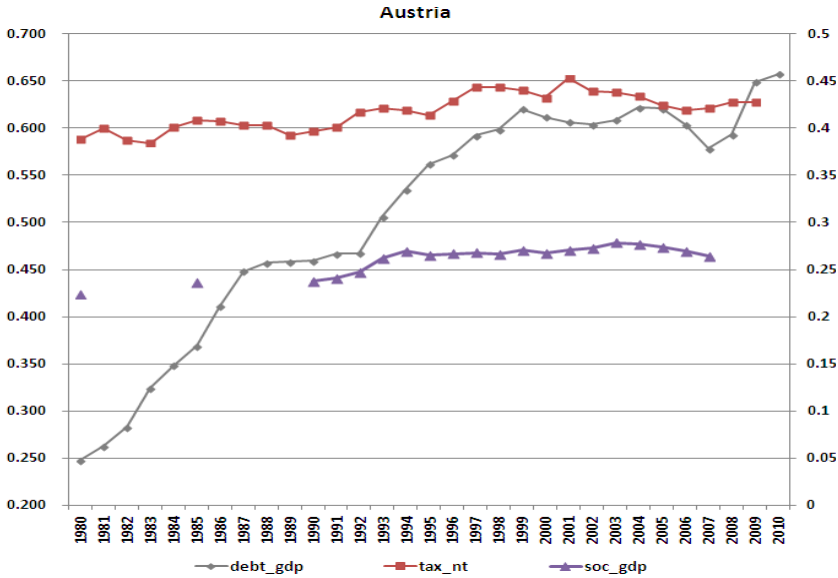
[그림 3-10]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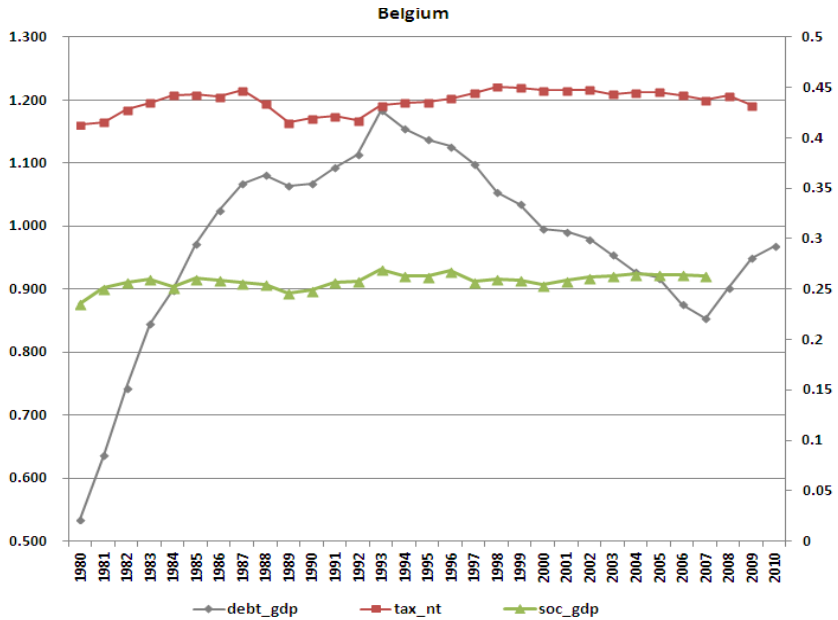
[그림 3-11]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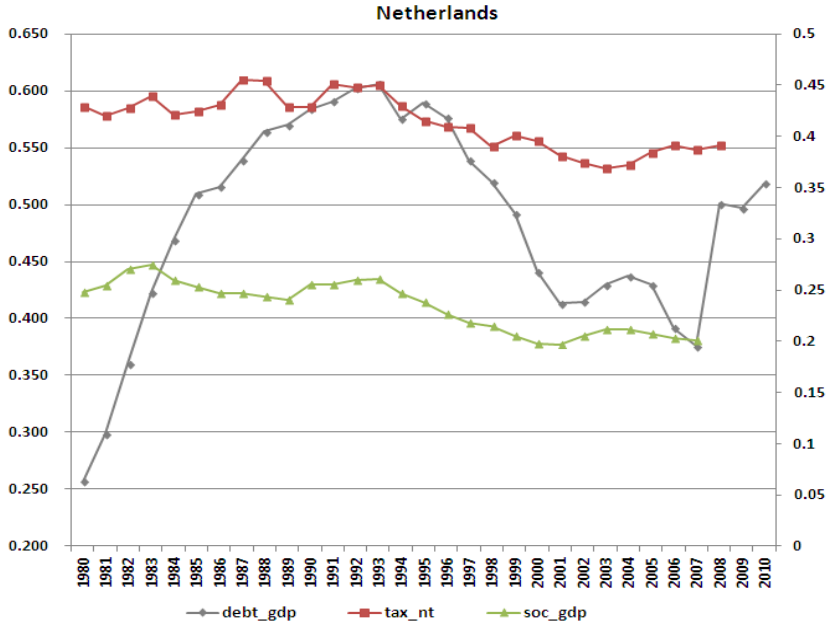
[그림 3-12]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 오스트리아



[그림 3-13]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 벨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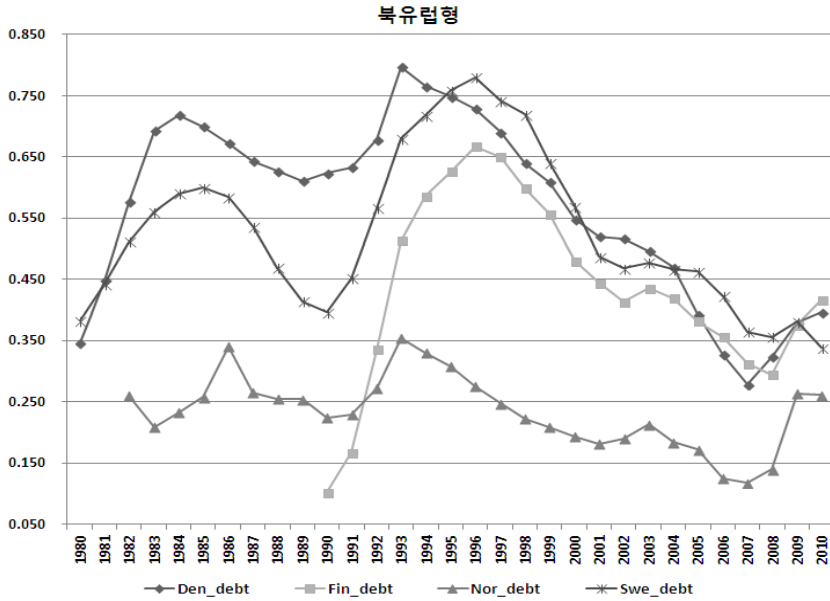


[그림 3-14]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 네덜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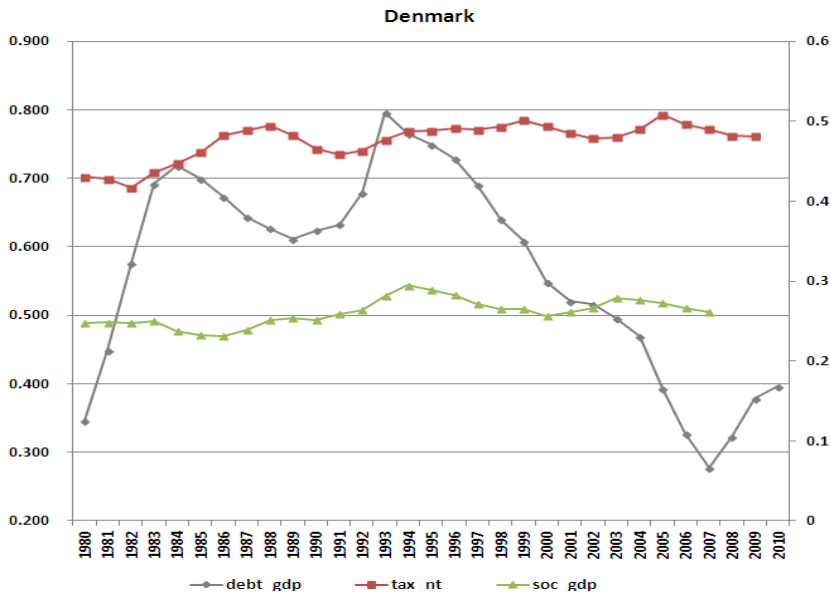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1990년대 초중반정 정부부채가 정점에 도달할 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재정개혁으로 인한 효과로 파악된다. 북유럽 4개국의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지출 추이를 보면 일정한 수준범위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부채가 앞에서 언급한 시기에 매우 큰 변동 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회지출과 관련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동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남유럽 국가들이 경우 정부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사회지출과 국민 부담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2000년대 후 급격한 정부부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사회지출의 증가추세를 훨씬 뛰어 넘는 수준으로, 그리스 재정위기와 공공사회지출간의 관계가 높지 않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3-15] 북유럽형 국가의 정부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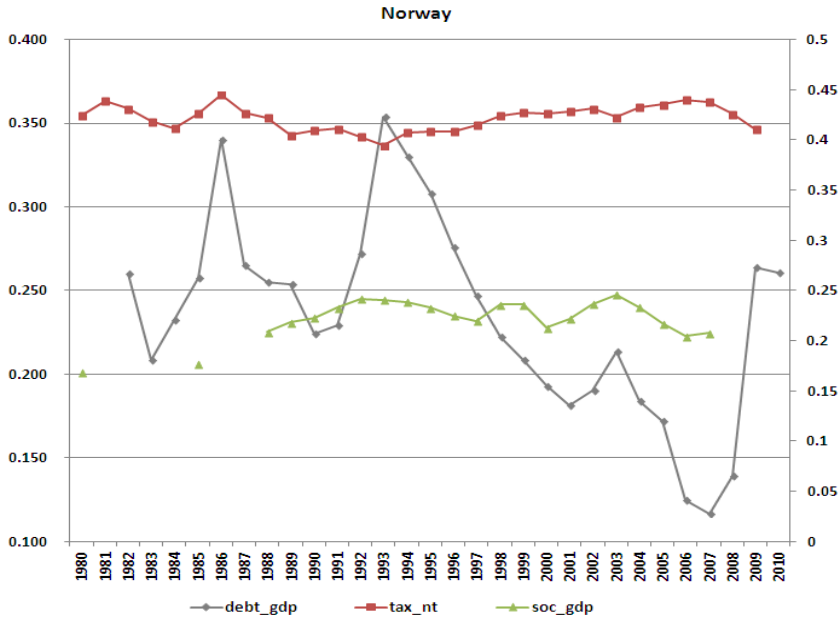
[그림 3-16]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 덴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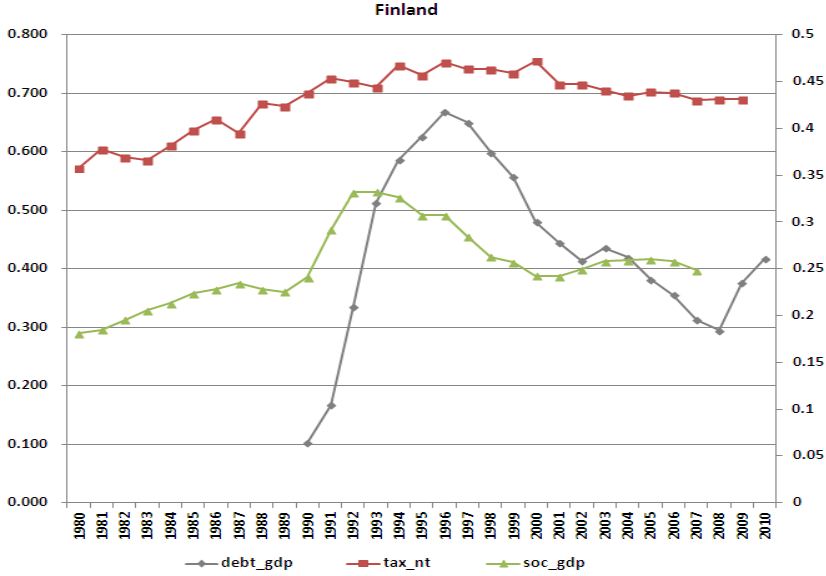
[그림 3-17]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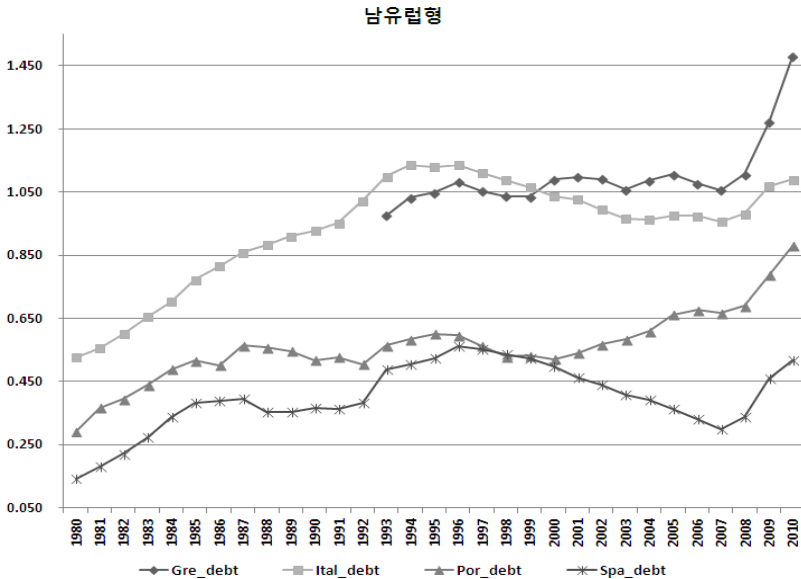
[그림 3-18]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 노르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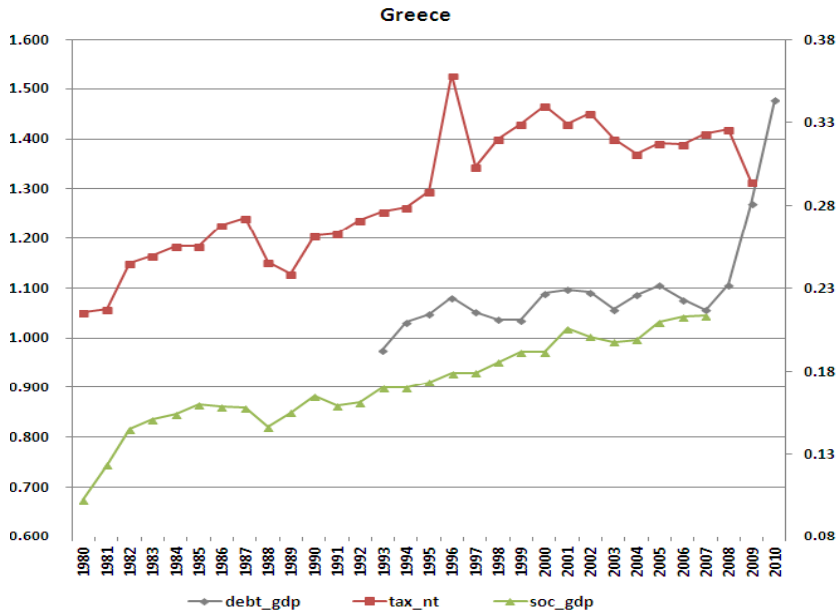
[그림 3-19]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 핀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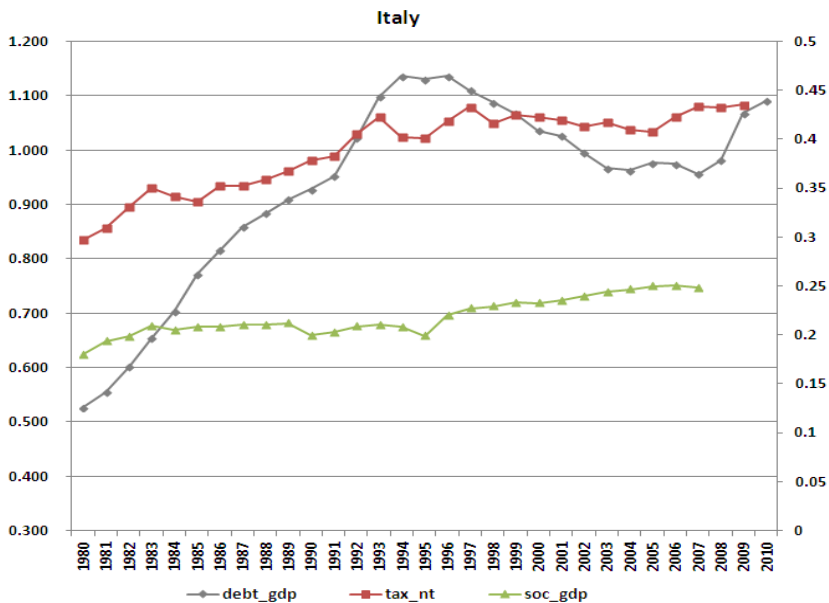
[그림 3-20] 남유럽형 국가의 정부부채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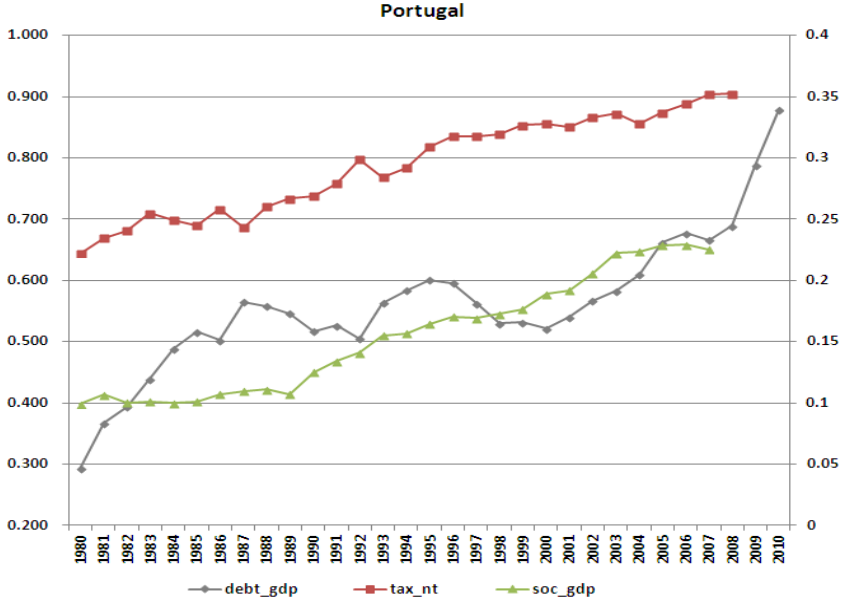
[그림 3-21]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 그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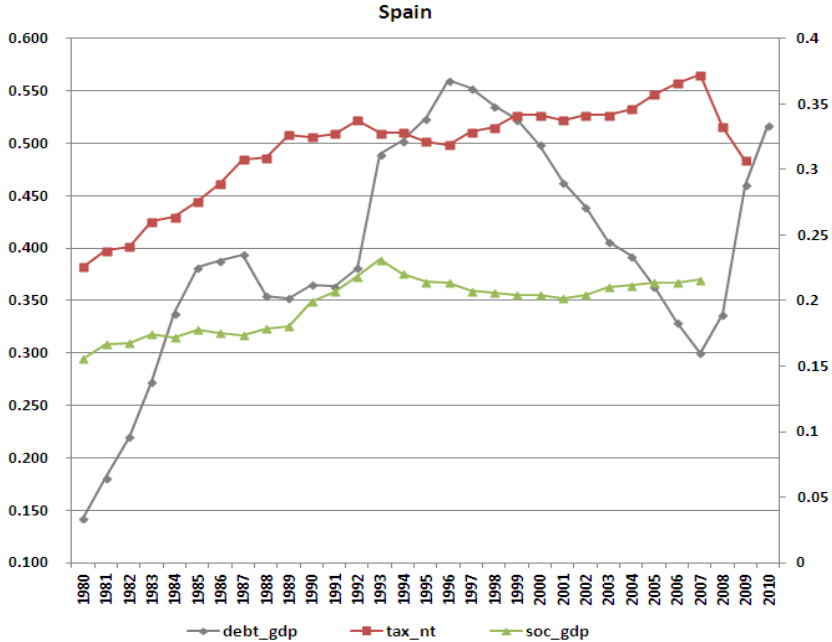
[그림 3-22]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 이탈리아



[그림 3-23]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 포르투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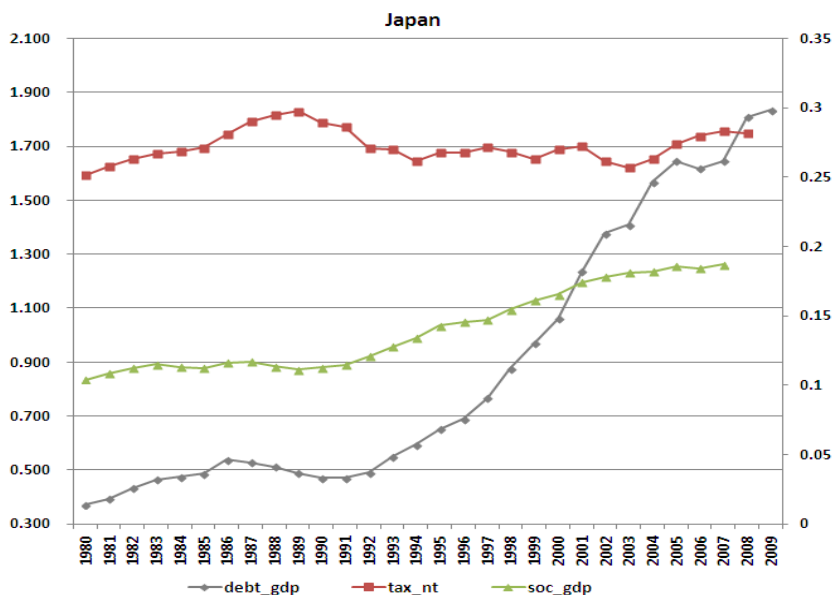


[그림 3-24]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 스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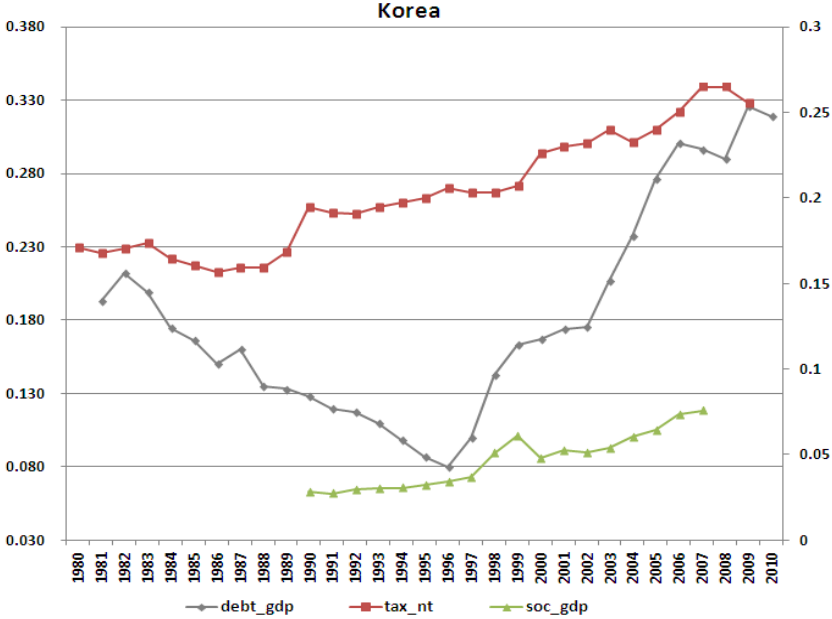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부채가 1990년대 후반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공공사회지출은 이보다는 더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부담률의 경우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으며 특히 '90년대 후반과 '00년대 초반에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사회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지만 국민부담률의 경우 큰 등락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25]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 일본



[그림 3-26]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의 추이 : 한국



제3절 재정변수요인과 고용구조요인별 Cluster 분석

1. 개요

제 2장의 소결에서 수행한 재정변수요인별 국가간 유형분류를 Cluster 분석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분석의 목적이다. 특히 재정부분에 추가로 고용구조와 재정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국가간 유형분류가 어떻게 분석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세수입의 경우 고용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비중과 민간고용의 비중 그리고 산업별 종사자비중을 통해 군집분석이 어떤 결과를 제시하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복지지출부문 균형재정실적인 $r1$ 과 총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한 w_1r_1 은 복지지출 부문의 균형재정지수가 되고 기타지출부문 균형재정실적인 r_2 와 기타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곱인 w_2r_2 는 기타지출부문의 균형재정지수가 된다. 이러한 두 개의 균형재정지수 사이에 OECD 국가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즉 어떠한 국가들이 동일한 군집을 이루는지 살펴보면 재정건전성과 복지지출의 관계성이 어떠한 군집으로 나타나는지를 직관적으로 관찰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집분석은 분류한 집단에 특정 대상을 배정하여 동일집단에 속한 대상이 유사성을 갖게 함으로써 집단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는데 이용하는 통계기법이다. 즉, 다수의 개체를 몇 가지 군집으로 분류하여 같은 군집에 속하는 개체들 간에는 서로 유사하고 다른 군집에 속하는 개체들 간에는 서로 상이한 속성을 지니도록 개체를 그룹화 하는 분석방법이다. 군집분석은 군집화 방법에 따라 계층적 군집분석과 비계층적 군집분석, 그리고 중복군집분석으로 분류된다. 계층적 군집분석은 분석 대상의 자료의 수가 적은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며, 개별대상간의 거리에 의하여 가장 가까운 대상들로부터 결합해 감으로써 나무모양의 계층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방법이다. 본 연구 또한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OECD 국가들을 분류하였다³⁾.

군집수의 결정은 관련 연구나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한 군집수를 적용할 수 있다. 군집수에 대한 어떤 절대적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적용된 3~4개의 군집으로 해당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복지지출과 기타지출의 조세수입과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수인 w_1r_1 , w_2r_2 를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과 재정에 관련

3) 계층적 군집분석에 적용된 방법은 "word's method"로 모든 변수들에 대한 각 군집의 평균을 계산한 후 각 대상들에 대해 각 군집의 평균값으로부터 Squared Euclidean distance(SED)를 계산한다. 이는 모든 대상자들의 SED를 합하여 이들 군집간의 거리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각 단계별 군집화 방법은 먼저 나타난 군집들을 결합한 후에 새로 형성될 군집에 대한 집단내 제곱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군집화를 실행한다.

한 형태를 군집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OECD stat에서 제공하는 국가일반통계, SOCX 및 tax 부문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07년을 기준으로 w_1r_1 , w_2r_2 변수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2〉 국가별 산업별 종사자 비중(2007년)

	민간고용 /총인구	자영업 /민간고용	서비스업 /민간고용	공업 /민간고용
Australia	50%	12%	75%	21%
Austria	48%	14%	67%	27%
Belgium	41%	15%	74%	24%
Canada	51%	9%	76%	22%
Chile	39%	28%	64%	24%
Czech	48%	16%	56%	40%
Denmark	50%	9%	74%	24%
Estonia	49%	9%	60%	35%
Finland	47%	13%	70%	26%
France	42%	9%	77%	21%
Germany	46%	12%	68%	30%
Greece	40%	36%	66%	22%
Hungary	39%	12%	62%	33%
Iceland	57%	14%	73%	21%
Ireland	48%	17%	67%	28%
Israel	37%	13%	77%	22%
Italy	39%	26%	65%	30%
Japan	50%	13%	68%	28%
Korea	48%	32%	67%	26%
Luxembourg	70%	6%	76%	22%
Mexico	40%	34%	61%	26%
Netherlands	52%	13%	79%	19%
NewZealand	51%	17%	71%	22%
Norway	52%	8%	76%	21%
Poland	40%	23%	55%	31%
Portugal	48%	24%	58%	31%
Slovak	44%	13%	56%	39%
Slovenia	49%	16%	55%	35%
Spain	45%	18%	66%	29%
Sweden	50%	11%	76%	22%
Switzerland	59%	12%	73%	24%
Turkey	30%	40%	50%	27%
UK	48%	13%	76%	23%
US	48%	7%	79%	20%

2. 분석 결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32개 국가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벨기에 등 20개 국가들이 1군집을 형성하였고 이는 전체 32개 국가중 6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북유럽국가들과 북미국가들을 제외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1군집에 속하고 있다. 반면, 사민주의 국가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와 룩셈부르크, 스페인이 2군집을, 독일, 일본, 포르투갈이 3군집을 그리스, 이스라엘, 미국, 한국이 4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군집분석의 결과를 A라 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주요 변수들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들은 B, C, D, E, F로 나타내었다. A를 기준으로 GDP대비 정부부채를 추가한 B의 경우 한국과 그리스, 이스라엘, 미국은 계속해서 군집4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고 A에서는 군집3이었던 포르투갈은 4군집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A에서는 군집2에 속했던 북유럽국가들(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군집1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 프랑스 등 대륙형 복지국가 유형에 속하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군집2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을 계속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 B에 자영업자수를 민간고용인원으로 나눈 값을 변수로 추가한 경우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의 경우 변함없이 3군집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군집에 속했던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군집1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추가에 따른 군집변화의 유형을 보면 대체로 1군집과 2군집간의 이동이 많이 나타나며 3군집과 4군집은 대체로 해당 군집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집1과 군집2의 국가들의 특성(군집분석에 적용된 변수의 특성)이 대체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군집3과 군집4는 군집별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북구형 국가들은

모든 분석유형에서 1군집과 2군집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경제위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그리스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군집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스페인의 경우 1,2군집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분석 E를 제외하고는 군집4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리스, 포르투갈과 대체로 비슷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 F의 경우는 균형재정지수인 $w1r1$ 과 $w2r2$ 는 물론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군집1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보편주의 국가들이 소속되어 있고 스위스, 룩셈부르크와 같은 고소득 국가들이 포진되어 있다. 반면 군집4의 경우는 그리스 포르투갈, 멕시코 등 복지지출 수준이 낮고 한국을 제외하고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과 2007년의 변수들을 활용하여 군집을 각각 3개와 4개로 정한 후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비교적 북구사민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동일군집에 포함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과 그리스 역시 같은 군집에 속한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2000년보다 2007년에 같은 군집에 속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관적인 예상과 마찬가지로 4군집의 경우가 3군집보다 군집 유형의 변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형의 변화가 거의 없는 국가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군집분석 결과(4군집, 2007년) : 군집기준

	A (w1r1, w2r2)	B (A,정부부채 /GDP)	C (B,자영업자/ 민간고용)	D (C,민간고용/ 총인구)	E (D,서비스종사/ 민간고용)	F (E,공업종 /민간고용)
군집1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zech Estonia Finland Fran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Mexico Netherlands NewZealand Poland Slovak Slovenia Switzerland UK	Australia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Iceland Ireland Luxembourg NewZealand Norway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Australia Canada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Iceland Ireland Luxembourg Netherlands NewZealand Norway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Australia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Iceland Luxembourg NewZealand Norway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Australia 6:Denmark 8:Finland Iceland Ireland Luxembourg NewZealand Norway Spain Sweden Switzerland	Australia Denmark Iceland Luxembourg NewZealand Norway Sweden Switzerland
군집2	Denmark Luxembourg Norway Spain Sweden	Austria Canada France Germany Hungary Ireland Mexico Netherlands Poland Slovak UK	Austria France Germany Hungary Israel UK US	Austria Canada France Germany Ireland Netherlands Slovak UK US	Austria Belgium Canada France Germany Israel Netherlands UK US	Austria Czech Estonia Finland Germany Hungary Ireland Italy Poland Slovak Slovenia Spain
군집3	Germany Japan Portugal	Belgium Italy Japan	Belgium Italy Japan	Belgium Hungary Israel Italy Japan Poland	Czech Estonia Hungary Italy Korea Mexico Poland Slovak	Belgium Canada France Israel Japan Netherlands UK US
군집4	Greece Israel Korea US	Greece Korea Portugal US	Greece Korea Mexico Poland Portugal	Greece Korea Mexico Portugal	Slovenia Greece Japan Portugal	Greece Korea Mexico Portugal

〈표 3-4〉 군집분석 결과(4군집, 2007년) - 국가기준

변수 국가	A (w1r1, w2r2)	B (A,정부부채 /GDP)	C (B,자영업자 /민간고용)	D (C,민간고용/총 인구)	E (D,서비스종사 /민간고용)	F (E,공업종사 민간고용)
Australia	1	1	1	1	1	1
Austria	1	2	2	2	2	2
Belgium	1	3	3	3	2	3
Canada	1	2	1	2	2	3
Czech	1	1	1	1	3	2
Denmark	2	1	1	1	1	1
Estonia	1	1	1	1	3	2
Finland	1	1	1	1	1	2
France	1	2	2	2	2	3
Germany	3	2	2	2	2	2
Greece	4	4	4	4	4	4
Hungary	1	2	2	3	3	2
Iceland	1	1	1	1	1	1
Ireland	1	2	1	2	1	2
Israel	4	4	2	3	2	3
Italy	1	3	3	3	3	2
Japan	3	3	3	3	4	3
Korea	4	4	4	4	3	4
Luxembourg	2	1	1	1	1	1
Mexico	1	2	4	4	3	4
Netherlands	1	2	1	2	2	3
NewZealand	1	1	1	1	1	1
Norway	2	1	1	1	1	1
Poland	1	2	4	3	3	2
Portugal	3	4	4	4	4	4
Slovak	1	2	1	2	3	2
Slovenia	1	1	1	1	3	2
Spain	2	1	1	1	1	2
Sweden	2	1	1	1	1	1
Switzerland	1	1	1	1	1	1
UK	1	2	2	2	2	3
US	4	4	2	2	2	3

〈표 3-5〉 군집분석 결과(2000, 2007) - 1

변수 연도,군집수 국 가	A (복지지출 및 기타지출의 조세수입과의 괴리)				B (A + GDP대비 중앙정부부채)			
	3군집		4군집		3군집		4군집	
	2000	2007	2000	2007	2000	2007	2000	2007
Australia	1	1	1	1	1	1	1	1
Austria	1	1	2	1	1	2	1	2
Belgium	2	1	3	1	2	2	2	3
Canada	1	1	1	1	1	2	1	2
Czech	1	1	1	1	1	1	1	1
Denmark	2	2	3	2	2	1	3	1
Estonia	1	1	1	1	1	1	1	1
Finland	2	1	3	1	2	1	3	1
France	1	1	1	1	1	2	1	2
Germany	1	3	2	3	1	2	1	2
Greece	3	3	4	4	3	3	4	4
Hungary	1	1	1	1	1	2	1	2
Iceland	1	1	1	1	1	1	1	1
Ireland	2	1	3	1	2	2	3	2
Israel	3	3	4	4	3	3	4	4
Italy	2	1	3	1	2	2	2	3
Japan	3	3	4	3	3	2	4	3
Korea	1	3	2	4	1	3	1	4
Luxembourg	2	2	3	2	2	1	3	1
Mexico		1		1		2		2
Netherlands	2	1	3	1	2	2	3	2
NewZealand	1	1	1	1	1	1	1	1
Norway	2	2	3	2	2	1	3	1
Poland	1	1	2	1	1	2	1	2
Portugal	1	3	2	3	1	3	1	4
Slovak	3	1	4	1	3	2	4	2
Slovenia	1	1	2	1		1		1
Spain	1	2	1	2	1	1	1	1
Sweden	2	2	3	2	2	1	3	1
Switzerland	1	1	1	1	1	1	1	1
UK	2	1	3	1	2	2	3	2
US	1	3	1	4	1	3	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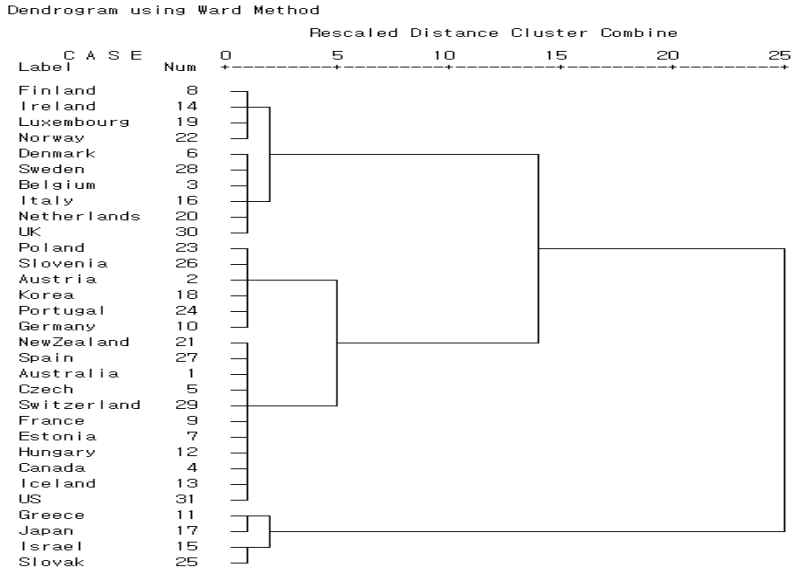
〈표 3-6〉 군집분석 결과(2000, 2007) - 2

변수 연도, 군집수 국 가	C (B + 민간고용대비 자영업자수)				D (C + 인구대비 민간고용)			
	3군집		4군집		3군집		4군집	
	2000	2007	2000	2007	2000	2007	2000	2007
Australia	1	1	1	1	1	1	1	1
Austria	1	2	1	2	1	2	1	2
Belgium	1	2	2	3	1	2	1	3
Canada	1	1	1	1	2	2	2	2
Czech	1	1	1	1	1	1	1	1
Denmark	1	1	1	1	2	1	2	1
Estonia	1	1	1	1	1	1	1	1
Finland	1	1	1	1	2	1	2	1
France	1	2	1	2	1	2	1	2
Germany	1	2	1	2	1	2	1	2
Greece	2	3	3	4	3	3	3	4
Hungary	1	2	1	2	1	2	1	3
Iceland	1	1	1	1	2	1	2	1
Ireland	1	1	1	1	2	2	2	2
Israel	3	2	4	2	3	2	4	3
Italy	1	2	2	3	1	2	1	3
Japan	3	2	4	3	3	2	4	3
Korea	2	3	3	4	3	3	3	4
Luxembourg	1	1	1	1	2	1	2	1
Mexico		3		4		3		4
Netherlands	1	1	1	1	2	2	2	2
NewZealand	1	1	1	1	1	1	1	1
Norway	1	1	1	1	2	1	2	1
Poland	2	3	3	4	1	2	1	3
Portugal	2	3	3	4	3	3	3	4
Slovak	3	1	4	1	3	2	4	2
Slovenia		1		1		1		1
Spain	1	1	1	1	1	1	1	1
Sweden	1	1	1	1	2	1	2	1
Switzerland	1	1	1	1	2	1	2	1
UK	1	2	1	2	2	2	2	2
US	1	2	1	2	2	2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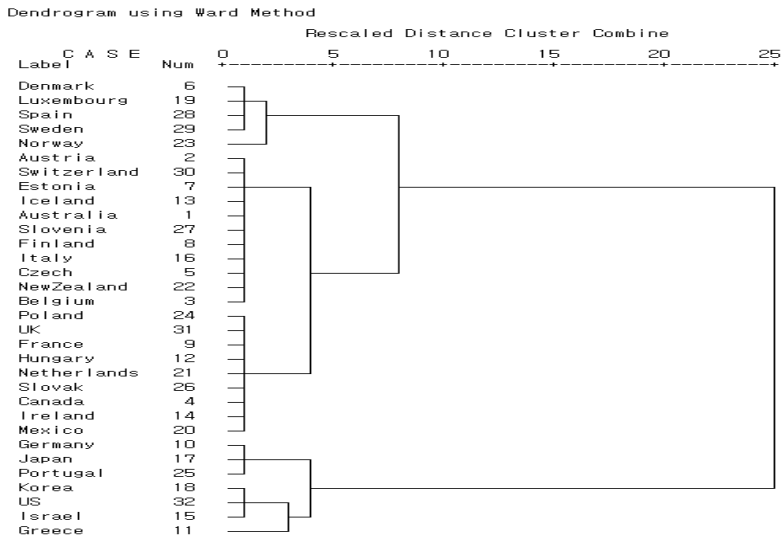
〈표 3-7〉 군집분석 결과(2000, 2007) - 3

변수 연도, 군집수 국 가	E (D + 민간고용대비 서비스종사자)				F (E + 민간고용대비 공업종사자)			
	3군집		4군집		3군집		4군집	
	2000	2007	2000	2007	2000	2007	2000	2007
Australia	1	1	1	1	1	1	1	1
Austria	2	1	2	2	2	2	2	2
Belgium	2	1	2	2	3	1	3	3
Canada	1	1	1	2	1	1	1	3
Czech	2	2	2	3	2	2	2	2
Denmark	1	1	1	1	1	1	1	1
Estonia	2	2	2	3	2	2	2	2
Finland	1	1	1	1	1	2	1	2
France	1	1	1	2	1	1	1	3
Germany	2	1	2	2	2	2	2	2
Greece	2	3	3	4	3	3	3	4
Hungary	2	2	2	3	2	2	2	2
Iceland	1	1	1	1	1	1	1	1
Ireland	1	1	1	1	1	2	1	2
Israel	3	1	4	2	3	1	3	3
Italy	2	2	2	3	3	2	3	2
Japan	3	3	4	4	3	1	3	3
Korea	2	2	3	3	2	3	2	4
Luxembourg	1	1	1	1	1	1	1	1
Mexico		2		3		3		4
Netherlands	1	1	1	2	1	1	1	3
NewZealand	1	1	1	1	1	1	1	1
Norway	1	1	1	1	1	1	1	1
Poland	2	2	3	3	2	2	2	2
Portugal	2	3	3	4	2	3	2	4
Slovak	3	2	4	3	2	2	4	2
Slovenia		2		3		2		2
Spain	2	1	2	1	2	2	2	2
Sweden	1	1	1	1	1	1	1	1
Switzerland	1	1	1	1	1	1	1	1
UK	1	1	1	2	1	1	1	3
US	1	1	1	2	1	1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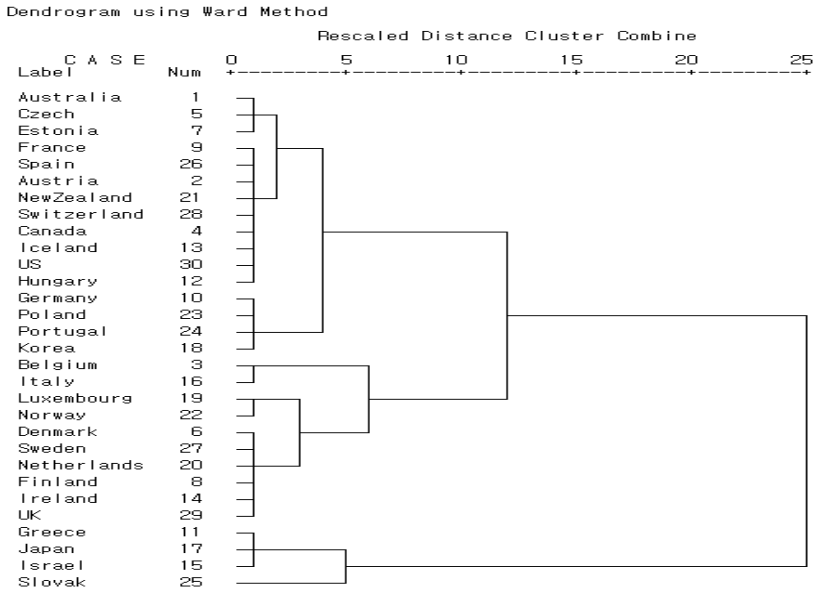
[그림 3-27] 군집분석 결과 A :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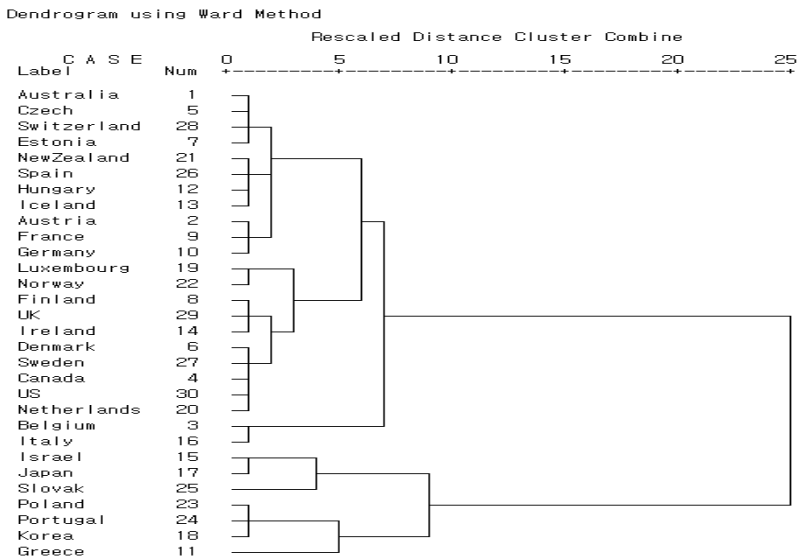
[그림 3-28] 군집분석 결과 A :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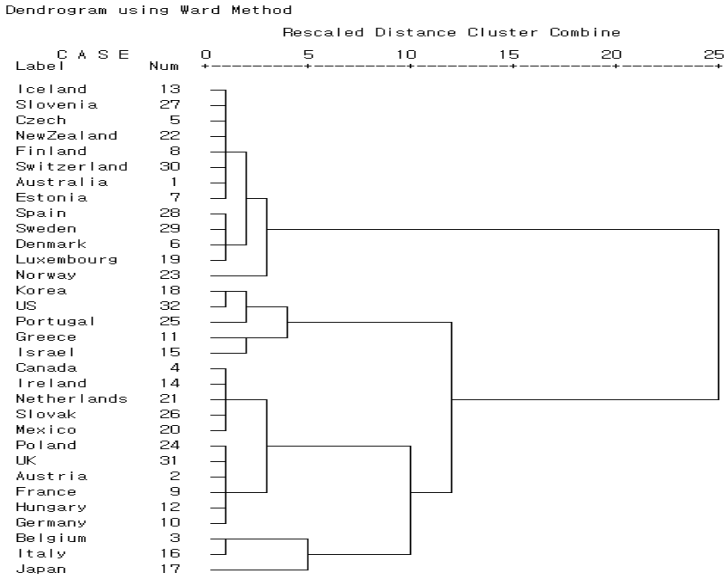
[그림 3-29] 군집분석 결과 B :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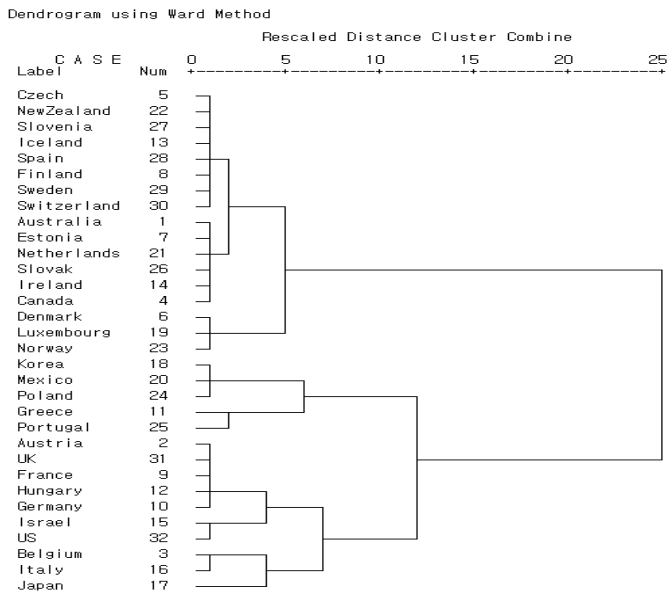
[그림 3-30] 군집분석 결과 B :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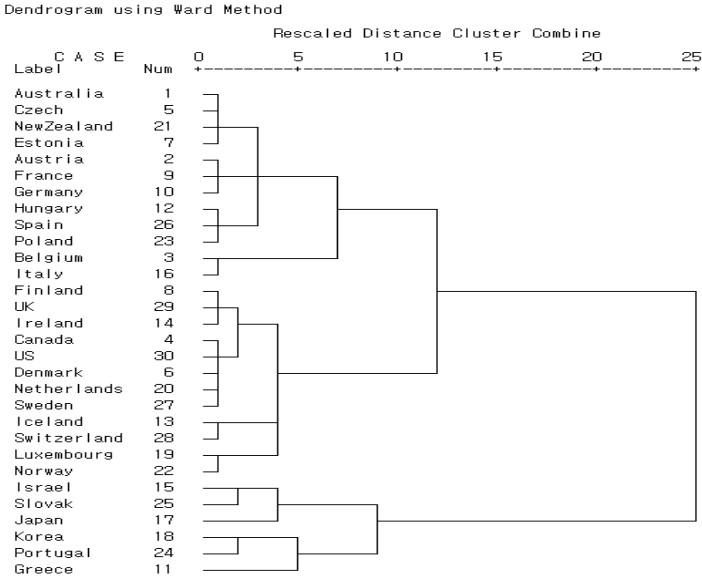
[그림 3-31] 군집분석 결과 C :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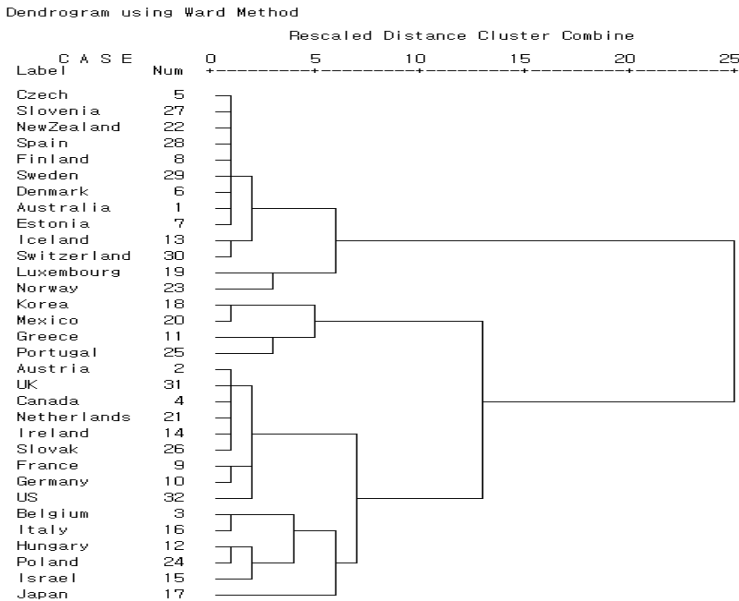
[그림 3-32] 군집분석 결과 C :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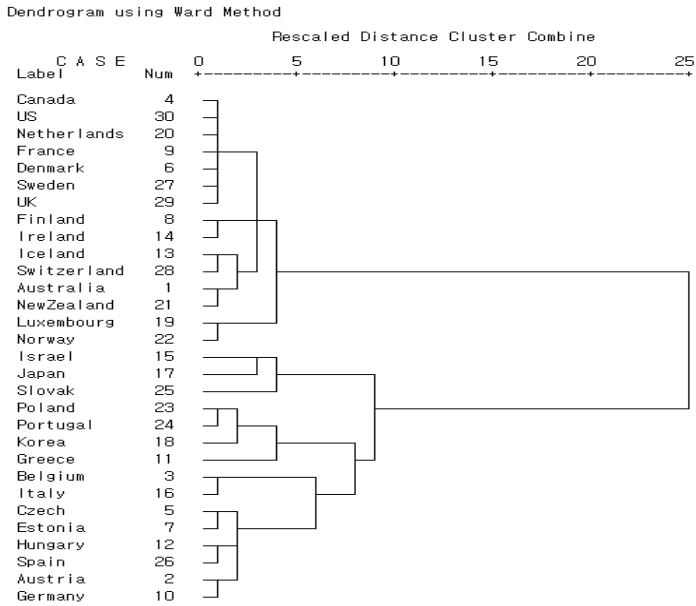
[그림 3-33] 군집분석 결과 D :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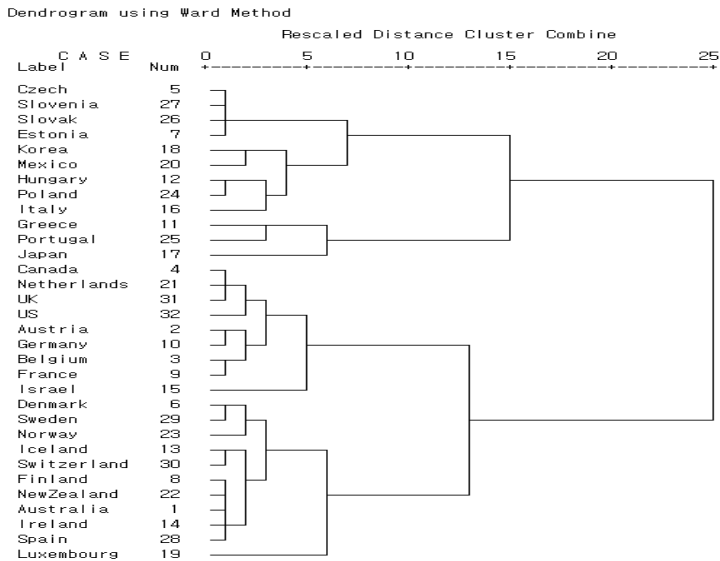
[그림 3-34] 군집분석 결과 D :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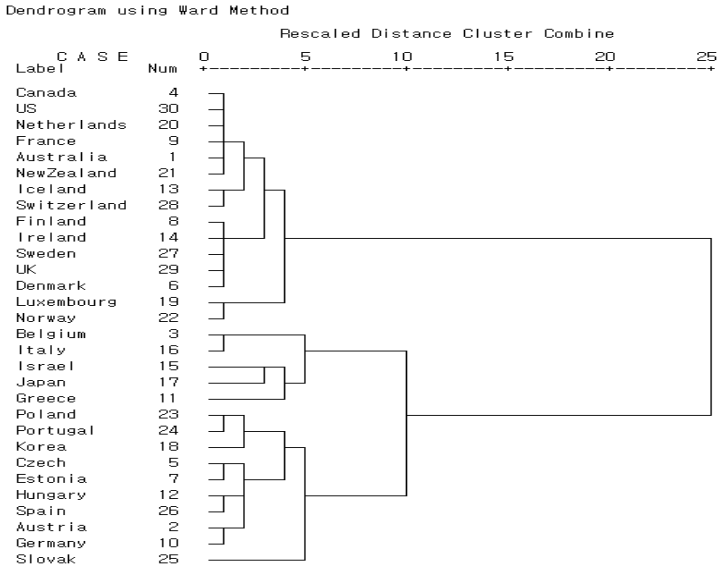
[그림 3-35] 군집분석 결과 E :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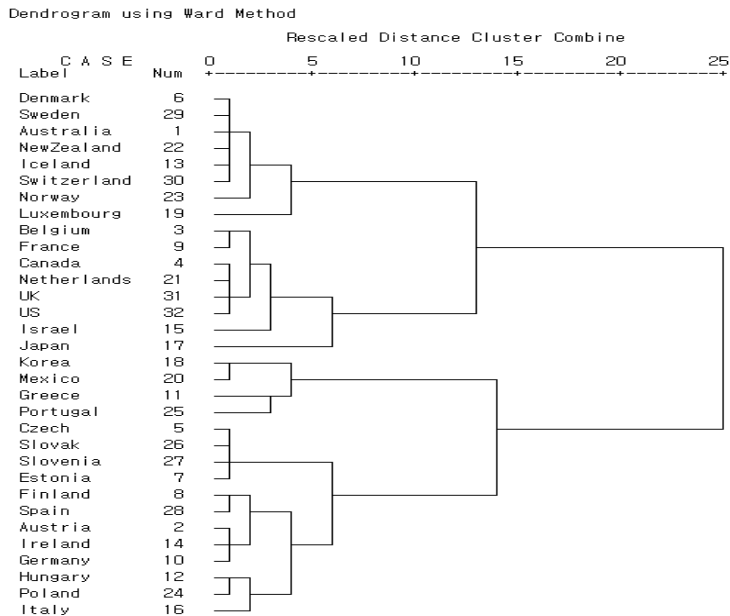
[그림 3-36] 군집분석 결과 E :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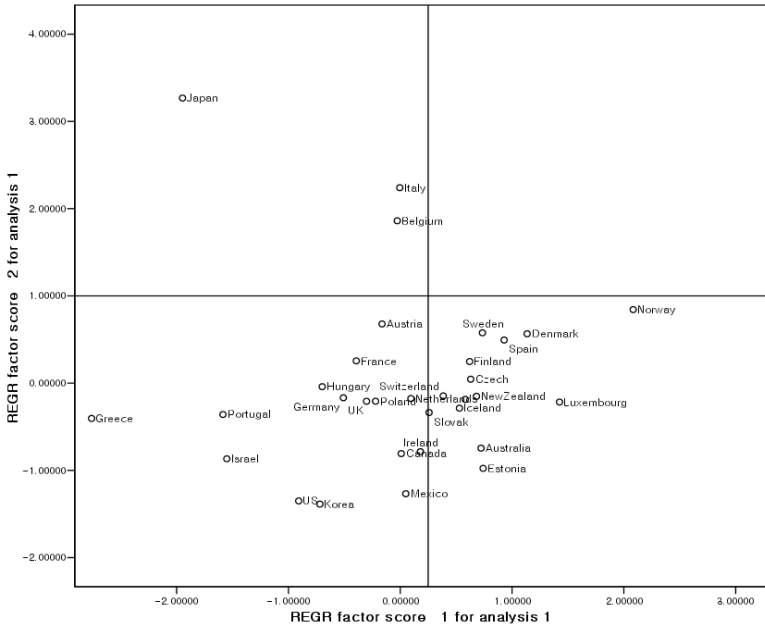
[그림 3-37] 군집분석 결과 F : 2000



[그림 3-38] 군집분석 결과 F : 2007



[그림 3-39] 산포도 - 2007년 분석B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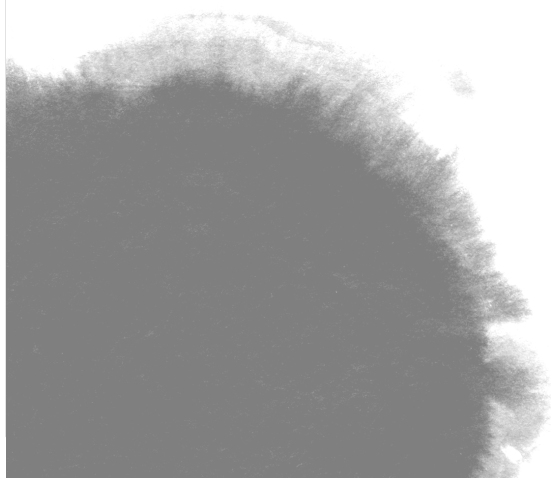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제4절 소결

제 2장의 소결에서는 재정불균형요인을 중심으로 국가분류를 실시하였다. 재정불균형정도별로 그리고 복지부분과 기타부분의 균형재정에의 부정적인 기여도별로 구분한 것이다. 제 3장의 군집분석은 2장의 국가별 유형분류를 Cluster 분석으로 재확인하는 동시에 고용구조변수를 추가한 상태에서 국가별 유형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재정불균형요인과 고용구조요인이 결합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그리스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재정불균형이 10%이상이면서 재정불균형에 대한 기여도 면에서는 복지지출 보

다는 기타재정지출부분이 더 큰 특징을 갖고 있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민간고용의 비중, 서비스종사자비중, 공업종사자비중 등 고용구조변수를 더 추가함에도 한국, 그리스, 멕시코, 포르투갈은 동일한 국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남유럽 국가 중에서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국가군임에는 틀림이 없다. 멕시코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서 기타재정지출비중이 더 큰 국가에 속한다. 이러한 군집분석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지출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기타부분의 재정지출과 복지지출간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므로 점진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을 줄여갈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4장

재정건전성과 재정부담능력



제4장 재정건전성과 재정부담능력

제1 절 패널분석을 이용한 거시지표의 재정건전성에의 파급 효과분석

1.개요

재정건전성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정부부채를 대리변수로 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정부부채수준의 결정요인을 통해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이 정부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볼 수 있으며 관련 변수들의 계수 값의 방향성은 향후 책 수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정건전성은 개별경제주체들의 재정부담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국가들이 경우 국민부담률이 높다는 등의 직관적인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국민경제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결정재정건전성의 악화는 생산, 분배, 소비의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또한 과도한 국가채무는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낮추어 정부의 정책재량을 제약한다. 그러나 재정규모의 총량적 규제에 집착할 경우 재정건전성의 회복과정에서 복지지출이 감소하고 가계부문의 채무가 증가하여 분배구조는 악화되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강병구, 2010).

복지국가 레짐에 대한 연구는 에스핑엔더슨(1990) 연구 이래,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관련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북유럽 보편주의, 영미형 자유주의, 대륙형보수주의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여기에 남유럽형 복지체제 그리고 동아시아형 복지체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유근춘, 2011)

2. 분석자료 및 방법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는 재정수지, 국가부채, 정부부채 등이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다. 이중 부채의 경우 전년도 부채가 다음 연도 부채까지 축적되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정연도와 재정과 그해에만 사용된 지출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적절치 않지만(정의룡 외 2012), 횡단면자료가 시계열로 축적된 패널자료의 경우 부채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인과관계를 더 정확히 살펴볼 수 있으므로 정부부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패널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재정건전성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가. 분석자료

OECD 국가들의 정부부채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GDP 대비 중앙정부부채를 종속변수를 설정하고 정부지출 및 인구 그리고 노동관련 지표들을 독립변수로 활용한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OECD국가의 재정건전성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OECD의 SOCX 자료와 Revenue Statistics, 그리고 세계은행의 WDI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노동생산성은 Labour productivity growth in the total economy(OECD.stat)을 활용하였다.

나. 분석방법

주요 거시변수들이 OECD 국가들의 정부부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GDP 대비 중앙정부부채를 종속변수를 설정하고 정부지출, 인구 그리고 노동관련 지표들을 독립변수로 활용한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중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을 적용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은 회귀모형의 오차항이, 관측되지 않지만 시간불변의 오차항과 말 그대로 시간과 각 케이스에 따라 변화하는 순수한 오차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시간불변의 오차항을 확률변수가 아닌 파라미터로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직관적으로 OECD 자료의 경우 무작위 추출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효과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그리고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확률효과 모형보다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3. 분석결과

〈표 4-1〉 패널 데이터 분석 모형 I (고정효과 모형)

종속 : GDP 대비 정부부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변수명		Coef.	S. E.	Coef.	S. E.	Coef.	S. E.
GDP대비 총지출	te_gdp	1.3687***	0.1508				
GDP대비공공사회지출	soc_gdp			0.5965*	0.3060	0.8977***	0.3243
GDP대비가타지출	etc_gdp					1.3929***	0.1958
GDP대비 조세수입	tr_gdp	-0.6542***	0.2198	0.2424	0.2071	-0.1587	0.2298
ln(인구)	lnpop	-0.5217***	0.0860	-0.5062***	0.0760	-0.4914***	0.1048
65세이상 인구비율	r_pop65	7.8619***	0.3116	6.9892***	0.3536	8.4496***	0.3699
실업률	r_unempl	1.8532***	0.2235	2.4445***	0.2014	1.8061***	0.2308
노동생산성	labor_p	-0.5246**	0.2608	-0.3927*	0.2331	-0.3343	0.2743
GDP 증가율	gdp_r	1.0762***	0.2062	0.8790***	0.2221	1.2517***	0.2320
상수	_cons	3.9114***	0.8207	4.0181***	0.7115	3.4415***	1.0088

주: sig. * < 0.1, ** < 0.05, *** < 0.01

〈표 4-2〉 패널 데이터 분석 모형 II (고정효과 모형)

		모형 4		모형 5		모형 6	
변수명		Coef.	S. E.	Coef.	S. E.	Coef.	S. E.
GDP대비 공공사회지출	soc_gdp	1.0642***	0.3468	0.898***	0.331	1.0219***	0.3458
GDP대비 기타지출	etc_gdp	0.8344***	0.2080	1.469***	0.198	0.8572***	0.2080
GDP대비 조세수입	tr_gdp	0.2456	0.2784	-0.079	0.230	0.3745	0.2785
ln(인구)	lnpop	-1.0532***	0.1369	-0.275**	0.134	-0.5935***	0.1878
65세이상 인구비율	r_pop65	8.8892***	0.5425	9.896***	0.525	10.2711***	0.6618
실업률	r_unempl	2.1120***	0.2311	1.653***	0.251	2.2300***	0.2674
노동생산성	labor_p	-0.4202	0.2738	-0.329	0.271	-0.3962	0.2702
GDP 증가율	gdp_r	1.4473***	0.2484	1.170***	0.230	1.2951***	0.2490
민간고용 대비 자영업종사자비중				0.941***	0.296	0.4344	0.3671
민간고용 대비 서비스종사자 비중				-0.526**	0.229	-0.9057***	0.2865
GDP대비 수출입비중	trade_d	-0.1570***	0.0512			-0.1131**	0.0548
상수	_cons	8.6901***	1.2959	1.297	1.233	4.5468***	1.7266

주: sig. * < 0.1, ** < 0.05, *** < 0.0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1의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즉 국가의 부채비율은 GDP대비 총지출이 증가할 때,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높아질 때, 실업률이 높아질 때, GDP증가율이 높아질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DP대비 조세수입의 비중, 인구의 자연로그값, 그리고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의 총지출에서 복지지출 부문만 분리하여 모형에 삽입한 것으로 GDP대비 공공사회지출이 증가할 때 정부부채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이상 인구 비중, 실업률의, GDP 증가율의 경우 여전히 정부부채 증가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인구의 자연로그값,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부채비중 변화에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것은 모형1과 달리 모형 2에서는 GDP대비 조세수입의 비중인 더 이상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모형 3에서 6까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직관적으로 볼 때 조세수입이 높아질 때 정부부채의 비중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모형 3의 경우 모형 1과 파라미터의 방향성이 일치한다. 그리고 총지출의 비중을 복지지출과 복지를 제외한 지출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모두 부채비중 변화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는 GDP대비 공공사회지출과 기타지출을 디폴트로 하여 노동과 대외의존도와 관련한 변수를 추가한 경우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모형 4의 경우 모형 3에 대외의존도를 추가한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정부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의 경우 민간고용에서 자영업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것인데 자영업종사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 정부부채의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정부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모형 6은 모든 변수들을 고려한 결과로, 인구의 자연로그값과 GDP 증가율, 민간고용대비 서비스종사자의 비중이 정부부채의 비중의 변화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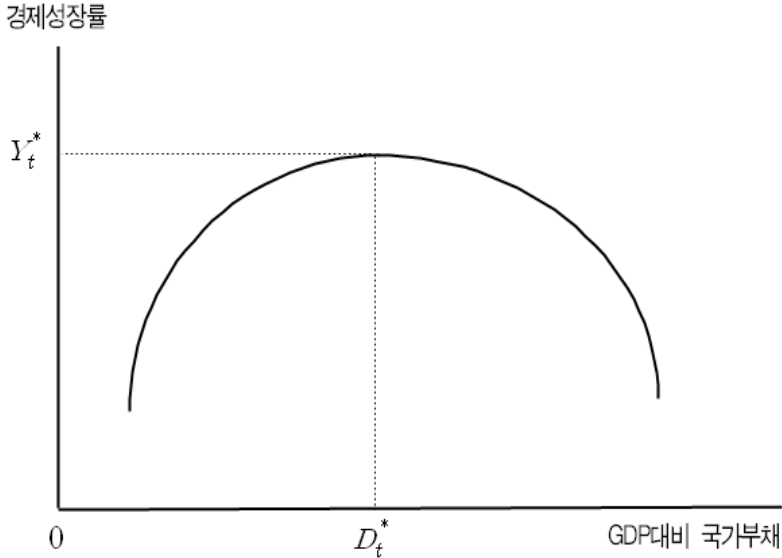
제2절 적정국가부채수준 분석

1. 이론적 배경

국가부채가 커진다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부담능력보다 높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과도할 경우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채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성장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추정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바람직한 부채수준을 파악하는데 벤치마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나, 국내외적으로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조성원, 2009). 적정채무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현재의 국가채무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지에 초점이 맞추어 있으며 현재의 국가채무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공공부의 적정채무비율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국의 데이터를 활용한 Smyth & Hsing(1995)와 경제성장률이 최대가 되는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한 조성원(2009) 연구들이 있다. 후자의 경우 Smyth & Hsing(1995)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OECD 회원국 중 선도적인 17개 국가의 연간데이터(1998~2008)를 활용, 회귀분석을 통하여 적정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하였다. 위 연구는 국가부채와 경제성장률간에 역 U자 형태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국가부채가 일정수준까지는 부채 증가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증가하지만 일정시점을 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기본가정으로 한다.

[그림 4-1] 국가채무와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자료 :조성원 외(2009), 19p 그림 III-2 인용

그리고 10개국의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경제규모가 GDP 기준으로 3000억 달러 미만인 OECD 회원국) 이 국가들에 대한 적정채무비율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적용된 방법론을 따라 OECD국가들의 적정채무비율을 추정하고자 한다. 정부채부비율은 OECD.Stat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앙정부부채(Central Government Debt)을 활용하였다.

2. 적정부채수준의 추정

적정부채수준에 대한 모형은 Smyth & Hsing(1995)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경제성장모형의 경우 보통 종속변수를 GDP 또는 GDP 증가율성장률로 설정하고 이것을 노동과 자본 등의 변수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정부의 부채수준을 추가로 고려하였

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추가되는 변수에 따라 계수값 및 통계적 유의성이 민감하게 변화되어 가장 기본적인 변수들 활용하여 부채수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모형은 아래와 같다.

$$(1) \quad Y_t = \beta_0 + \beta_1 D_t + \beta_2 D_t^2 + \beta_3 L_t + \beta_4 K_t$$

$$(2) \quad \frac{dY_t}{dD_t} = \beta_1 + 2\beta_2 D_t = 0$$

$$(3) \quad D_t^* = - \frac{\beta_1}{2\beta_2}$$

추정방법으로는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중 고정효과(Fixed-effect) 모형을 활용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은 데이터의 분포 형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일반적인 회귀분석이 아니라 패널분석을 활용해야 될 경우, Hausman 검정 등에 의해 귀무가설의 기각과 상관없이 일치 추정량을 보일 수 있는 안정적인 추정방법이다.

즉, 회귀모형의 오차항이 관측되지는 않지만 시간불변의 오차항과 말 그대로 시간과 각 케이스에 따라 변화하는 순수한 오차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시간불편의 오차항을 확률변수가 아닌 파라미터로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직관적으로 OECD 자료의 경우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효과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지만 아래 OECD 16개국 분석의 경우 Hausman Test의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고정효과 모형보다 확률효과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Hausman Test는 고정효과 모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닌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둘 다 일치추정량이라는 의미이므로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였다.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할 경우 정부부채가 GDP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본 분석에서는 활용하지 않았다. 반면, 영미형국가와 북유럽 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표 4-3〉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및 적정부채비율

고정효과모형	OECD 주요 16개국		영미형 국가		북유럽 4개국	
변수 (종속 : 경제성장률)	Coef.	S. E.	Coef.	S. E.	Coef.	S. E.
정부부채/GDP	0.0659**	0.0275	0.1349***	0.0433	0.1418***	0.0535
(정부부채/GDP) ²	- 0.0605**	0.0289	-0.1514***	0.0476	-0.1097**	0.0533
총고용증가율	0.1787***	0.0369	0.2903***	0.0952	0.1426	0.1182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	0.1852***	0.0110	0.1681***	0.0244	0.2134***	0.0318
상수	0.0017	0.0058	-0.0074	0.0083	-0.0219*	0.0123
R ²	0.5721		0.5490		0.6580	
F Test	F(14, 382) = 1.71*		F(5, 139) = 2.96**		F(3, 103) = 5.74***	
Hausman Test	chi2(4) = 0.3431		chi2(4) = 9.55**		chi2(4) = 15.20***	
적정부채비율	54.4%		44.6%		64.6%	

주: sig. * < 0.1, ** < 0.05, *** < 0.01

하지만 추정식 (1)의 경우 내생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채를 추정하는 회귀식에서 GDP 증가율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채를 추정하는 회귀식과 위 경제성장률 회귀식 사이에는 상호인과관계로 인한 내생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 최소자승법(2sls) 적용하였지만 계수 값이 불안정하고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져 본 분석에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합동(Pooled) OLS의 경우도 계수 값이 직관적인 수준에서 벗어나고 유의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위에 있는 F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고정효과 모형이 pooled 회귀분석보다 적합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1의 경우 정부부채가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부채의 제공은 부(-)의 값인 것으로 나타나 부채가 역 U자 형태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즉 부채가 증가하면 일정수준까지는 GDP증가율에 정(+)의 효과를 미치지만 일정수준이 지나면 부(-)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과 자본의 증가율은 경제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는 영미형국가와 북유럽 4개국을 분석한 모형 2와 모형 3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3개의 모형 모두 국가의 부채가 역 U자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성장률을 최대로 하는 적정부채수준은 모형 1, 즉 OECD 주요 16개국의 경우 GDP대비 54.4%, 영미형국가의 경우 GDP 대비 44.6, 북유럽 국가의 경우 6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유럽 국가의 경우 이에 상응한 정도의 국가채무 수준이 영미형 국가나 OECD 16개국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조세수입의 세목별구성비중과 재정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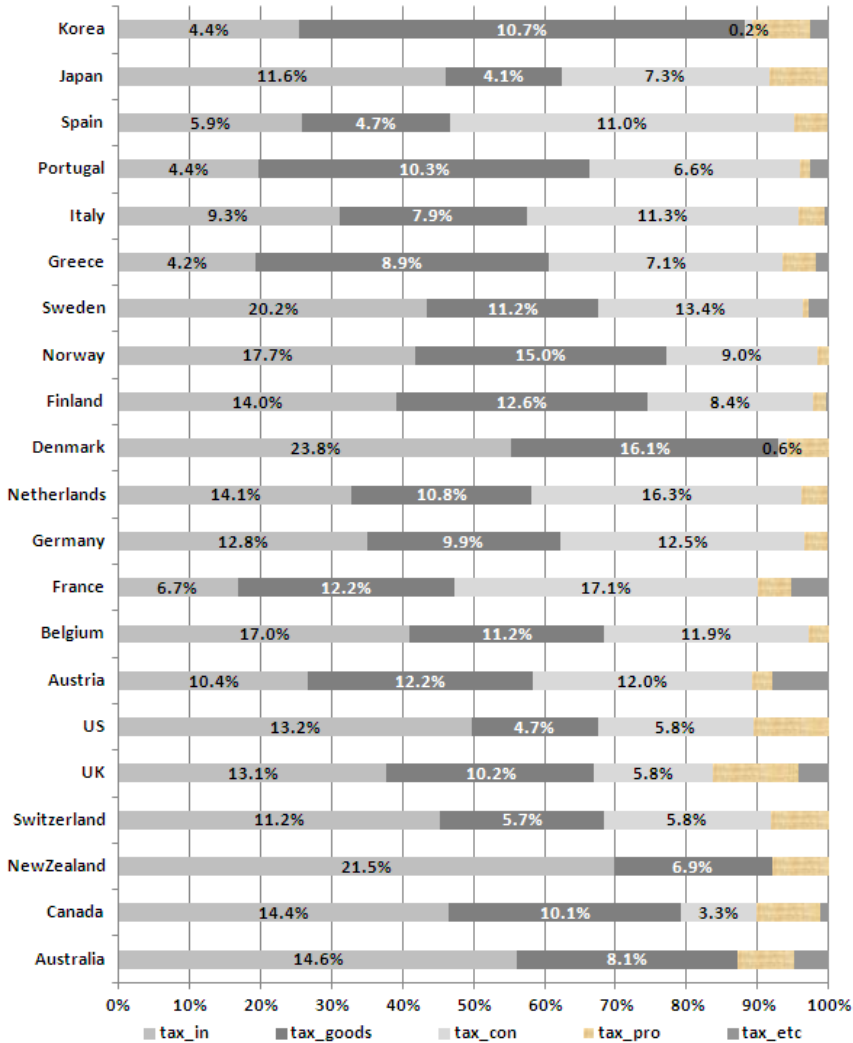
1. OECD 국가의 조세수입 세목별 구성비중

OECD 주요 국가들에서 총조세수입, 즉 국민 부담률을 구성하는 세목의 비중을 1980, 1990, 2000, 2007년 시기별로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가. 1980년대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수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 국가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부가가치세수입의 비중이 소득세수입비중 보다 높은 국가는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그리고 오스트리아이다.

[그림 4-2] OECD국가들의 총조세수입(GDP대비)의 구성 비교 1 : 19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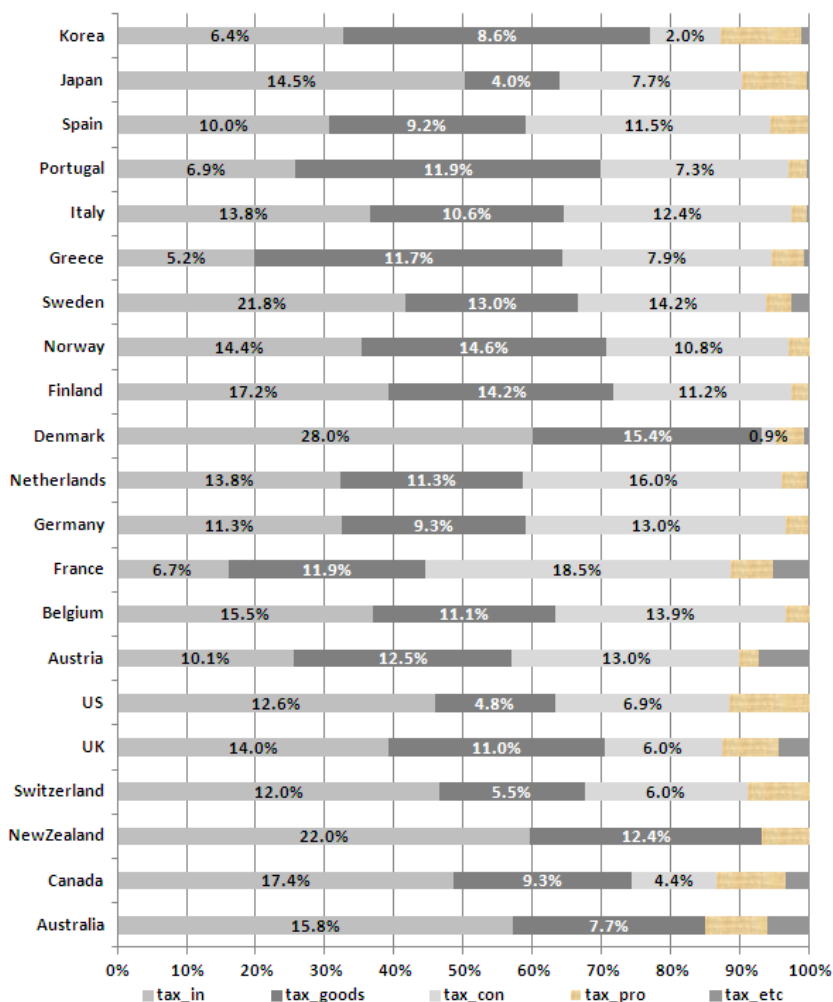


나. 1990년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소득세수입비중은 GDP대비 6.4%로 증가하였고 부가가치세수입은 8.6%로 감소하였다. 포르투갈과 그리

스의 소득세수입비중은 1980년대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고 프랑스와 오스트레일리아는 거의 변화가 없다. 스페인은 1990년대 들어서 소득세수입비중이 급증하였고 이탈리아도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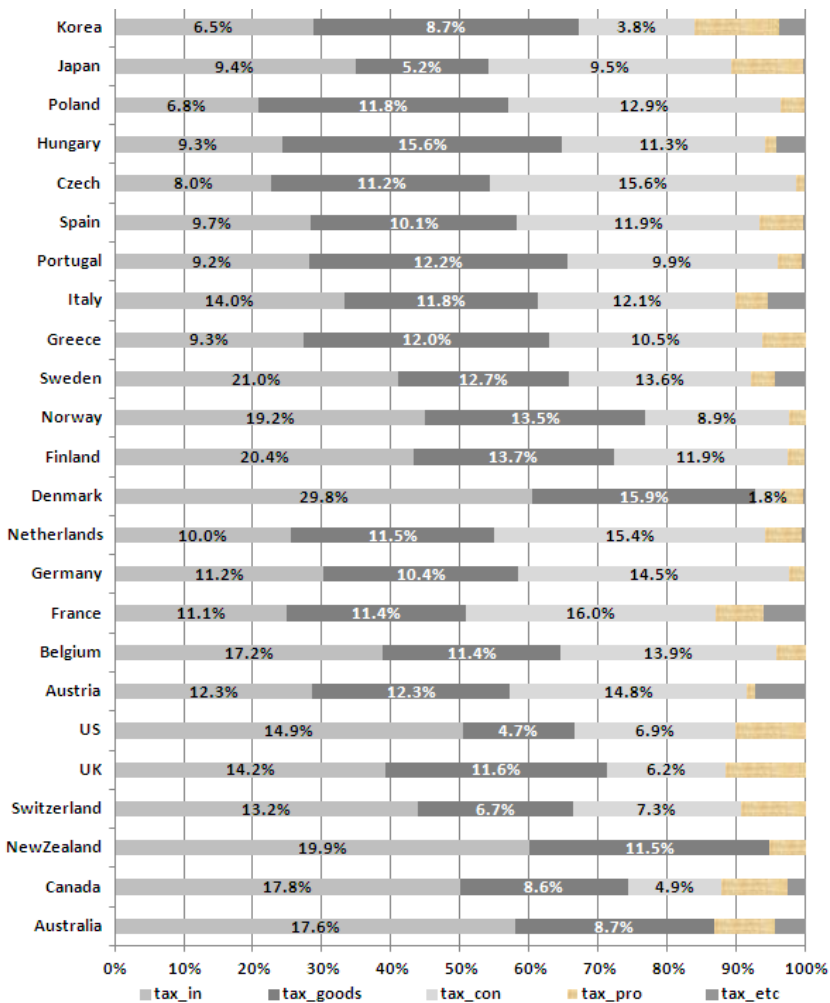
[그림 4-3] OECD국가들의 총조세수입(GDP대비)의 구성 비교 2 : 1990년



다. 2000년대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 소득세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9.4%로 오히려 감소하고 포르투갈은 9.2%, 그리스는 9.3%, 그리고 프랑스는 11.1%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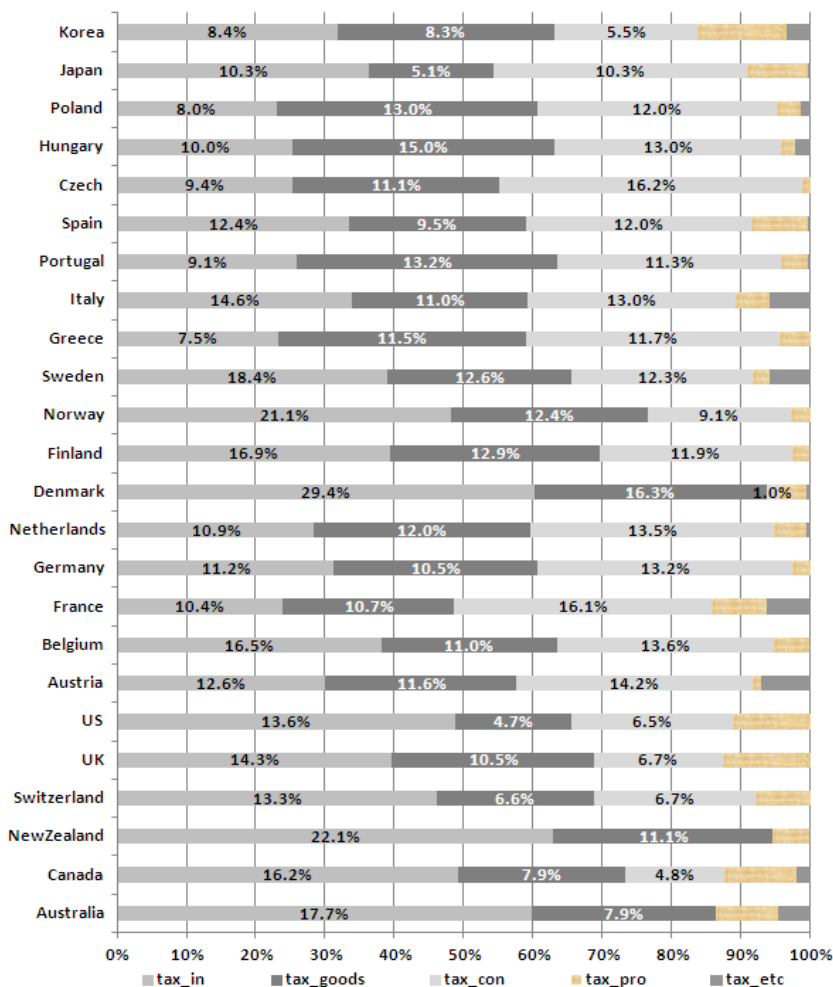
[그림 4-4] OECD국가들의 총조세수입(GDP대비)의 구성 비교 3 : 2000년



라. 2007년 기준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 소득세수입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8.4%로 조사되었다. 포르투갈과 이탈리아는 2000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으나 그리스는 소득세수입비중이 2000년 9.3%에서 2007년 7.5%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4-5] OECD국가들의 총조세수입(GDP대비)의 구성 비교 4 :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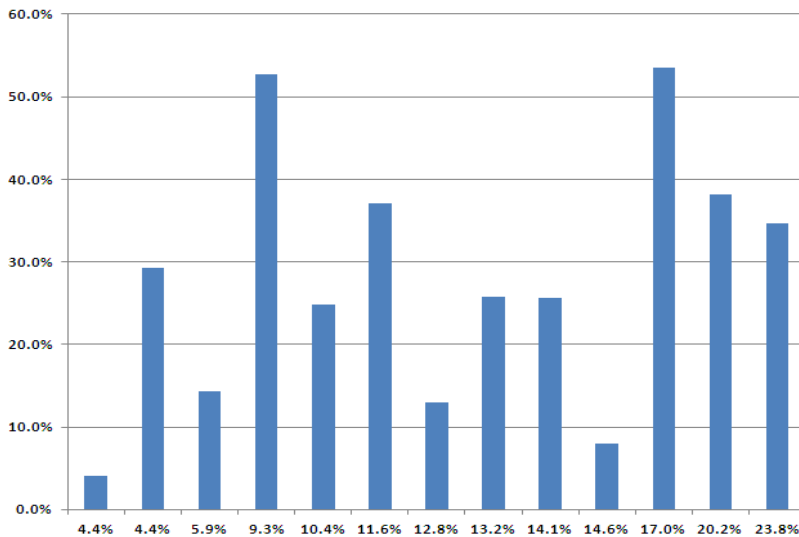
2. 소득세비중과 정부부채

시기별로 소득세수입의 비중과 정부부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가. 1980년대

1980년대 기준으로 소득세수입비중과 국가부채의 GDP대비비중간의 관계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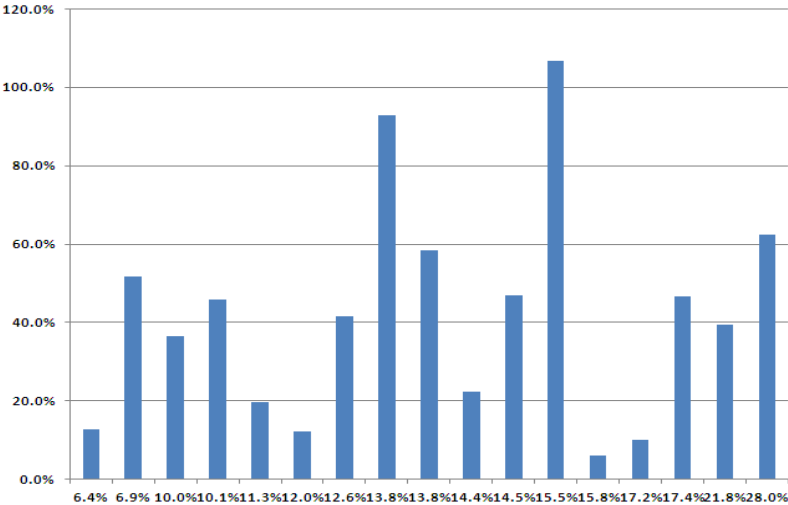
[그림 4-6] OECD국가들의 소득세비중 증가에 따른 정부부채 비중 : 1980년



나. 1990년대

1990년대의 경우에도 소득세수입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부채의 규모에는 어떠한 패턴도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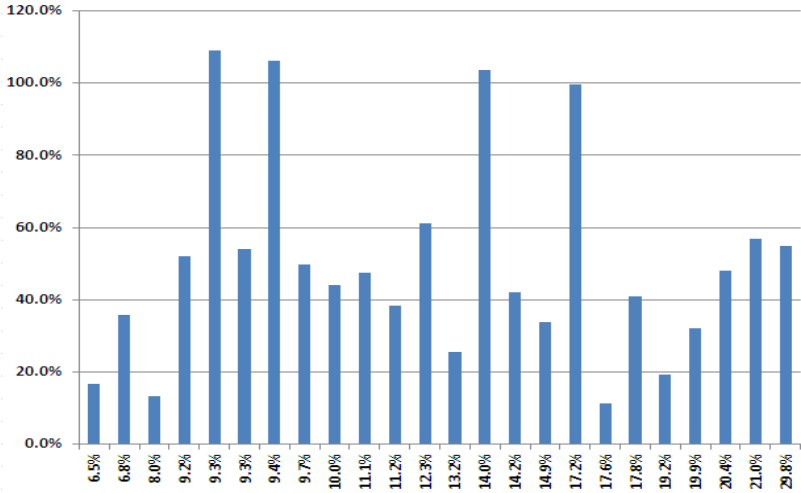
[그림 4-7] OECD국가들의 소득세비중 증가에 따른 정부부채 비중 : 1990년



다. 2000년 기준

2000년 통계상으로도 소득세수입비중과 정부부채간에는 어떠한 패턴도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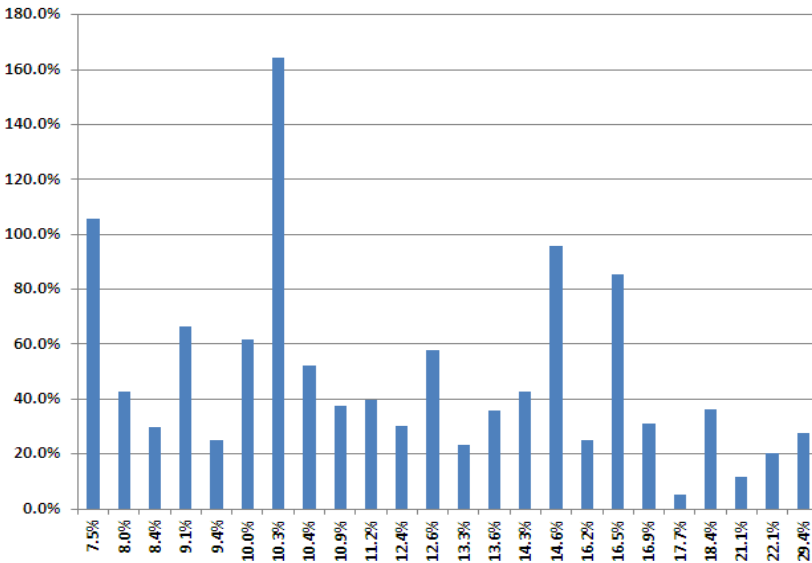
[그림 4-8] OECD국가들의 소득세비중 증가에 따른 정부부채 비중 : 2000년



라. 2007년 기준

2007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소득세수입의 GDP대비비중이 16%이상인 국가의 국가부채(GDP 대비)는 20%내외로 통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9] OECD국가들의 소득세비중 증가에 따른 정부부채 비중 : 2007년



3. 세목비중과 정부부채 및 공공사회지출과의 상관관계분석

조세수입의 세목을 소득세, 상품세(부가가치세),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세, 기타조세 등으로 구분하고 정부부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부가가치세수입비중이 증가하면 정부부채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부채와 사회보장기여금수준, 공공사회지출수준과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 GDP대비 정부부채와 세목비중 그리고 공공사회지출과의 상관관계

정부부채	전체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소득과세	0.033	0.012	0.738	0.464***	0.436***	0.323**	0.368
상품과세	0.117***	0.166**	0.241***	0.098	0.451***	0.776***	-0.562***
사회보장기여금	0.327***	0.452***	0.006	-0.217**	0.305***	-0.383***	0.794***
재산세	-0.012	0.569***	0.104	0.486***	0.197**	0.200	0.282**
기타조세	-0.009	-0.407***	-0.152*	0.253***	0.304***	0.721***	-0.616***
국민부담률	0.292***	0.519***	0.675***	0.607***	0.581***	0.496***	0.615***
공공사회지출	0.321***	0.470***	0.245***	0.561***	0.429***	0.862***	0.922***

주: sig. * < 0.1, ** < 0.05, *** < 0.01

공공사회지출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재산세수입비중과 공공사회지출 간에 음(-)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GDP대비 공공사회지출과 정부부채 그리고 세목비중과의 상관관계

공공사회지출	전체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정부부채	0.321***	0.470***	0.245***	0.561***	0.429***	0.862***	0.922***
소득과세	0.398***	0.340***	0.106	0.176*	0.749***	0.232	0.548***
상품과세	0.592***	0.602***	0.067	-0.251***	-0.062	0.271*	-0.748***
사회보장기여금	0.548***	0.050	0.253***	0.299***	0.894***	-0.754***	0.974***
재산세	-0.289***	0.279***	0.140	0.289***	0.516***	0.640***	0.186
기타조세	0.257***	-0.246***	0.361***	0.521***	0.331***	0.275*	-0.805***
국민부담률	0.890***	0.727***	0.454***	0.690***	0.851***	-0.134	0.801***

주: sig. * < 0.1, ** < 0.05, *** < 0.01

소득세를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세분하고 사회보장기여금을 고용주부분과 피고용주부분으로 세분화하여 동일한 상관관계분석을 해 보았다.

법인소득세가 증가할수록 정부부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별소비세수입비중이 증가할수록 정부부채가 감소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표 4-6〉 GDP대비 정부부채와 세부 세목과의 상관관계

정부부채	전체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6
공공사회지출	0.321***	0.470***	0.245***	0.561***	0.429***	0.922***
개인소득세	0.053	-0.070	0.657***	0.645***	0.322***	0.428***
법인소득세	-0.089**	-0.495***	0.310***	-0.600***	0.392***	0.288**
사회보장기여금: 피고용자	0.100**	0.020	-0.314***	-0.497***	0.569***	0.866***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	0.235***	0.293	0.234***	0.174*	-0.060	0.768***
일반소비세	0.150***	0.431***	0.168*	0.191**	0.486***	-0.502***
특별소비세	-0.183***	-0.425***	0.065	0.023	-0.073	-0.714***

주: sig. * < 0.1, ** < 0.05, *** < 0.01

〈표 4-7〉 GDP대비 공공사회지출과 세부 세목과의 상관관계

공공사회지출	전체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6
정부부채	0.321***	0.470***	0.245***	0.561***	0.429***	0.922***
개인소득세	0.495***	-0.024	0.148*	0.334***	0.717***	0.579***
법인소득세	-0.177***	0.175*	-0.235***	-0.384***	0.668***	0.479***
사회보장기여금: 피고용자	0.228***	-0.149	-0.224***	-0.266***	-0.161*	0.992***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	0.666***	0.041	0.462***	0.513***	0.741***	0.943***
일반소비세	0.745***	0.847***	0.158*	0.066	0.461***	-0.687***
특별소비세	0.030	0.159*	0.155*	-0.403***	-0.728***	-0.904***

주: sig. * < 0.1, ** < 0.05, *** < 0.01

제4절 소결

국가부채와 조세수입의 비중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목간 편차와 국가부채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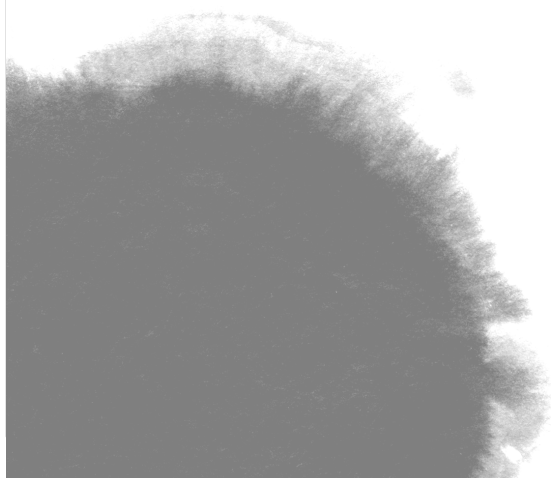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2008년 기준으로 편차수준이 높은 3분위 국가들은 소득세수입비중이 월등히 높은 국가군이다. 반면에 독일, 핀란드, 그리고 스페인은 3개 세목간 수입비중의 격차가 크지 않은 국가군이다. 이들 국가 모두 2008년 기준 GDP대비 국가부채가 40%이하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특징은 소득세비중이 높은 국가 중에서 국가부채가 높은 국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소득세비중이 높은 것이 반드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표 4-8〉 조세구성 평균의 표준편차와 부채수준

편차수준	2000 부채수준			2008 부채수준		
	~40%	40~70%	70%~	~40%	40~70%	70%~
낮음 (1분위)	Germany	Austria Spain Portugal France	Italy Greece Belgium	Germany Finland Spain	Austria Netherlands Portugal Hungary	Italy
중간 (2분위)	Poland Czech Norway	Netherlands Hungary Finland Sweden	Japan	Korea Sweden Czech	Poland France	Belgium Greece Japan
높음 (3분위)	Korea Switzerland US NewZealand Australia	UK Canada Denmark		Switzerland Norway Canada Denmark NewZealand Australia	UK US	

5장

결론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OECD국가의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을 파악하기 먼저, 정부지출을 복지지출과 기타지출로 구분하고 이 지출항목들과 조세수입간에 기여도 분석을 적용한 격차분석을 실시한 후 분석으로 도출된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국가들을 구분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결과들을 Cluster 분석을 통해 점검해보고 고용구조변수를 추가한 상태에서 국가별 유형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이어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주요 거시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고 적정부채수준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 부채수준을 세 구간으로 구분하고 OECD 국가들을 구간별 부채수준과 조세수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상품세·사회보장기여금의 편차수준으로 분류하여 그 함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무분석에 사용되는 기여도분석(Contribution Analysis)을 OECD 32개국의 재정지출과 조세수입간 격차분석에 적용해 보았다. GDP대비 재정수입과 지출간 괴리가 10% 이상인 국가는 그리스(-15.8%), 이스라엘(-10.0%), 포르투갈(-11.9%), 터키(-10.0%), 헝가리(-10.4%) 등으로 나타났고 프랑스(-8.9%), 영국(-7.9%), 독일(-7.5%), 그리고 미국(-9.0%) 등의 국가도 재정불균형이 심한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1%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복지지출 부분이 기타재정지출보다 상대적 비중이 높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기여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 중에서 이탈리아와 일본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국가부채수준(GDP대비)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스의 경우 복지지출의 비중보다는 기타재정지출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지출의 부정적인 기여도가 기타재정지출의 부정적인 기여도보다 2%이상 차이나는 국가는 독일(3.28%)뿐이다.

재정불균형이 심한 국가 중에서 복지지출부분의 불균형의 기여도가 큰 국가는 유럽의 대표적인 대륙형국가인 프랑스, 독일과 일본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는 복지지출 보다는 기타지출의 재정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포르투갈을 두 부분 모두 동일하게 재정불균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유럽국가중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재정불균형정도에서 양호한 수준인 5%미만으로 분류되었고 두 부분간 격차도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 복지부분의 부정적인 기여도가 크면서 실제 국가부채가 GDP대비 50%가 넘는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한 사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이러한 기여도분석을 통한 국가별유형분류를 Cluster 분석으로 확인하고 동시에 고용구조변수를 추가한 상태에서 국가별 유형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재정불균형요인과 고용구조요인이 결합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그리스,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재정불균형이 10%이상이면서 재정불균형에 대한 기여도 면에서는 복지지출 보다는 기타재정지출부분이 더 큰 특징을 갖고 있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민간고용의 비중, 서비스종사자비중, 공업종사자비중 등 고용구조변수를 더 추가함에도 한국, 그리스, 멕시코, 포르투갈은 동일한 국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남유럽 국가 중에서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국가군임에는 틀림이 없다. 멕시코 또한 사회보장 제도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서 기타재정지출 비중이 더 큰 국가에 속한다. 이러한 군집분석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지출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기타부분의 재정지출과 복지지출간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므로 점진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을 줄여갈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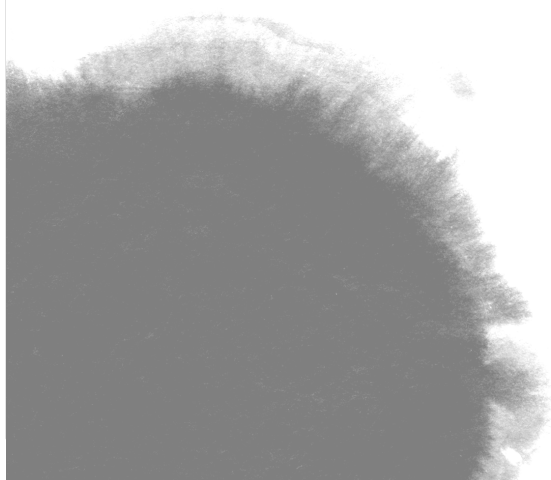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국가부채와 조세수입의 비중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목간 편차와 국가부채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으로 편차수준이 높은 3분위 국가들은 소득세수입비중이 월등히 높은 국가군이다. 반면에 독일, 핀란드, 그리고 스페인은 3개 세목간 수입 비중의 격차가 크지 않은 국가군이다. 이들 국가 모두 2008년 기준 GDP대비 국가부채가 40%이하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특징은 소득세비중이 높은 국가 중에서 국가부채가 높은 국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소득세비중이 높은 것이 반드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용성(2004). 복지지출 및 조세정책이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김태일(2011). 복지지출과 국가부채의 관계: OECD국가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경제포럼, 4(4)
- 노대명 외(2010). 한국형 사회정책 모형연구: 고용복지 연계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박형수(2004).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및 적정수준 분석. 재정포럼, 2004년 6월호
- 박형수(2004).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및 적정수준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현안분석
- 송호신(2009).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포럼, 2009년 2월호
- 안상훈(2003).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상이한 조합에 따른 경제성과와 복지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연구의 발표 자료
- 안종범·김을식(2004). 복지지출의 국제비교. 재정논집, 제19집 제1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안종범·안상훈·전승훈(2010).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의 적정 조합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4호. 한국사회보장학회
- 유근춘외(2011).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영(2011). 재정건전성, 경제위기, 그리고 복지제도. 한국경제포럼, 4(4)
- 이영(2011). 한국경제의 복지지출확대와 재정건전성. 한국경제학회 제3차 정책세미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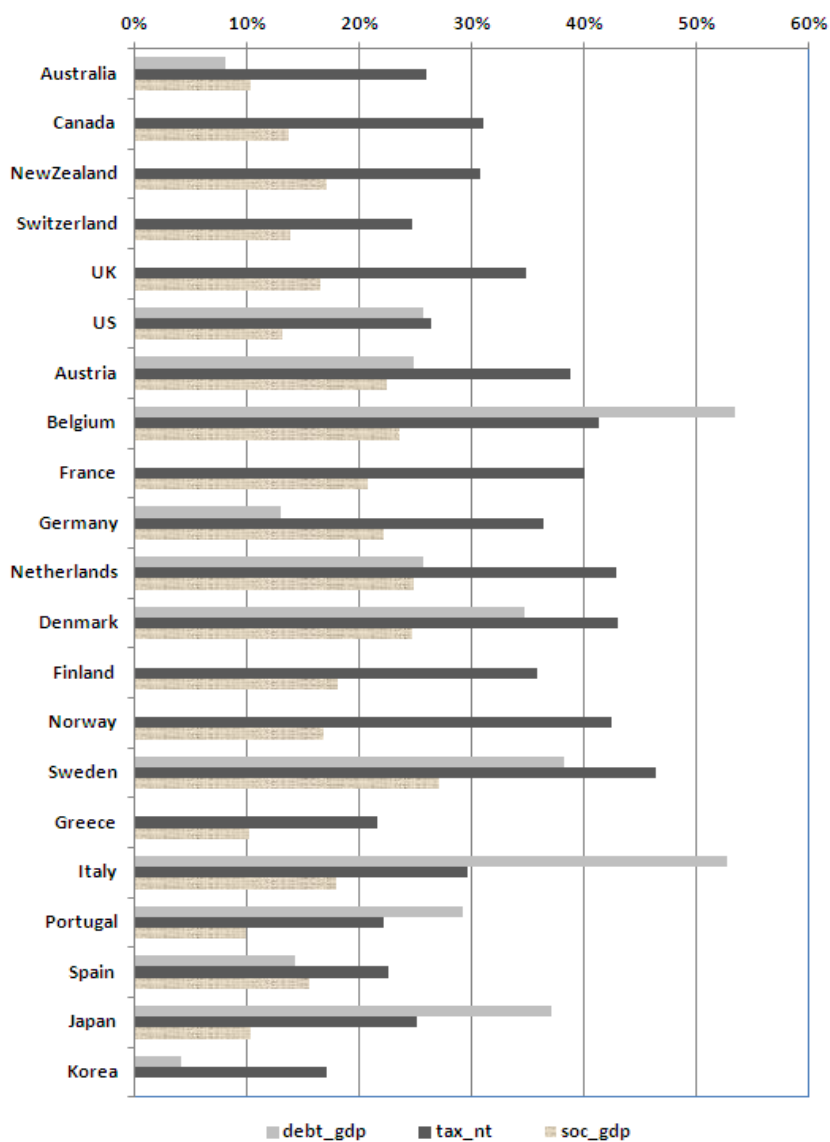
- 정의룡·임진영·양재진(2012). 복지와 재정건전성의 관계분석: OECD국가들의 사회투자형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3)
- 조성원(2009). 국가재추 수준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 Carl R. Bacon(2006). *Practical Portfolio Performance Measurement and Attribution*, John Wiley & Sons, Ltd
- Dieckhoener, C. and Peichl, A.(2009). *Financing social security: Simulating different welfare systems for Germany*. IZA DP No. 4135.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 Smyth&Hsing(1995). In search of an optimal debt ratio for economic growth,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13, pp.51-59
- OECD.stat
- OECD(2010a). *Revenue Statistics 2010: Special feature: Environmental Related Taxation*, Paris: OECD Publishing.
- _____(2011b). OECD Tax Database. www.oecd.org/ctp/taxdatabase
- The World Bank : <http://www.worldbank.org>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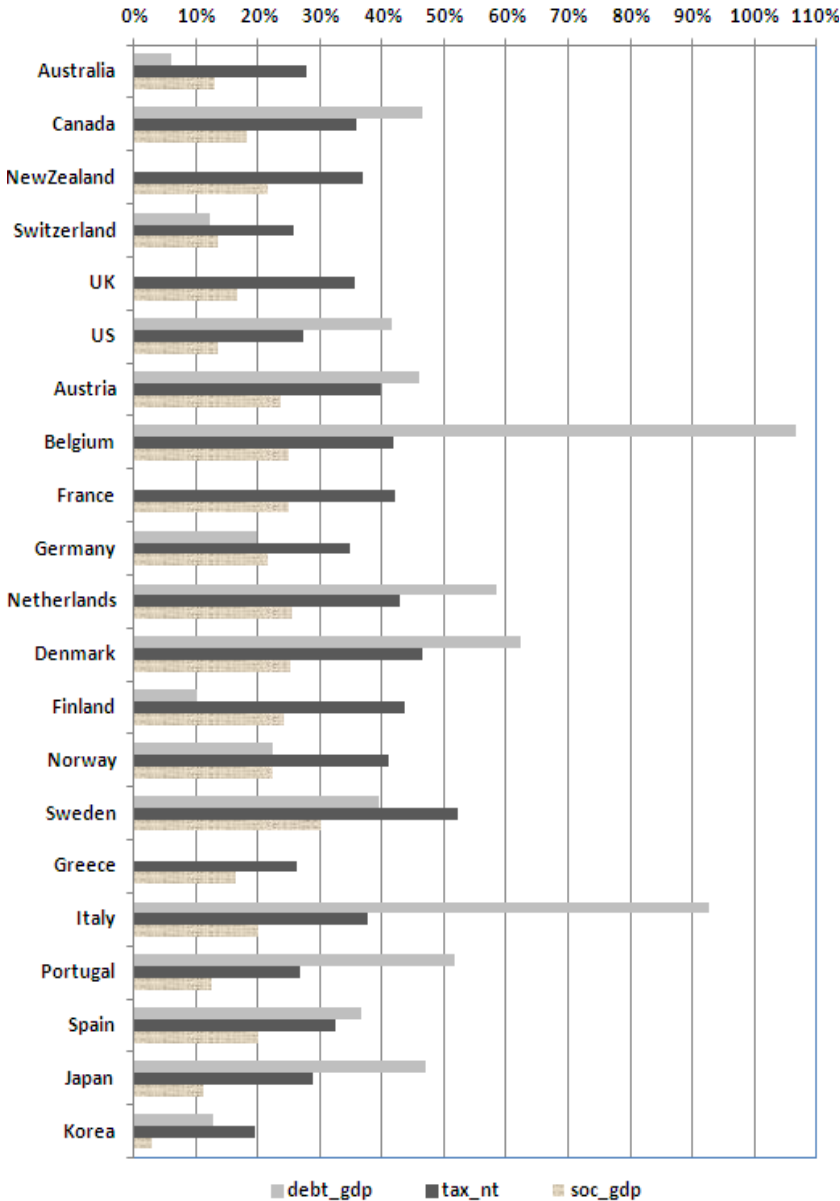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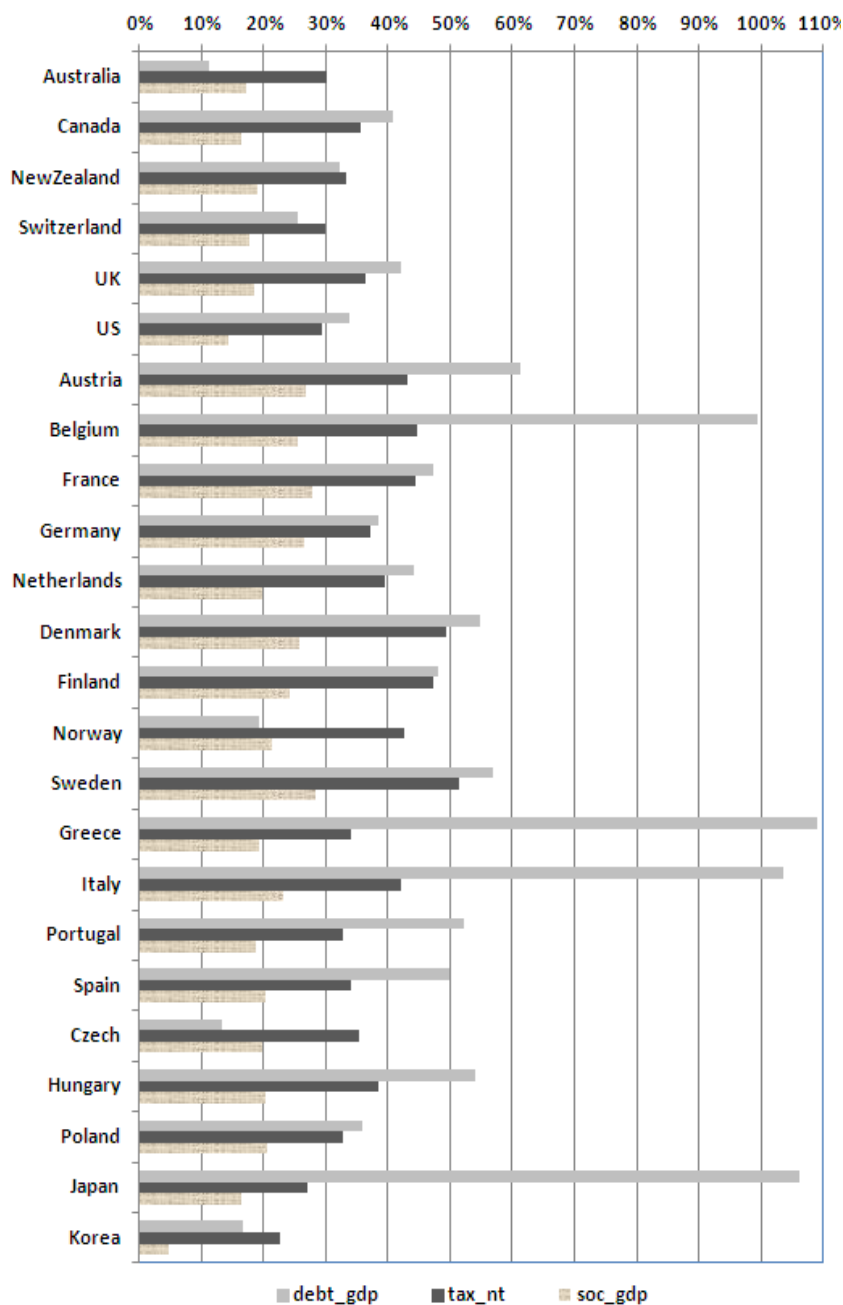
[부그림-1] OECD국가들의 정부부채·총조세수입·공공사회지출 비교 1 : 19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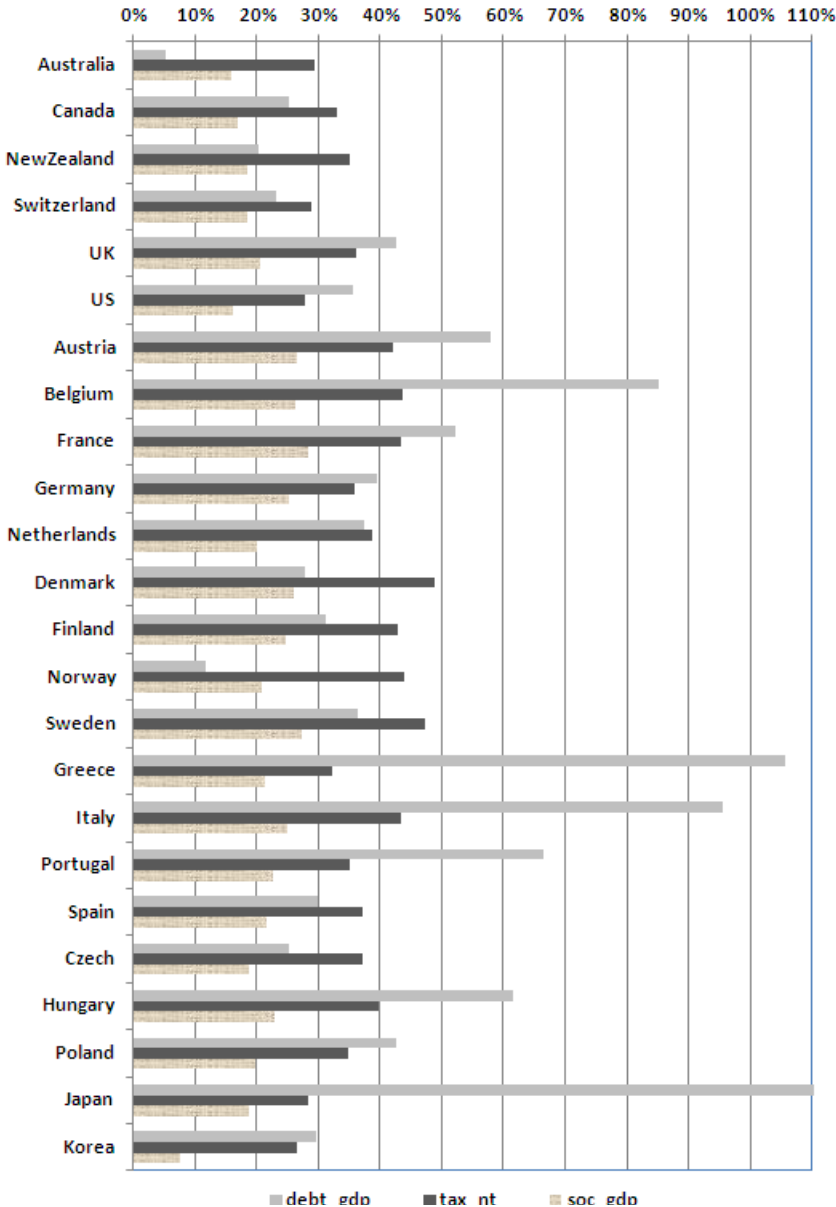
[부그림-2] OECD국가들의 정부부채·총조세수입·공공사회지출 비교 2 : 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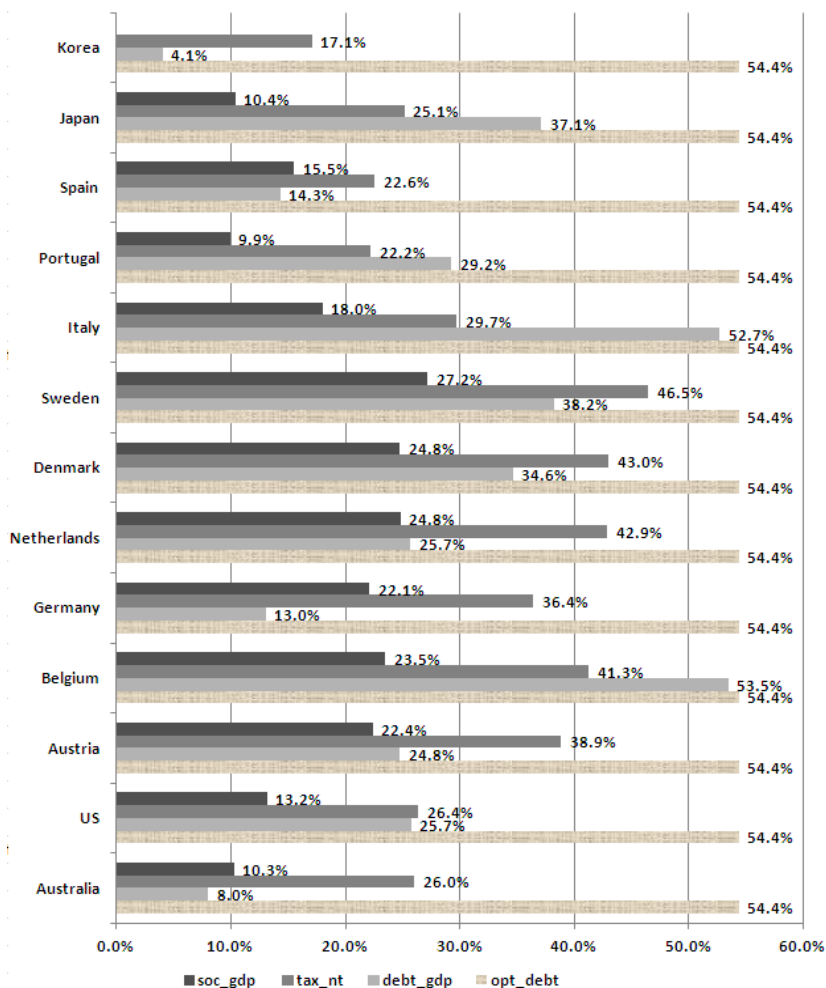
[부그림-3] OECD국가들의 정부부채·총조세수입·공공사회지출 비교 3 :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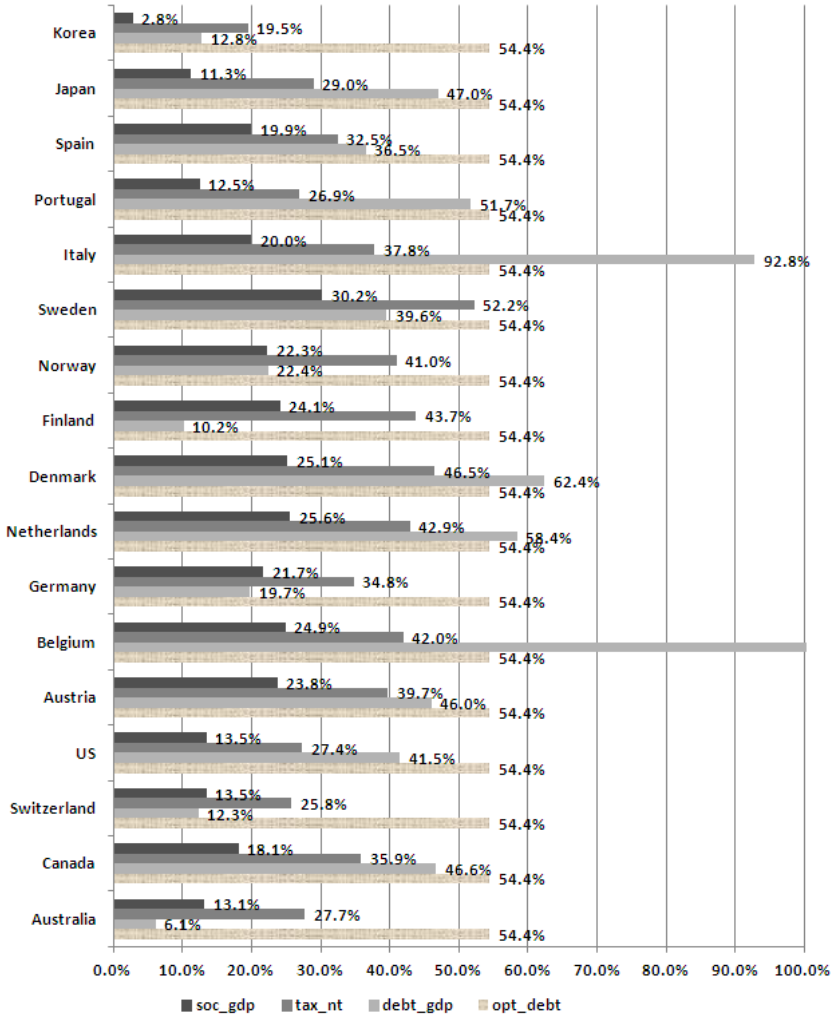
[부그림-4] OECD국가들의 정부부채·총조세수입·공공사회지출 비교 4 :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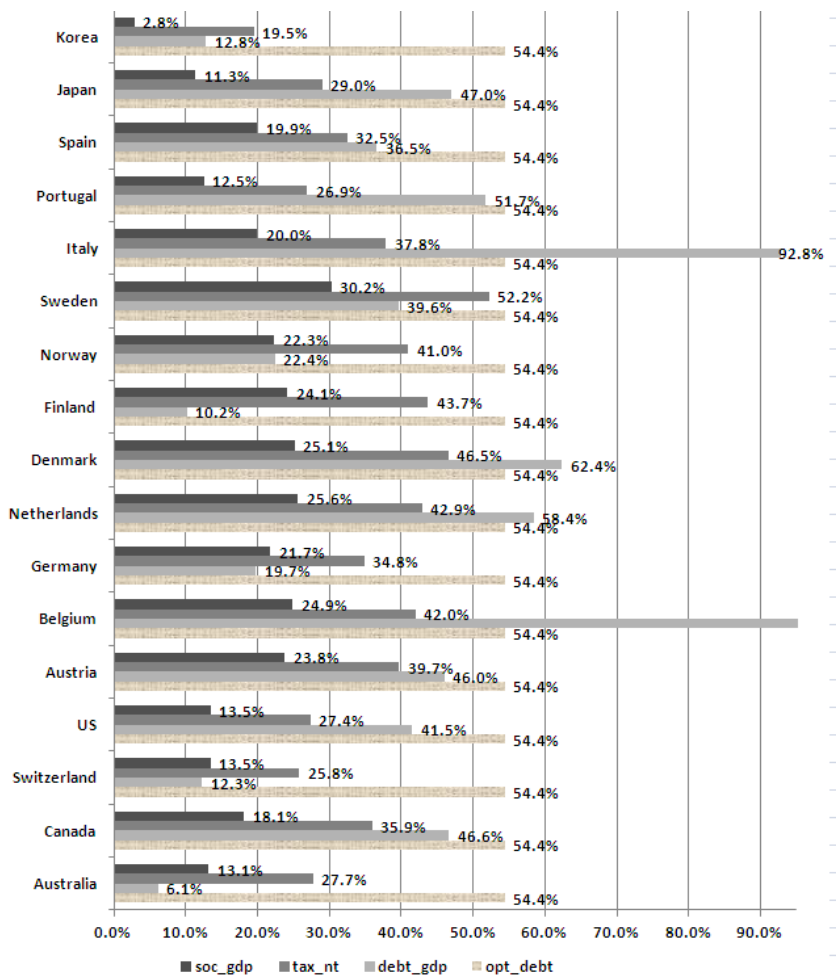
[부그림-5] 공공사회지출, 국민부담률, 정부부채, 적정부채수준 비교 :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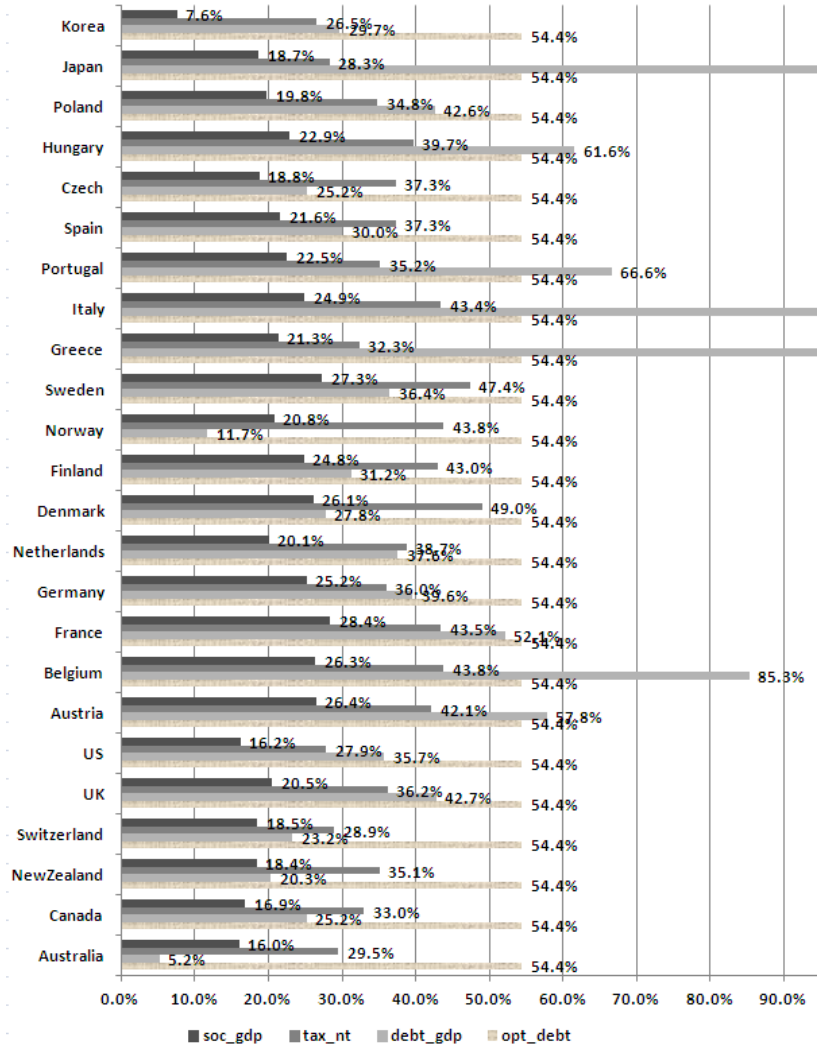
[부그림-6] 공공사회지출, 국민부담률, 정부부채, 적정부채수준 비교 :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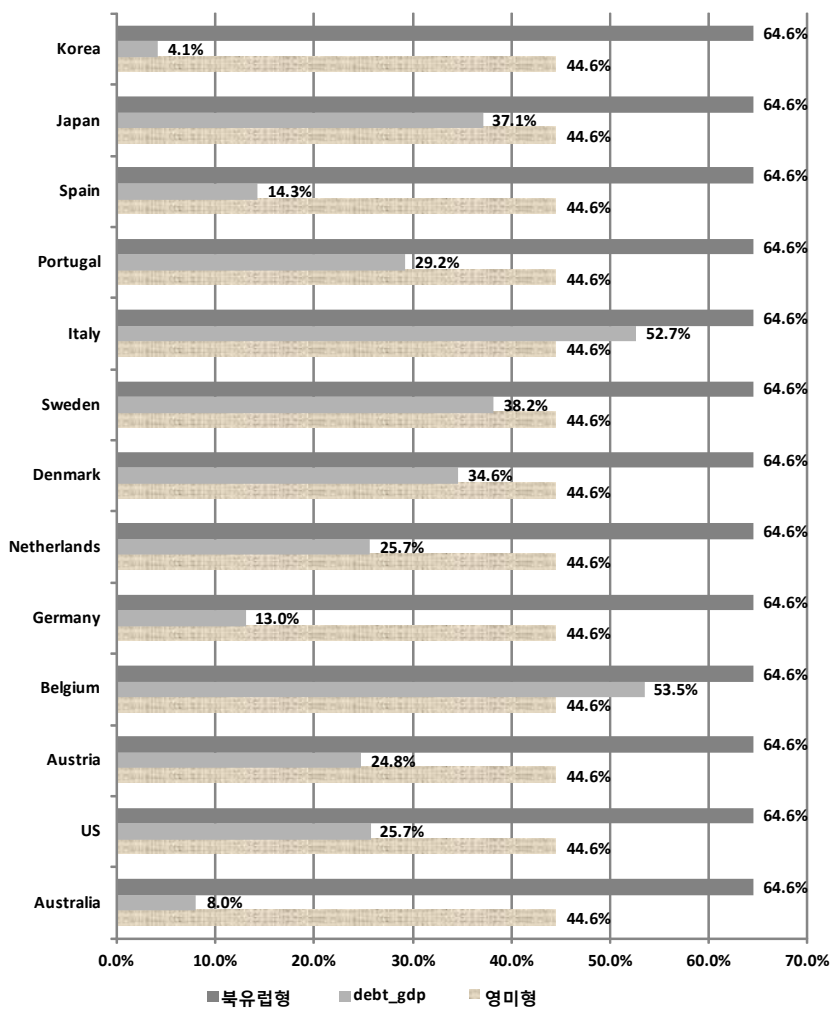
[부그림-7] 공공사회지출, 국민부담률, 정부부채, 적정부채수준 비교 :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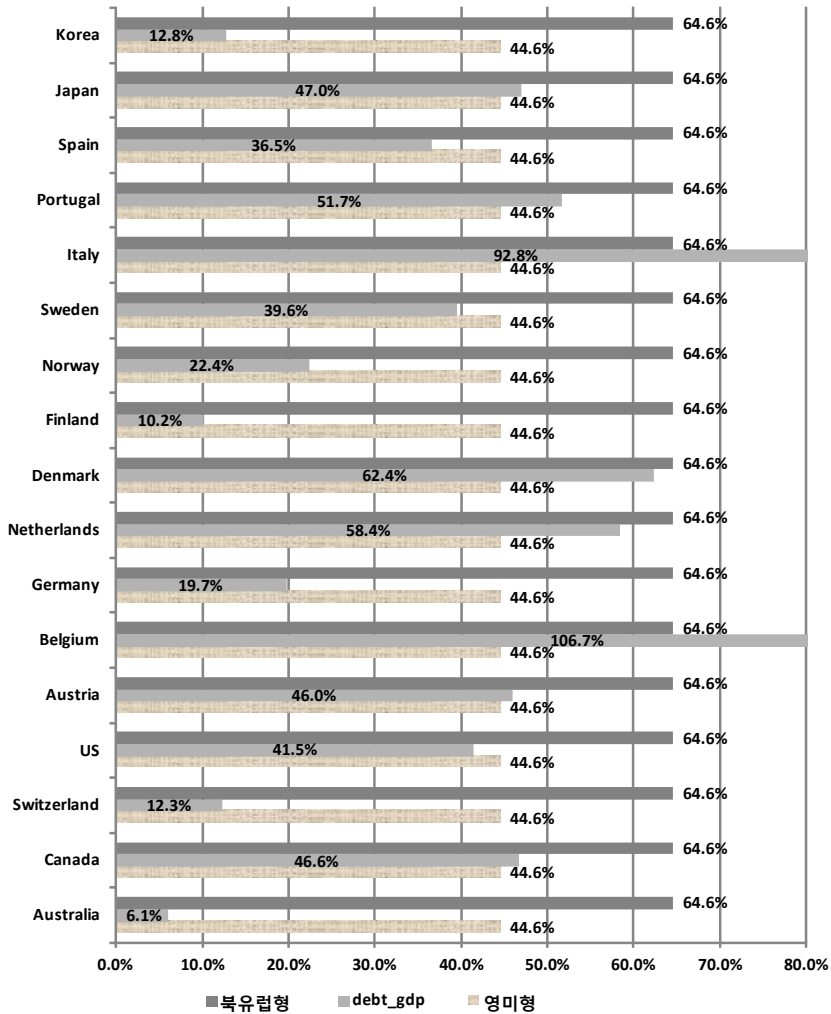
[부그림-8] 공공사회지출, 국민부담률, 정부부채, 적정부채수준 비교 :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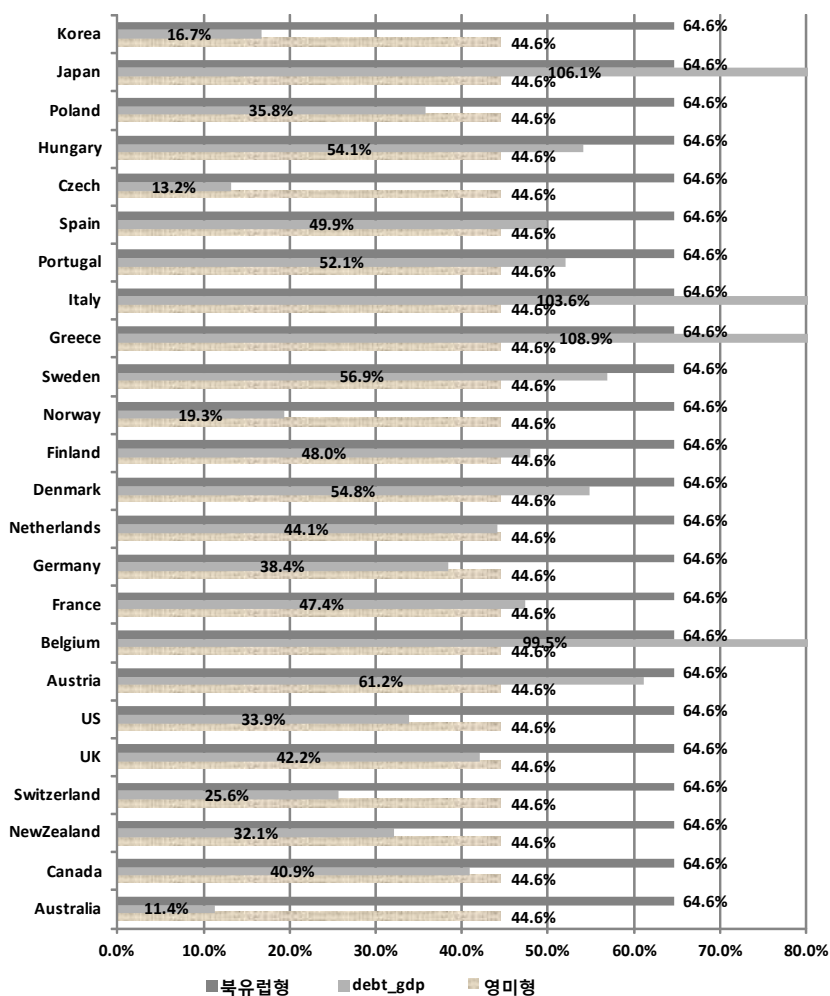
[부그림-9] 북유럽형·영미형 적정부채수준과 국가별 정부부채수준 비교 :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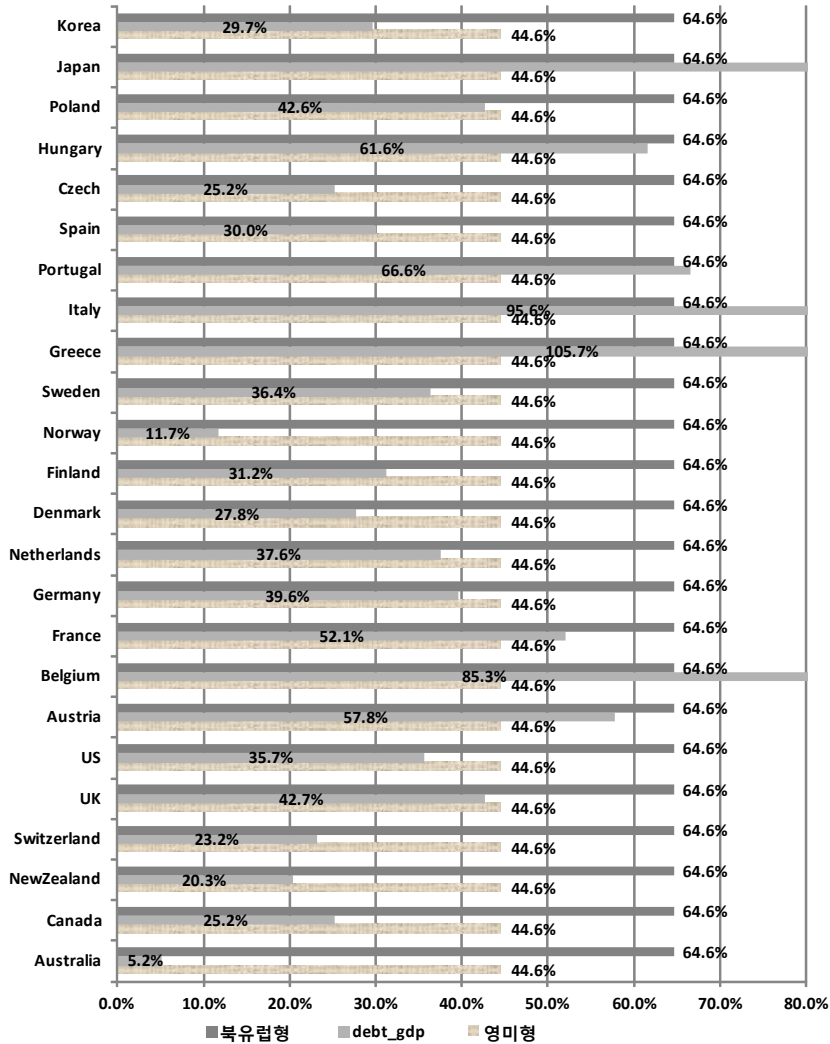
[부그림-10] 북유럽형·영미형 적정부채수준과 국가별 정부부채수준 비교 :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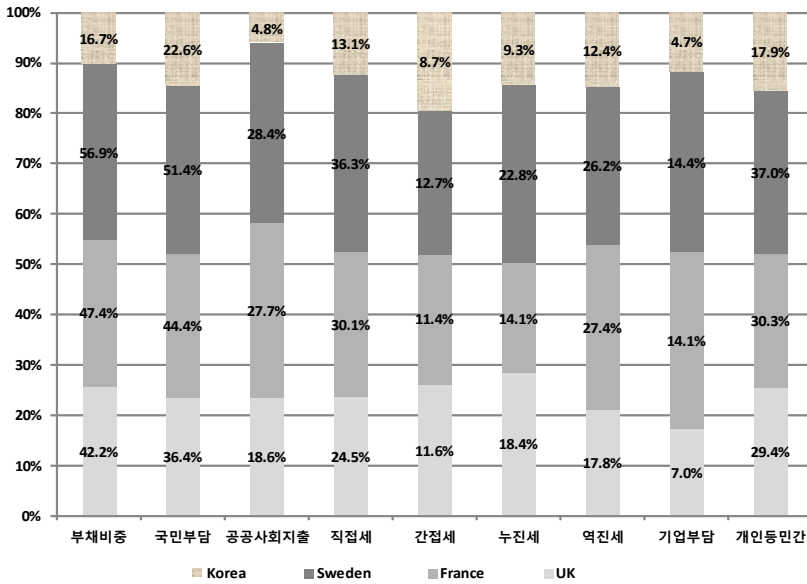
[부그림-11] 북유럽형·영미형 적정부채수준과 국가별 정부부채수준 비교 :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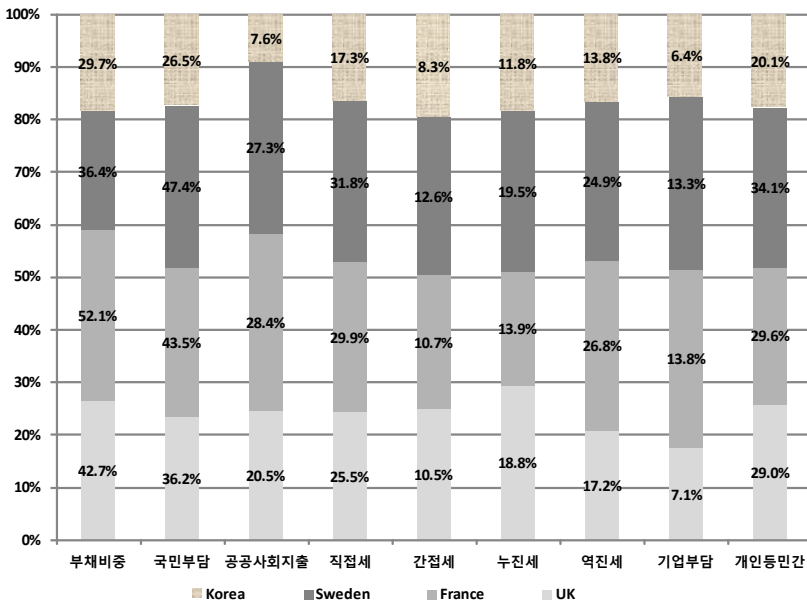
[부그림-12] 북유럽형·영미형 적정부채수준과 국가별 정부부채수준 비교 :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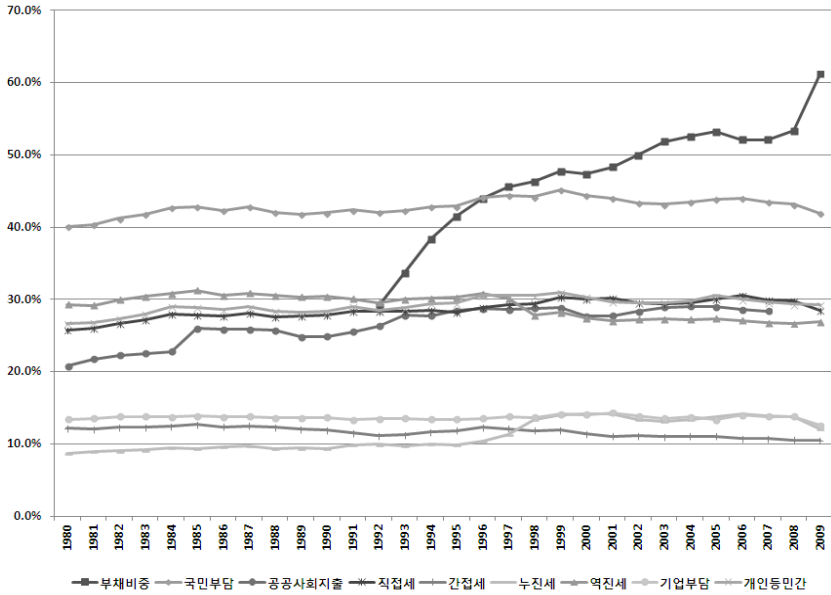
[부그림-13] 한국, 스웨덴, 프랑스, 영국의 국가부채 및 조세특성별 구성 비교 :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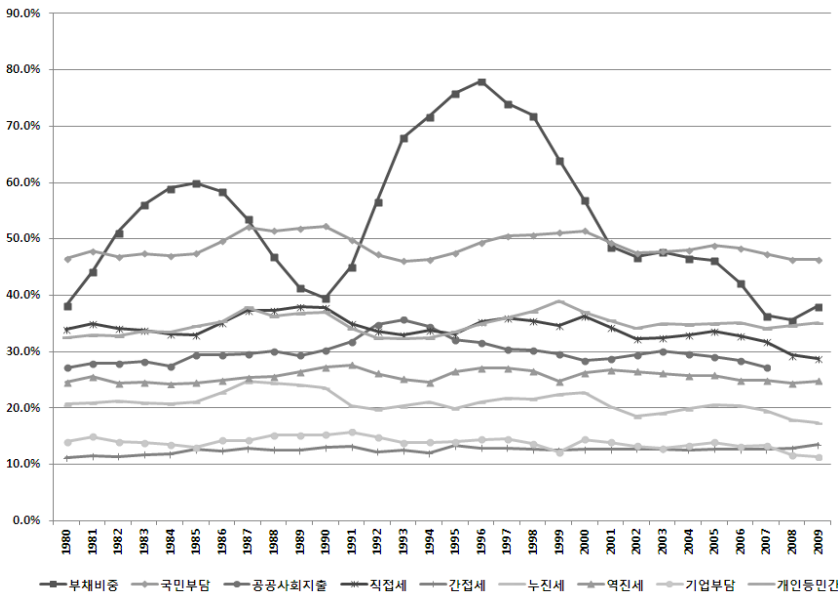
[부그림-14] 한국, 스웨덴, 프랑스, 영국의 국가부채 및 조세특성별 구성 비교 :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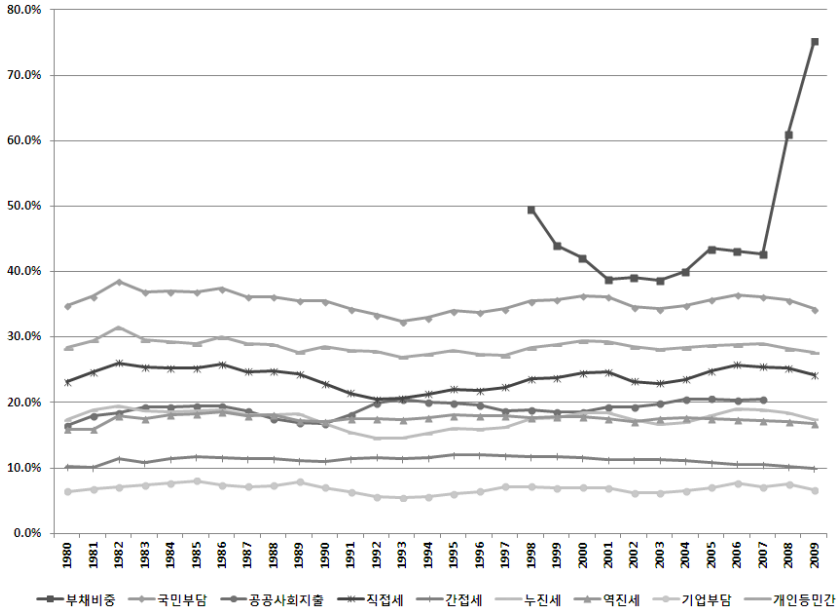
[부그림-15] 프랑스의 국가부채 및 조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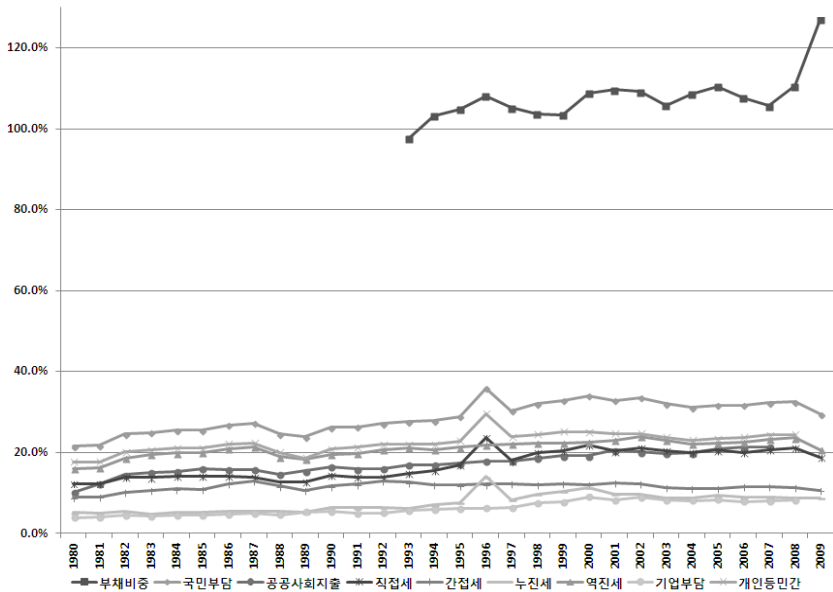
[부그림-16] 스웨덴의 국가부채 및 조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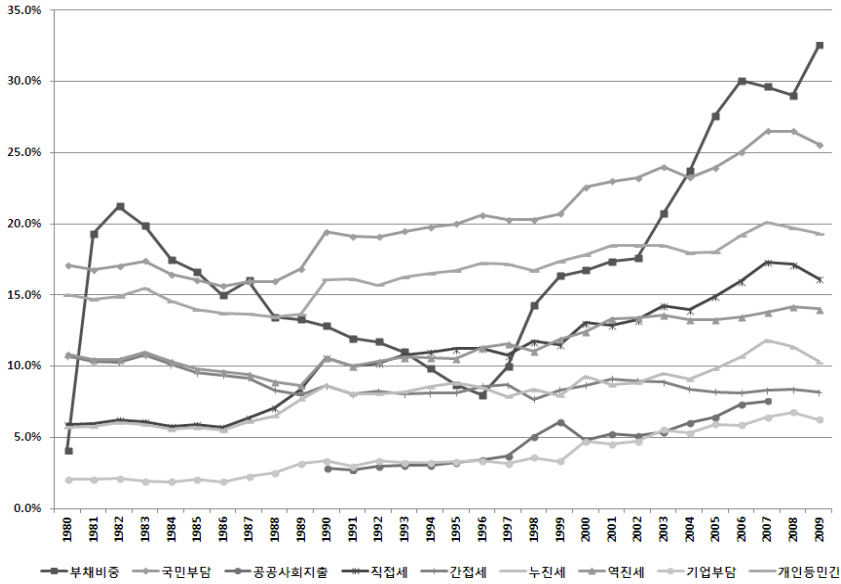
[부그림-17] 영국의 국가부채 및 조세 추이



[부그림-18] 그리스 국가부채 및 조세 추이



[부그림-19] 한국의 국가부채 및 조세 추이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바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패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준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제정의 정책과제	유근준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제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29	장애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해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한호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자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판-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4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42	취약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옥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옥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옥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옥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옥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환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31	현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변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I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개활,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통계조사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립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난임 사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인공수정 대상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제증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현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립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요구필요도측정방식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시장규모추계와활성화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현상의동태적분석을위한지역사례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백세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각국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6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 구축 및 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공적 전달체계 개편 방안: 공적전달체계의 수직적편제와 수평적배열의 재구조화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6년 및 2011년 결과 보고서 -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빈곤정책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II: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한국의복지실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인구집단별생활실태와복지육구의동태분석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주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 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정립 방향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지표·지수 연구	남상호
연구 2012-68	2012년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보고서	김승권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